

法律(消費者)聯盟

WWW. GOODLAW.ORG

(우) 08052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코오롱에스텐 10층 1001호 전화. 02)523-8760 E-MAIL:GOODLAW@GOODLAW.ORG

■ 법률연맹 발표, 국회의원 의정활동(2021.5.30.~2022.5.29)평가 및 헌정대상 수상자 명단

국회의원(21-2) 의정활동 성적은 2년 연속 “D” 학점(68.46점)

그럼에도, 의정활동성적 우수의원 75명(헌정대상)

민생외면, 당리당락으로 원구성 지연하며 개점 휴업하고 있는 국회는 세비를 모두 반납하라
국회는 수치스런 진영대결, 팬덤정치 떨쳐내고, 국민 앞에 민주/법치의 원칙 엄수를 보여라

■ 헌정대상 의원 : 더불어민주당 47명(167명 중 28.14%), 국민의힘 28명(103명 중 27.18%)

■ 지역별 2차년도 국회의원의정활동 성적 1위 전북(81.53점) 2위 세종(76.66점)

최하위 인천(61.35점) 16위 대전(63.82점)

■ 제21대국회 2차년도 12항목 성적 :

- ① 국회 본회의 출석률은 91.26%, 재석률은 70.35% // 출석도장만 찍고 사라져(?)
- ② 국회 본회의 출석률(91.26%) 보다, 낮은 상임위 출석률(87.91%)
- ③ 제21대 국회 전반기(21-1,2.) 법안투표(표결참여)율 : 78.11% 《2차년도의 경우 83.03%》
- ④ 제21대 국회 전반기(21-1,2.) 법안통과율 : 25.33%《정부법안 통과율(52.95%)보다 훨씬낮아》
- ⑤ 대표발의법안 입법성적은 의원당 평균 6.45개 법안만 통과《대안반영폐기 포함》

■ 국회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국정감사법 국감기간 30일 규정, 국회법 상임위 월2회, 소위 월 3회 개최 의무 등 법을 못지킬 때를 대비한 구체적 패널티를 만들어야

■ 본회의 의사정족수를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률을 제고해야

-- 우리나라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60명(5분의1) 이상만 출석하면 회의진행 -- 참고로 미국은 상/하 양원 모두 과반수 이상(2분의1, 우리나라의 경우라면 150명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 개최 가능하다.) 출석해야 가능

■ 국정감사와 같이 대정부질문도 사후점검을 할 수 있는 조직 구축과 결과보고서를 작성 해야

■ 본회의 법안투표를 제고를 위해 충분한 숙려기간 부여와 법안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야

■ 국정감사의 재탕·삼탕 ‘붕어빵’ 의 차단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 일년에 한 번도 회의 개최 안하는 청원심사소위의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 법안을 제안한 의원이 법안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1. 사법/입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제 21대 국회 2차년도(2021.5.30.~2022.5.29.) 국회의원의정활동을 평가항목별로 엄

정하게 자료를 수집, 분석, 평가하고, **우수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아래 표)를 선정하여 발표합니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지역별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의원>>

선거구	인원	수상의원 <가나다 순, 존칭생략>	선거구	인원	수상의원 <가나다 순, 존칭생략>
서울	10	강선우, 김영주, 노웅래, 박성중, 박홍근, 서영교, 안규백, 유경준, 천준호, 최기상	강원	2	송기현, 이철규
부산	5	김도읍, 박재호, 이주환, 전봉민, 최인호	충북	2	이장섭, 임호선
대구	5	김승수, 류성걸, 양금희, 윤재옥, 추경호	충남	2	여기구, 이명수
인천	1	유동수	전북	7	김성주, 김수흥,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광주	1	조오섭	전남	3	서동용, 소병철, 주철현
대전	1	조승래	경북	4	김형동, 김희국, 이만희, 임이자
울산	2	권명호, 서범수	경남	3	서일준, 정점식, 최형두
세종	1	강준현	제주	1	위성곤
경기	14	김경협, 김민기, 김민철, 김성원, 김승원, 김주영, 서영석, 송석준, 이용우, 임오경, 정춘숙, 조웅천, 한준호, 홍기원	비례	11	권인숙, 김경만, 김예지, 서정숙, 신현영, 윤창현, 이종성, 전용기, 정필모, 최혜영, 허은아

<<제21대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헌정대상위원회의 평가기준표>>

평가항목(배점)		2차년도 평점	성적 산출식
01) 본회의(전체) 재석(12)		8.43	○ 재석률X12점 / 재석=개의+속개+산회+출석
02) 상임위원회 출석(10)		8.79	○ 출석률X10점
03) 법안표결 참여(18)		14.94	○ 표결참여율X18점
04) 법안통과율(10)		2.53	○ 법안통과율X10점 2년간 본회의 가결 대표발의/대표발의건수
05) 발의 법안 통과 성적 (30)	A) 대표발의(20)	12.35	① 가결된 대표발의법안 1개X4점 ② 대안반영폐기된 법안 중 대표발의 법안 1개X2점 ③ 대표발의지만 단순용어 순화 등 문제 법안 1개X1점 ①+②+③ 합산한 점수를 최대 20점까지 인정함.
	B) 공동발의(10)	9.81	① 가결된 공동발의법안 1개X0.5 ② 대안반영폐기된 법안 중 공동발의 법안 1개X0.5점 ①+② 합산한 점수를 최대10점까지 인정함.
06) 국정감사 현장출석(3)		2.83	○ 100%는 3점, 90%이상~100%미만 출석 2점, 60%이상~90%미만은 1점, 60%미만은 0점
07) 국정감사 우수의원(17)			○ 국정감사우수의원상(위원장상) 수상시 17점 ○ 상위 50%까지 준우수의원(위원장)으로 12점
08) 대정부질의 가점(+2점), 0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준에 따라 -2점~2점)			
10) 윤리특별위원회 감점(감점해당자 -3점) 11)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기준에 따라 -3점~3점)			
12) 상임위원회 소위활동(6회 이상 회의 소위만 기준에 따라 0점~5점)			

2. (1) 이번 평가에서 **4선 이상 다선의원** 중 ‘**헌정대상**’ 수상자는 김영주(민), 노웅래(민), 안규백(민), 이명수 의원(국) 4명뿐이었고, 국회의원(21-2) 전원의 의정활동(12분야) **종합 성적은 ‘D’학점(68.46점)**입니다.
- (2) 의정종합평가의 교섭단체별 분석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평균 **71.11점**으로 **국민의힘(65.50점)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이는 예산안, 추정처리, 검수완박법 등 절대 다수의 힘에 의지한 의사진행의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 (3) 의원10명<실제 2-3명이 주도> 정도로 구성되는 ‘**법안심사소위**’ 만 통과되면 **상임위-법사위-본회의**까지 그대로 **거의 토론없이 통과**시키는 관행은 국민을 위한 법보다 정치적 야욕에 치중할 수 있는 망국적 **입법악폐**입니다.
- (4) **국회의원 감싸기 - 국회윤리특위** 전체회의 3차례 총 59분, 소위는 개점휴업 상태 - **2차년도 의원징계안 9건 중 사실상 1건도 처리하지** 안았습니다.
- (5) 국회(21-2) **예결산특위는 무려 604.4조 예산을 51시간 만에 졸속심사 - 예산심사로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만 3차례 했습니다. 정밀한 예측과 예산통제를 위한 **미국 회계감사원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나, 감사원 국회이관**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6) **국회 본회의**는 통법부로 전락하여, **1,510건 중 찬반토론은 43개에 불과하여** 국회법 제93조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는 조항이 무색했습니다.
3. 이번 조사를 총괄한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김대인 총재는 **(1)** “다수의 전횡이 아닌 **소수자 보호의 대화와 타협**이 꽃피는 국회, **(2)** 견제와 균형의 삼권분립 원칙에 충실한 국회, **(3)** 국회 4대 기능회복 등 **헌법기관의 역할**을 다하는 국회가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또한 **국회가 정의로운 법**을 만들려면 우선 **전문성 제고와 충실한 토론**이 필요하며, 전문위원과 다양한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애국심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며, 법안의 **내용도 모른 채 투표**를 하는 **통법부 관행**은 즉시 철폐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하 3-147 쪽 까지》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 대국민보고서
 --- “**법률소비자연맹 홈페이지**” (www.goodlaw.org) 참조 요망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전화. 02) 523-8760~7 goodlaw@goodlaw.org 《문의 : 홍 금 애 실장 / 윤 소 라 부장》

①국정감사 “현장모니터링의” 법적근거와, ②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③헌정대상 등 의정감시의 “7종 국익(國益)기능”

① 국감현장모니터링은 **국민주권 원리, 헌법(제50조)국회법(제75조)국감조법(제12조)**에 근거한 **의사공개원칙**에 따른 권리다
 ② 대학생단체 등 270개 NGO연대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24년된 국감모니터 전문단체이며, 그 주관
 단체인 ③ **법률소비자연맹**은 32년된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NGO/NPO로서, **국회사무처(유인태/하단참조)**가
방해 하여도, 이미 지난 십수년 동안 ‘**온라인 모니터만**으로’ 시행해온 의정종합평가(**대한민국 헌정대상**)가
 국내외적으로 **정착**<미국/일본/영국 등의 NGO/국회의원/교수/변호사들의 롤 모델이 됨>되었듯이, **현장 모니터**
 방해에도 모니터/평가는 할 수 있다. 다만 모니터 방해는 **7종 국익기능**을 저해시키는 **반국익/반민주** 행태다.

1. 국회(의원)의 민주성 상징 --대한민국 국회엔 24년<주관단체는 32년>동안 “**단 한번의
 공정성 시비없이**” <혹간 편향/비방보도는 법적/윤리적 근거없는 **가짜뉴스**로 즉시 드러나곤 함>
 국회 의정활동을 **공정하게** 모니터/평가 해온 **헌정대상(의정종합)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활동, 즉 **시민의 권력 감시**가 실질적으로 작동된다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자
 랑(공지)이며 **당당한 민주성 상징**이 된다.

2. 국회(의원)의 존재감 회복 --국민들은 TV등 언론을 통하여 **국회의원들이** **쌔칠하**
는 것만 보다가, 우수한 스펙을 가지고, 국민민복을 위하여 국정을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서, 청년/대학생이나 시민(대표)들이 비로소 **국회의원의 노고와 국회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되고, 더 나아가 **국회(의원)**와 **국가**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가 형성되게 된다.

3. 국감위원의 긴장감 조성 --감사현장에 **NGO대표가** **불참한** 2020~21년도 국감
 은, 텅빈 감사위원석, 짧은 국감일정-형식적 소화, 국가존망과 민생외면, 부정부패를 비호/
 감싼다는 의혹속에 **여/야간 막말과 난장판이 연출되었는바**, **NGO의 현장모니터는 유권자**
가 지켜보고 있다는 긴장감속에 충실감사를 하도록 압박하는 기능이 매우 크다.

4. 피감기관의 긴장감 조성 --피감기관이 **국감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모르쇠**’
 답변이나 ‘**불성실하게 버티기**’ 답변을 하기도 하고,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때 감사현장에서 **시민단체(NGO모니터단)**가 **피감기관을 지켜보고 있다**
 는 것만으로도, **피감기관을 긴장케** 하여 **겸손하고 정직하게 수감하게** 만든다.

5. 법치주의를 지키는 기능 --권력은 부패하는 속성이 있고,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
 패한다<Sir. Acton> **권력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예방/척결하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를
시민단체들이 모니터/평가/공개하는 것은 **법치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권리요 책무다.

6. NGO 정책과 국정 협치 --**시민사회단체(NGO)**가 국정감사 현장에서 확인되는
 국정상황을 이해하여, 국가사회의 거버넌스(**Governance**)적 **정책개발과 건전한 비판**과
 협력을 할 수 있게 된다. **UN이 정부(GO)의 주장만이 아닌, 비정부 민간기구(NGO)를 제**
도적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공동발전을 위한 협동원리이며 거버넌스(협치)인 것이다.

7. 시민 대학생들 정치학습 --청년/대학생 및 시민들이 국감현장을 직접 보고 민주
 주의와 법치주의를 학습하게 된다. **정해진 룰(rule)에 따라 국정현안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을 들으며, 나라사랑/나라걱정을 하게 되는 등 **민주정치 체험학습**을 하게 된다.

유인태(전 국회사무총장)가 조폭·홍위병 같은 폭력·직권남용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은 물론 헌법·행정법·국
 회법 등을 위반(2019.10.1.---)하며, 24년 전통의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과 32년 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을 모함·
 출입통제 등 만행을 자행! **공개사과가** 없다면 손해배상과 업무방해 등 **민·형사적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21-2), 국회의원 의정활동 종합평가 대국민보고서

정치적 중립, 전문성을 담보한 의정종합 평가기관 법률소비자연맹 조사 / 분석 / 평가

《 목 차 》

■ 헌정대상 등 의정감시의 “7종 국익기능”	4
--------------------------------	---

제1부 제21대 국회 2차년도(21-2), 헌정대상 수상의원 및 의정활동 성적	8
---	---

I. 국회의정활동 조사·평가 개요	8
1. 목적 및 취지	8
2. 조사과정	9
3. 평가대상 기간 및 국회	9
4. 평가 대상의원	10
※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기준 설정의 배경	10
5. 21대 국회 2차년도 평가 기준	10

II. 선진 국회 의정활동을 위한 법률소비자연맹의 제언	11
1. 국회부터 법 지키고, 지키지 못할 법·규정은 서둘러 개정해야	11
2. 의사정족수를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률을 제고해야	12
3. 대정부질문의 사후점검을 할 수 있는 조직 구축과 결과보고를 해야	12
4. 법안심사과정에서의 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민간전문가의 활용	13
가. 검토보고서 통일화	13
나. 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전문가인력 풀(Pool)구성 필요	13
다. 소위 법안심사시 정부의견은 참고사항만 되어야	14
5. 법안투표율 제고를 위해 법안에 대한 정보 제공 충실해야	14
6. 국정감사의 재탕·삼탕·붕어빵'화 차단해야	14
가.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끝까지 파헤쳐'붕어빵'국감이 되지 않게 해야	14
나. 국정감사법 제2조 준수(정기국회 전 30일), 원칙 못지킬 것이면 개정해야	15
다.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생산적으로	15
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부실, 지연 근절	16
마. 적절한 피감기관 선정으로'수박 겉 핥기'식 국감 종식	16
7.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장기 계류를 없애고 신속 심사해야	16
8.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의 효율화와 활동 강화	17
가.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의 법안심사소위 참여/진술권 보장	17
나. 첨예한 대립이 있는 법안의 경우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음	17
다. 국회 보좌진이나 전문가의 진술권 보장	17
라. 회의수와 회의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함	18
마. 청원소위 충실화	18
바.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법마련 절실	18
사. 충실한 결산심사를 위한 시간 확보	18

Ⅲ. 제21대국회 2차년도(21-2), 헌정대상 수상의원 및 분석	19
▣ 헌정대상 수상의원 (다선, 가나다순)	19
1. 정당별 수상의원	21
2. 성별 수상의원	21
3. 당선횟수별 수상의원	21
4. 선거구별 수상의원	22

Ⅳ. 제21대 국회 2차년도(21-2)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균성적 : 68.46점	22
1. 의정활동 종합성적 : 68.46점	22
2. 교섭단체별 성적 : 더불어민주당 성적이 71.11점으로 높아	23
3. 당선횟수별 분석 : 재선의원의 성적이 72.14점으로 가장 높아	23
4. 선거구별 : 전라북도가 81.53점으로 높아	24

제2부 제21대 국회 2차년도(21-2),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 26

I. 제21대 국회2차년도(21-2), 본회의 재석률 성적 : 12점 만점에 평균 8.43점	26
1.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 본회의 국회의원의 출석·재석현황(총115회)	26
2. 국회의원의 본회의 총115회 출석/재석체크 결과, 평균 재석률 70.35%	27
3.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재석(在席)은“입법·재정통제·정부견제 책무”의 이행이다.	28
4. 법률소비자연맹 분석, 제21대 국회 2차년도 의원의 본회의 재석률 통계	29
가. 지역별 2차년도 본회의 재석률 1위 국회의원	29
나. 제21대 국회 본회의 2차년도 재석률 통계 분석	30
5. 제21대 국회 2차년도 본회의 출석, 개의, 산회시 분석	33
가. 제21대 국회 2차년도 본회의 출석률이 100%인 의원은 58명	34
나. 본회의 시작(개의) 시각을 비교적 잘 지킨 의원 12명	34
다. 회의 종료(산회) 시각에 자리를 잘 지킨 의원은 8명	35
6. 본회의 중에 출석하지 못한 사정이 많았던 의원	35
가. 청가서(결근 사유서)를 많이 제출한 의원 : 10회 이상 5명	35
나. 본회의 중에 출장을 간 의원 : 7회 김경협 의원 등 10명	36
7. 제21대 국회 2차년도 본회의 개항 : 본회의 횟수는 대폭 줄어 38회 불과 감정싸움으로 18개 장내 소란	37

Ⅱ. 제21대국회 2차년도(21-2),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 10점 만점에 8.79점	40
1. 16개 상임위원회 319회 전체회의 조사	40
2. 상임위원회 회의시간 및 출석률 조사결과	41
3. 상임위 출석은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무	42
4.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분석	42
5. 제21대 국회 2차년도 상임위 전체회의 현황	45

Ⅲ. 제21대국회 전반기(21.1~2),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율 (2차년도는 18점 만점에 14.94점)	54
1. 전반기 전자표결 1510회 전수조사	55
2.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율 분석	56
3. 법안표결에 있어서 법안정보 충실화 긴급	57

4. 제21대 국회 전반기 4선이상 다선의원 법안투표율 순위	57
5.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율 세부 분석	58
IV. 제21대 국회 전반기(21,1~2) 법안투과율 분석	65
2차년도의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점수 : 20점 만점에 12.35점	
2차년도의 통과된 공동발의 법안 점수 : 10점 만점에 09.81점	
1.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실적 및 전반기 통과율 분석	65
2. 실적쌓기가 아닌 민생을 위한 법안 발의 필요	67
3.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의 통과율 분석	67
가. 제21대 국회 전반기 의원발의 대표법안의 통과율 총괄	67
나. 교섭단체별 현역의원 대표발의법안의 통과율 분석	68
다. 당선횟수별 현역의원 대표발의법안의 통과율 분석	69
다. 지역별 현역의원 대표발의법안의 통과율 분석	69
마. 비례대표 의원의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안통과율	70
4.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대안반영폐기법안 포함)된 법률안 통계 분석	70
가. 현역 의원의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수 분석	70
나. 통과된 대표발의법안 0건 의원 : 김웅 의원 등 11명	70
다. 당선 횟수별 대표발의 법안 건수는	71
라. 지역별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수	72
마.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건수 상위의원	73
5. 제21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개황	74
가. 전체 14,144개 의원발의 법안 중 3,571개만 통과(대안반영포함)	74
나. 제21대국회 첫날(2020.6.1.)제출된 55개 법률안 중 3개 법률안만 수정가결	75
V. 상임위 소위 활동 : 총 256회 회의실태 조사	76
1. 상임위 전체회의 소위 전수 조사	76
2. '법안심사'의 핵심 관문이며, 실질적 입법 결정과정인 법안심사소위의 실태 분석	77
3.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국회의원 평균 출석률 순위	78
4.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현황	79
VI. 제21대 국회 2차년도(21-2) 기타 주요 의정활동 실적	88
1. 21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 : C-학점	88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자료를 토대로 해	
국정감사 현장출석 3점,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및 준 우수위원 평가	
가.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의 성적은 C-학점	94
나. 국정감사 질의 횟수 및 질의응답 시간	104
다. 눈에 띈 국정감사 쟁점과 상임위 국감 요약	109
2. 국회의원 윤리특위 활동 : 처리건수'0'건으로 위원장, 간사, 위원 감점	130
가.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역사	130
나. 제21대 국회 2차년도 윤리특위 구성	130
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윤리특별위원회 첫회의	131
라. 윤리특위의 회의와 처리건수	132
3. 제21대국회 2차년도(21-2), 대정부견제기능 형해화 : 대정부질문 축소/정쟁의 장	133
가. 제21대 국회 2차년도 대정부질문 : 정책질의보다는 여/야간 공방전으로 전략	134
나. 제21대 국회 2차년도 대정부질문 현황을 살펴보면	134

다. 대정부질문의 충실화와 언론과 NGO의 상시적인 국회의정모니터링이 필요	135
라. 제21대 국회 2차년도 대정부질문 주요 현황	13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예산안 법정시한 간발차 미준수,	138
추경심사만 3차례 -- 예산종합질의 및 부별 심사 우수의원은 가점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야당 시대	139
나. 제21대 국회 2차년도 예결위 구성	139
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예결위 활동	140
총 133시간 35분(1차년도 121시간 32분) 회의, 출석률은 87.13%	
3건의 추경, 1건의 결산, 1건의 예산안을 처리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구성과 활동	142
마. 2022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 7회	142
바. 예결위 예산심사 가점의원 선정	143
5. 21대 국회 2차년도 특별위원회 : 출석·회의성과에 따라 가점과 감점	143
가. 특별위원회 활동 총괄	144
나. 2차년도 특별위원회별 활동 요약	149

국회의원 헌정대상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적으로 계량화하여 분석·평가하는 모델을 세계최초로 개발하여, 제21대 2차년도 국회의원의 의원성적을 12개 항목의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하였고, 이념이나 정파를 떠나, 묵묵히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해 온 의원들을 선정·발표한다. 제21대 국회 제2차년도 **국회의정 종합평가회 및 헌정대상 시상**은 이러한 감시·평가활동의 결과로 유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격려를 보냄으로써, 제21대 국회 3차년도에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유도하고, 민생·경제발전과 국민행복국가 건설을 위하여, 사법부·행정부 등 국가 5부를 견제·견인하여 충실하게 만드는 데 있다.**

제1부 제21대 국회 2차년도(21-2),

헌정대상 수상의원 및 의정활동 성적

I. 국회의정활동 조사·평가 개요

1. 목적 및 취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얼마나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는지를 계량화하여 제대로 분석·평가하는 것은 유권자인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임.

국민의 대표들이 얼마나 성실하고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국회 회의출석, 법안 발의,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 대정부통제기능 수행, 예산통제(예결 활동)수행활동 등 12개 평가분야로 나누어서 조사하고 이를 최대한 계량화 하고,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하여 공천기준 등 국회의정활동 종합평가의 자료로 활용. (소위 국회의정활동의 ‘짜통상’을 추방하고, 유권자들에게 최고 정밀한 유권자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임.)

2. 조사과정

- (1) 국회 본회의 복합재석률 및 상임위원회 출석률, 법안투표율 등은 국회 회의록을 기본으로 하여 국회공보, 전문위원의 회의결과보고서, 국회회의 경과보고서 등도 참고하여 조사를 하였고, 국회 회의록에는 결석의원이 명시되지 않는 관계로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변동시(사·보임시)에는 수작업을 통해 사·보임 여부를 확인작업을 하였다.
- (2)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내용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였고, 예산결산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인지 여부를 국회 회의록 등을 통해 정밀 분석하였다.
- (3) **코로나19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연인원 1천여명이 온라인에서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출석현황은 국회공보와 회의록을 통해 재확인 조사를 하였다.
- (4) 대정부질문의 경우에는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을 통해 질의 답변 내용을 모니터링하였고, 국회 회의록을 통해 질문하는 의원들의 질문내용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병행하였다.
- (5) 대표법안 및 공동법안 발의 수는 제21대 국회 2차년도에 가결된 법안과 그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져 폐기된 법안의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를 조사하여 통계화하였다. (다만, 법안통과율은 21대 국회 전반기를 기준으로 하였음)
- (6)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활동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소위원회 위원 등의 개선 현황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 홈페이지 안내와 국회공보와 위원회 전체회의 내용을 통해 일부 확인하였다.

3. 평가대상 기간 및 국회

2021. 5. 30. ~ 2022. 5. 29. (제388회 임시국회 ~ 제397회 임시국회)

4. 평가 대상의원

제21대 국회의원직을 수행하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이후 입성한 국회의원**과, 2차년도에 6개월 이상 국무위원을 겸임한 의원을 제외함 <당적 및 교섭단체별 통계는 2022. 5. 29. 현재 기준으로 하였으며, 개별평가에서 다른 기준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혔음>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기준 설정의 배경]

1. 지난 제19대 국회의 첫해(2012)부터 평가기준을 안내하였고(2011. 종합평가시작), 국정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최대한 객관적 지표를 산출하여 공정한 평가를 하고자 수차 국회의원·보좌관, 국회출입기자, 법·정치분야 등 전문가들과의 자문과 토론을 거쳐 기준을 설정하였음.
2. 국민대표, 입법, 예산, 정부감시견제 등 국회의 기능을 집약적으로 행사하는 국정감사의 비중을 생각할 때, 평가비중은 50%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비율이 25%정도 이므로, 75%<225명>의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지 못하는 국회의원과 형평을 고려하여 17점으로 하고, 50%이상 국회의원은 준 우수의원으로 12점을 배점함.
3. 국회의원의 입법권은 국회 기능의 핵심으로 발의법안에 대한 표결참여 등은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바, 자신이 대표발의 또는 공동발의한 법안의 표결과정에 불참, 기권, 반대하는 경우에는 엄중한 감점을 부여함으로써 입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4. 법안발의 건수에 있어, 유사법안, 폐기법안의 재활용 등 법안발의의 남발이 새로운 국회 내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다수의 지적에 따라 일정 건수 이상에 대해서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기로 함.
5. 평가기준은 과거의 의정활동 평가보다는 미래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제시에 역점을 둬.
6. 대정부질문과 예결특위의 경우 회의 안건과 관련 없는 질문을 지양하도록 하기 위해 질문 내용을 모두 분석하여 평가에 반영함.
7.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은 회의록을 기준으로 하여 활동유무와 출석률 등을 평가에 반영함.
8. 제21대 국회 1차년도(2021년도 헌정대상)에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견제하려는 국민의힘 간의 대립으로 야당없는 국회회의가 빈번히 이루어진 것을 일부 감안한 바 있음.

5. 21대 국회 2차년도 평가 기준

국회의원실에 제1차년도에 두차례 공문을 통해 평가기준 등을 사전 안내하였으며, 종합 평가기준 및 배점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제21대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헌정대상위원회의 평가기준표>>

01) 본회의(전체) 재석(12)	○ 재석률X12점 / 재석=개회+속개+산회+출석
02) 상임위원회 출석(10)	○ 출석률X10점
03) 법안표결 참여(18)	○ 표결참여율X18점

04) 법안통과율(10)		○ 법안통과율X10점 2년간 본회의 가결 대표발의/대표발의건수
5) 발의 법안 통과 성적 (30)	A) 대표발의(20)	① 가결된 대표발의법안 1개X4점 ② 대안반영폐기된 법안 중 대표발의 법안 1개X2점 ③ 대표발의지만 단순용어 순화 등 문제 법안 1개X1점 ①+②+③ 합산한 점수를 최대20점까지 인정함.
	B) 공동발의(10)	① 가결된 공동발의법안 1개X0.5 ② 대안반영폐기된 법안 중 공동발의 법안 1개X0.5점 ①+② 합산한 점수를 최대10점까지 인정함.
06) 국정감사 현장출석(3)		○ 100%는 3점, 90%이상~100%미만 출석 2점, 60%이상~90%미만은 1점, 60%미만은 0점
07) 국정감사 우수의원(17)		○ 국정감사우수의원상(위원장상) 수상시 17점 ○ 상위 50%까지 준우수의원(위원장)으로 12점
08) 대정부질의 가점		○ 대정부질의 목적에 맞게 가장 잘 질의한 경우 +2점
0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예결특위에서 예결관련 질의를 잘한 의원의 경우 +2 ○ 출석 70%미만인 경우 -1점, 50%미만인 경우 -2점 ○ 예결간사는 2점 가산
10)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 국회윤리위 상정시 -3점 (단, 징계안 발의자가 15인 이상이고 윤리위에서 한 번 이상 안전으로 상정되어 회의를 한 경우에 한함) ○ 윤리특위의 심의결과가 없는 경우 윤리특위 위원장과 간사들은 -3점
11)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 비상설특위의 경우 1달 1회이상 회의를 하고, 의결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 및 간사는 3점, 출석률이 75%이상인 구성의원 모두에게 +2점, 15회 이상 회의를 한 경우 위원장과 간사의원 +1 ○ 비상설특위의 경우 아무런 의결사항이 없고 회의의무일수(1달 1회)의 50%미만의 회의만 한 경우에는 위원장 및 간사는 -3점, 구성의원은 -2점 ○ 감점은 없으나, 출석률이 50%미만인 경우 -2점, 70%미만인 경우 -1점 ○ 가점과 감점은 3~-3 사이에서 함.
12) 상임위원회 소위활동		○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는 6회 이상 회의를 한 소위원회 의 구성원들에게 가산점. 회의기간 60%이상 재직 중일 때에 100% 출석은 5점, 90%이상은 출석 4점, 80%이상은 3점, 70%이상은 2점, 60%이상은 1점, 60%미만은 0점. 재직기간이 50~60%인 경우 100%출석이면 2점. ○ 가산점은 최대 5점까지만 인정

II. 선진 국회 의정활동을 위한 법률소비자연맹의 제언

1. 국회부터 법 지키고, 지키지 못할 법·규정은 서둘러 개정해야

국회 상임위원회 상설소위 설치규칙은 지난 1998년부터 제정되어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규정과 현실이 따로 놓고 있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신중해야 하는 예가 되는 사건이 있다. 2014. 2. 10. 국회의원 270명이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고발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저작권법상의 친고죄 조항을 2006년 비친고죄 조항으로 졸속 개악한 것의 영향이었는데, 이로 인해 연간 150만명이나 되는 국민이 법파라치들로 인해 고소고발을 당하고 합의금을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는 등 고통받고 있음에도 국회는 침묵하고 있다. 신속히 저작권법 침해범죄를 친고죄조항으로 환원 개정해야 한다.

국회법에 상임위원회는 월 2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는 월 3회 개최하라고 되어 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2. 의사정족수를 강화하여,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률을 제고해야

국회의원의 재석률을 보면, 거의 낙제 수준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 대한 국회의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의사정족수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국회법 제73조가 정하고 있는 의사정족수가 재적의원의 5분의 1이상으로 한 것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전체 300명 국회의원 중 60명 이상만 출석하면 회의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헌법 제1조 제5절 제1항에 상하 양원 모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것에 비하면 의사정족수가 매우 낮다. 1960년에는 1/3이상으로 했다가 1988년 1/4로 완화하였고, 1997년 또 다시 1/5로 완화했다.

3. 대정부질문의 사후점검을 할 수 있는 조직 구축과 결과보고를 해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의원들은 한번에 13명, 12명씩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상대로 많은 질문을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후점검을 하는 조직이 없다. 개별의원실에서 할 것인지 정당차원에서 할 것인지, 국회 사무처 차원에서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여 실효성있는 대정부질문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

또한, 대정부질문이 ‘카더라’ 식의 가짜 뉴스를 생산해 내는 절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질문의 내용과 답변 그리고 사후적인 조치나 대책을 점검하는 조직이 있어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나면 그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나오도록 되어야 한다.

4. 법안심사과정에서의 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민간전문가의 활용

가. 검토보고서 통일화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작성에서 위원회별로 다르고 법률안별로 달라서 작성 기준이나 원칙이 없고, 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필수적으로 듣고 있으나, 보고내용에 있어서는 요약보고를 하고 있어 시민들이 법안의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 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와 전문가인력 풀(Pool)구성 필요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과 학위, 경력을 분석해 본 결과,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의 상임위원회 순환보직과 상임위원회 관련 전문성을 입증할만한 자료들이 부족하여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외부전문가나 전문가단체 풀(Pool)을 구축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 소위 법안심사시 정부의견은 참고사항만 되어야

국회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동등한 자격을 가진 의원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를 위한 구속력 있는 법을 제정하는 회의체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소관 정부부처의 실무자들의 의견에 좌지우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상임위 소위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반대하는 경우에는 계류되거나 대안반영폐기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국회는 정부입맛에 따른 통법부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의견서만 내고 회의에 참석하지 말고 국회에서 필요할 때만 불러 질문을 하든지, 발의 국회의원의 제안설명을 강화하는 것이 더 절실히 요구된다. 그렇게 되면, 법안발의에 대한

국회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다.

5. 법안투표율 제고를 위해 법안에 대한 정보 제공 충실해야

법안투표율 제고를 위해서는 본회의 전에 국회의원들이 법률안에 대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법안심사에서도 숙려기간을 부여 하거나, 최소한 어떠한 법률안이고 이에 대한 심사과정이 어떠한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법안의 의결과정인 상임위 소위 심사·의결, 상임위 전체회의 심사·의결,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의결, 국회본회의 의결과정에서 유일하게 법률안의 찬반 여부가 실명표시되는 것은 국회 본회의과정 뿐인데, 법안표결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라도 국회 본회의 전에 의결할 법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국정감사의 재탕·삼탕 ‘붕어빵’ 화 차단해야

가.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끝까지 파헤쳐 ‘붕어빵’ 국감이 되지 않게 해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질의한 의원이 그 내용이 시정되었는지를 직접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실명제’를 도입하고, 복합적 이슈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의 ‘시정조치팀’가동, 국회내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시정조치 사항 이행을 ‘실효적으로 평가하는 조직 구성’ 등 국회가 제도개선을 통해 국감지적사항을 묵살해온 30년 국정감사의 적폐를 근절시킬 것을 촉구한다.

시정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반복된 ‘붕어빵’ 국정감사가 되고 있는 것은 피감기관이 국정감사기간만 지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로 대처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국정감사위원이나 감사반장(위원장)이 시정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감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제 국회가 제도적으로 시정조치요구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실명제(질의한 의

원표기) 및 위원회별로 평가팀을 만들고, 국정감사 전에 시정요구처리상황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점검하도록 하여 매년 중복질의 되는 일이 없이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감사 중 질타를 통해 허위 시정처리보고를 발본색원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시정조치에 질의한 의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보니, 정부의 시정조치 보고에 대해 질의한 의원도 관심이 없고, 질의하지 않은 의원은 더욱 관심이 없고, 상임위에는 담당하는 사람도 없다보니, 시정조치 허위보고가 무책임하게 다음해에 다시 질의되는 현상이 없어지 질 않고 있어 국감이 부정부패 면죄부가 되는 오·남용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나. 국정감사법 제2조 준수(정기국회 전 30일), 원칙 못지킬 것이면 개정해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①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는 바, ‘정기 집회일 이전에 30일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예외규정을 이용하여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원칙 중심의 사회를 만들려면 국회부터 원칙을 준수하거나, 아니면 지키지 못할 조항이면 원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외교통일위원회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생산적으로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해외현지에서 실시하여 국민의 신속한 알권리 보장이 어렵고, 국정감사의 효과도 반감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필수불가결한 재외공관에 대해서만 현지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기타 재외공관에 대해서는 화상 국정감사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제20대 3차년도 국회부터는 감사내용이 화상으로 녹화되어 누구든 볼 수 있도록 하였지만 아직도 여전히 해외국감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시간 비행 등 비효율적이고, 국정감사 내용은 국감 당시 알 수 없으므로 반드시 개선해서 국정감사 공개원칙에 따라 재외공관 국감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가 필요할 것이며, 문제가 있는 재외공관을 선별해 방문하

거나 화상 국감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2020년도 국감은 코로나19로 인해 화상국감이 실시되었지만,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중에도 현지 국감을 해서 빈축을 샀음.>>

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부실, 지연 근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서 서류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주무장관에게 해명요구,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요구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거부, 부실, 지연이 여전한 것은 문제이다.

매년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제출에 대한 거부나 부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넘어가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제대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강제력을 동원하기 전까지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어서 입법자인 국회의원들이 이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마. 적절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수박 겉 핥기’ 식 국감 종식

매년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수의 기관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국정감사의 위세를 보이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과다한 피감기관 선정으로 인해 일반 증인은 물론 피감기관에 대해 질의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서면으로 대체하는 등으로 수박 겉 핥기식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에서는 피감기관 선정과정에서부터 신중하고, 저인망식 피감기관 선정보다는 문제가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집중과 선택의 관점에서 피감기관을 선정해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7.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대한 장기 계류를 없애고 신속 심사해야

장기적인 적체와 심사과정에서 심사도 하지 않으면서 상정만 하면 이중적인 낭비가 심하므로 국회의원 법률안에 대해서 접수 순서대로 신속히 심사할 수 있도록

록 해야 한다. 국회법에 규정된 의사일정 요일제, 연중 상시 국회 그리고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제 등 일하는 국회 그리고 예측 가능한 국회를 실질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법안이 적체되지 않으려면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법안검토와 외부 전문가의 활용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8.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의 효율화와 활동 강화

가. 법안 대표발의 국회의원의 법안심사소위 참여/진술권 보장

의원이 법률안 발의를 한 경우에는 대표발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나 심사 소위원회에 참여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과 관련 정부부처의 의견만 듣는 것으로 처리 되고 있다. 그러므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회의에 대표발의 의원도 참여하여 법률안의 제안설명과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자세히 반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 첨예한 대립이 있는 법안의 경우 소위 구성원(특히 전문위원)의 의견만 듣지 말고 공개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음

법안의 내용에 대한 찬반이 갈려서 대립이 심한 경우, 예를 들어 검경 수사권 독립과 같은 법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검찰 출신 전문위원은 해당 법안심사과정에서 회피를 하도록 하게 하거나, 사계 전문가의 의견을 공개석상에서 들을 필요가 있다.

다. 국회 보좌진이나 전문가의 진술권 보장

상임위원회의 법안소위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 때보다는 진의의 기회가 더 많이 보장 되어야 하는데, 국회 보좌진도 법안심사를 할 때, 해당 부처의 답변에 대해 예비적으로 보충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의원이 수많은 법률안에 대해 다 살필 수 없어 보좌진의 도움을 받으나, 심사과정에서는 피감기관의 답변이 다를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견이 있는 의원이 지정한 전문가나 의원의 담당 보좌진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겠다.

라. 회의수와 회의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야 함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적은 수의 소속 의원이 하고, 법안 관련 해당부처 실무자도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내실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정기적 법안 심사소위 개최(2019.7.17시행)에 더하여 충분한 질의 응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마. 청원소위 충실화

국회는 민의의 전당으로 국민은 청원법과 국회법에 의해서 청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청원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기일을 도과하여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문제로서 청원심사소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일을 하지 않은 국회 윤리특별위가 국회 청원을 담당하여 신속히 처리를 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 국회 청원의 신속처리는 민의 대변기관인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바.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방법마련 절실

법안심사소위와 예산심사소위에 같이 활동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평상시에는 적체된 법안을 모든 의원이 같이 심사하고 예결산 기간에는 예결산소위의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모든 의원이 같이 예결산 심사를 하는 등 소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법안심사소위의 경우에는 2020. 12. 시행 한달 3회 개최 원칙 준수》

사. 충실한 결산심사를 위한 시간 확보

결산심사와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상임위 예결산소위의 역할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나 그 소위원회인 계수조정소위원회와 비슷하고, 또한 국회 예산정책처와도 업무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요구되었다. 충실한 결산 심사기간 확보와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반영 등 실효성이 있는 사후조치가 필요하다.

III. 제21대국회 2차년도(21-2), 헌정대상 수상의원 및 분석

■ 헌정대상 수상의원 (다선, 가나다순)

의원명		당선	정당	선거구	
김영주	金榮珠	4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노웅래	盧雄來	4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안규백	安圭伯	4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갑
이명수	李明洙	4선	국민의힘	충청남도	아산시갑
김경협	金旻俠	3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부천시갑
김도읍	金度邑	3선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을
김민기	金敏基	3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용인시을
박홍근	朴洪根	3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중랑구을
서영교	徐瑛敎	3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중랑구갑
윤재옥	尹在玉	3선	국민의힘	대구광역시	달서구을
김성원	金成願	재선	국민의힘	경기도	동두천시연천군
김성주	金成柱	재선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전주시병
김희국	金熙國	재선	국민의힘	경상북도	군위군익성군청송군영덕군
류성걸	柳性杰	재선	국민의힘	대구광역시	동구갑
박성중	朴成重	재선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서초구을
박재호	朴在昊	재선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남구을
송기헌	宋基憲	재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원주시을
송석준	宋錫俊	재선	국민의힘	경기도	이천시
안호영	安浩永	재선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어기구	魚基龜	재선	더불어민주당	충청남도	당진시
위성곤	魏聖坤	재선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유동수	柳東秀	재선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	계양구갑

의원명		당선	정당	선거구	
이만희	李晩熙	재선	국민의힘	경상북도	영천시청도군
이철규	李喆圭	재선	국민의힘	강원도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임이자	林利子	재선	국민의힘	경상북도	상주시문경시
정점식	鄭点植	재선	국민의힘	경상남도	통영시고성군
정춘숙	鄭春淑	재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용인시병
조승래	趙承來	재선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유성구갑
조응천	趙應天	재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남양주시갑
최인호	崔仁昊	재선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사하구갑
추경호	秋慶鎬	재선	국민의힘	대구광역시	달성군
한병도	韓秉道	재선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익산시을
강선우	姜仙祐	초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강서구갑
강준현	康準鉉	초선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을
권명호	權明浩	초선	국민의힘	울산광역시	동구
권인숙	權仁淑	초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경만	金京萬	초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철	金敏徹	초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의정부시을
김수흥	金洙興	초선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익산시갑
김승수	金承洙	초선	국민의힘	대구광역시	북구을
김승원	金勝源	초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수원시갑
김예지	金睿智	초선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주영	金周暎	초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김포시갑
김형동	金亨東	초선	국민의힘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
서동용	徐東榕	초선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서범수	徐範洙	초선	국민의힘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영석	徐暎錫	초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정
서일준	徐一俊	초선	국민의힘	경상남도	거제시
서정숙	徐正淑	초선	국민의힘	비례대표	
소병철	蘇秉哲	초선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신영대	申榮大	초선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군산시
신현영	申賢榮	초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금희	梁琴喜	초선	국민의힘	대구광역시	북구갑
유경준	兪京濬	초선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강남구병
윤준병	尹準炳	초선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정읍시고창군
윤창현	尹暢賢	초선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용우	李龍雨	초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고양시정

의원명		당선	정당	선거구	
이원택	李源澤	초선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김제시부안군
이장섭	李將燮	초선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청주시서원구
이종성	李鍾成	초선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주환	李周桓	초선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연제구
임오경	林五卿	초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광명시갑
임호선	林昊宣	초선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전봉민	田奉珉	초선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용기	田溶冀	초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필모	鄭必模	초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조오섭	曹五燮	초선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갑
주철현	朱哲鉉	초선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여수시갑
천준호	千俊鎬	초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강북구갑
최기상	崔基相	초선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금천구
최형두	崔炯斗	초선	국민의힘	경상남도	창원시마산합포구
최혜영	崔惠英	초선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한준호	韓俊鎬	초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고양시을
허은아	許垠娥	초선	국민의힘	비례대표	
홍기원	洪起元	초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평택시갑

1. 정당별 수상의원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
수상의원수	47	28	0
의원수	167	103	14
수상비율	28.14%	27.18%	0.00%

※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에는 국무위원 겸임했던 의원 포함임

2. 성별 수상의원

구분	남	여	계/평균
수상의원수	62	13	75
의원수	226	52	278
수상비율	27.43%	25.00%	26.98%

3. 당선횟수별 수상의원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계
수상의원수	43	22	6	4	0	75
대상의원수	146	67	37	18	10	278
수상비율	29.45%	32.84%	16.22%	22.22%	0.00%	26.98%

4. 선거구별 수상의원

선거구	수상 의원	의원 정원	수상 비율	수상의원 <각 지역별, 가나다 순>
서울특별시	10	49	20.41%	강선우, 김영주, 노웅래, 박성중, 박홍근, 서영교, 안규백, 유경준, 천준호, 최기상
부산광역시	5	18	27.78%	김도읍, 박재호, 이주환, 전봉민, 최인호
대구광역시	5	12	41.67%	김승수, 류성걸, 양금희, 윤재옥, 추경호
인천광역시	1	13	7.69%	유동수
광주광역시	1	8	12.50%	조오섭
대전광역시	1	7	14.29%	조승래
울산광역시	2	6	33.33%	권명호, 서범수
세종시	1	2	50.00%	강준현
경기도	14	59	23.73%	김경협, 김민기, 김민철, 김성원, 김승원, 김주영, 서영석, 송석준, 이용우, 임오경, 정춘숙, 조웅천, 한준호, 홍기원
강원도	2	8	25.00%	송기현, 이철규
충청북도	2	8	25.00%	이장섭, 임호선
충청남도	2	11	18.18%	여기구, 이명수
전라북도	7	9	77.78%	김성주, 김수흥,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전라남도	3	10	30.00%	서동용, 소병철, 주철현
경상북도	4	13	30.77%	김형동, 김희국, 이만희, 임이자
경상남도	3	16	18.75%	서일준, 정점식, 최형두
제주도	1	3	33.33%	위성곤
비례대표	11	47	23.40%	권인숙, 김경만, 김예지, 서정숙, 신현영, 윤창현, 이종성, 전용기, 정필모, 최혜영, 허은아

IV. 제21대 국회 2차년도(21-2),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균성적 : 68.46점

《국회의장 박병석 의원 등을 제외한 278명 기준》

1. 의정활동 종합성적 : 68.46점 / 100점 만점 환산(D학점)

제21대 국회 2차년도 종합의정활동 성적은 평균 **68.46점**(1차년도 **평균 67.74점**)이었다. 국회의원 평가기준에 의해 평점을 매긴 결과, 60점 미만의 종합의정활동 낙제점 의원은 **76명**(1차년도 **94명**)이나 되었다.

278명의 국회의원 중 90점 이상이 **16명**(1차년도 **27명**)이었다. 80점대가 **54명**(1차년도 **40명**), 그리고 70점대가 **59명**(1차년도 **66명**)이었다. 가장 많은 의원이 분포하고 있는 60점대가 **73명**(1차년도 **71명**)이었다. 60점 미만의 “F학점”의 의정성적을 얻은 의원은 모두 **76명**(1차년도 **94명**)이었다. 60점 미만대 중에서도 5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의원은 **29명**(1차년도 **39명**)이나 되었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의정활동 종합성적 분포(100점 만점)»

구분	90점 이상	80점 이상~90점 미만	70점 이상~80점 미만	60점 이상~70점 미만	50점 이상~60점 미만	50점 미만	계
학점	A	B	C	D	F		
의원수	16	54	59	73	47	29	278

2. 교섭단체별 성적 : 더불어민주당 성적이 71.11점으로 높아

국민의힘의 평균점수는 **65.50점**으로 더불어민주당 **71.11점**보다 7점 정도 저조하였다. 비교섭 정당과 무소속의 경우에는 **59.75점**으로 평균 **68.46점**보다 크게 밑돌았다.

«교섭단체별 제21대 국회 2차년도 의정활동 종합성적»

구분	의원수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
90점 이상	16	14	2	0
80점 이상~90점 미만	54	32	22	0
70점 이상~80점 미만	59	42	17	0
60점 이상~70점 미만	73	40	25	8
50점 이상~60점 미만	47	21	21	5
50점 미만	29	12	16	1
계	278	161	103	14
평균	68.46	71.11	65.50	59.75

3. 당선횟수별 분석 : 재선의원의 성적이 72.14점으로 가장 높아

당선횟수별로 초선의원의 경우에는 90점 이상이 8명이었고, 평균 70.70점으로 재선의원보다 낮았다. 재선의원의 경우에는 90점 이상 5명이었는데 평균의정활동 성적은 72.14점으로 가장 높았다.

재선의원들이 의정활동을 고르게 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선의 경우에는 62.89점, 4선의 경우에는 56.24점, 그리고 5선 이상의 다선의원의 경우에는 53.68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

«당선횟수별 제21대 국회 2차년도 의정활동 종합성적»

구분	의원수	선수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90점이상	16	8	5	3	0	0
80점이상~90점미만	54	32	15	3	4	0
70점이상~80점미만	59	34	20	4	0	1
60점이상~70점미만	73	41	15	11	3	3
50점이상~60점미만	47	23	8	9	4	3
50점미만	29	8	4	7	7	3
계	278	146	67	37	18	10
평균	68.46	70.70	72.14	62.89	56.24	53.68

4. 선거구별 : 전라북도가 81.53점으로 높아

선거구별로 전라북지역 출신 국회의원 9명의 평균 의정활동점수가 81.53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비례대표 의원들의 평균의정활동점수가 67.01점으로 전체 평균 68.46점보다 근소하게 낮게 나왔다.

지역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적은 세종지역으로 2명 의원의 평균 성적이 76.66점으로 높았다. 가장 낮은 경우는 인천지역으로 61.35점이었다. 그다음은 대전지역으로 63.82점이었다.

«선거구별 제21대 국회 2차년도 종합의정활동 종합성적»

선거구	수상의원수	지역구의원 정원	헌정대상 수상비율	지역별 평점 평균
-----	-------	-------------	--------------	-----------

선거구	수상의원수	지역구의원 정원	헌정대상 수상비율	지역별 평점 평균
서울특별시	10	49	20.41%	68.14
부산광역시	5	18	27.78%	67.38
대구광역시	5	12	41.67%	71.16
인천광역시	1	13	7.69%	61.35
광주광역시	1	8	12.50%	72.63
대전광역시	1	7	14.29%	63.82
울산광역시	2	6	33.33%	65.08
세종특별자치시	1	2	50.00%	76.66
경기도	14	59	23.73%	68.91
강원도	2	8	25.00%	71.32
충청북도	2	8	25.00%	64.88
충청남도	2	11	18.18%	65.82
전라북도	7	9	77.78%	81.53
전라남도	3	10	30.00%	75.76
경상북도	4	13	30.77%	68.24
경상남도	3	16	18.75%	65.40
제주특별자치도	1	3	33.33%	76.01
비례대표	11	47	23.40%	67.01
계/평균	75	299	25.17%	68.46

제2부 제21대 국회 2차년도(21-2),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적

I. 제21대 국회2차년도(21-2), 본회의 재석률 성적 :

12점 만점에 평균 8.43점

법률연맹 발표, 국회의원(21-2)들의 “본회의 출결//재석상황” 총115회 전수조사
국회 본회의 출석률은 'A'(91.26%), 재석률은 'C'(70.35%)학점// 출석도장만찍고 사라져

■ 제21대 국회(21-2) 재석률¹⁾ 우수의원 (90% 이상) ---

김민기(민), 정필모(민), 김영호(민), 윤영덕(민), 이종성(국), 류호정(정) 의원

■ 본회의 재석률 60%미만 'F' 학점 : 불성실의원 40명(전체의원 14.34%)

재석률 40% 이하 이용(국), 심상정(정), 장제원(국), 이상호(민), 조수진(국), 하태경(국)

■ 본회의 지각(개회시) 평균 84명, 조퇴 146명으로 근태불량 --- 불성실의원의 세비는 삭감해야!

■ 의원의 본회의 불출석·자리뜨기는 “입법/재정통제/정부견제 등의 4대 책무”를 방기하는 직무유기!

■ 의원이 “무단 결석시 ‘국회의원수당법 특별활동비 감액 규정’을 적극 적용하라” (국회법 제32조 2항)

◆ 교섭단체별(양대정당) 본회의 재석률 비교 : 더불어민주당(73.85%)이 국민의힘(65.11%)보다 앞서

◆ 당선횟수(선수)별 재석률 : 초선의원(73.42%)은 상대적으로 성실, 4선의원(60.63%)은 최저

◆ 지역별 재석률 1위 의원 : 서울(김영호) 부산(이주환) 대구(류성걸) 인천(허종식)

(비례대표 포함)

광주(윤영덕) 대전(박병석) 울산(김기현) 세종(강준현) 경기(김민기)

강원(허영) 충북(임호선) 충남(어기구) 전북(한병도) 전남(소병철)

경북(정희용) 경남(최형두) 제주(송재호) // 비례대표(정필모)

◆ 출석을 대비 재석을 차이가 35%p 이상 의원(출석체크만?) -- 윤한홍 박덕흠 이용호 윤영석

김윤덕 권은희 김홍걸 박광온

1.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 본회의 국회의원의 출석·재석현황(총115회)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NGO 법률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제21대 국회 2차년도 (2021. 5. 30.~2022. 5.29.) 총 38회(1차년도 48회, 정기회 개회식을 비롯 개회식 2회 포함 40개 회의록)본회의에 국회의원의 출석, 재석(속개/산회시)까지 국회의회의 룩상 출석·재석 점검(총115회, 1차년도 149회)을 전수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1) 본회의 재석률 : 개회(회의시작), 속개(오후 회의시작), 산회(회의 끝날 때), 출석(한번만 참석해도)의 평균 참여율

2. 국회의원의 본회의 총115회 출석/재석체크 결과, 평균 재석을 70.35%

(1) 본회의장에서 10번에 9번 이상 자리를 지킨 의원은 6명에 불과한 반면, 본회의10번에 6번도 제대로 자리에 있지 않은 의원은 40명(1차년도 25명)이나 되었다. 70%대 본회의 재석을 의원이 109명(1차년도 125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출석을 하였어도 본회의 회의시작시간에 지각을 하거나, 회의 끝날 때에 자리에 없어 텅빈 회의장이 되었다.

«본회의 개의시간에 불참한 횟수가 많은 의원(회의지각 의원?)»

의원명	당선	선거구	정당	개의시 참석횟수	개의 횟수	개의시 참석률
장제원	3선	부산 사상구	국민의힘	9	38	23.68%
하태경	3선	부산 해운대구광역시갑	국민의힘	9	38	23.68%
조수진	초선	비례대표	국민의힘	9	38	23.68%
심상정	4선	경기 고양시갑	정의당	10	38	26.32%
우상호	4선	서울 서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	11	38	28.95%
이 용	초선	비례대표	국민의힘	11	38	28.95%
박덕흠	3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국민의힘	12	38	31.58%
윤상현	4선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민의힘	13	38	34.21%
윤영석	3선	경남 양산시갑	국민의힘	14	38	36.84%
김홍걸	초선	비례대표	무소속	14	38	36.84%

«본회의 끝날 때 자리를 지키지 않은 의원(조퇴 등 자리뜨기 의원?)»

의원명	당선	선거구	정당	산회시 참석횟수	산회 횟수	산회시 참석률
장제원	3선	부산 사상구	국민의힘	1	36	2.78%
박덕흠	3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국민의힘	2	36	5.56%
윤한홍	재선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국민의힘	3	36	8.33%
권성동	4선	강원 강릉시	국민의힘	6	36	16.67%
심상정	4선	경기 고양시갑	정의당	7	36	19.44%
권은희	3선	비례대표	국민의힘	7	36	19.44%
이용	초선	비례대표	국민의힘	7	36	19.44%
박진	4선	서울 강남구을	국민의힘	7	33	21.21%
강기윤	재선	경남 창원시성산구	국민의힘	8	36	22.22%
이용호	재선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국민의힘	8	36	22.22%

(2) 텅빈 본회의장에서는 여야간 말싸움으로 인해 소란이 빚어지기도 하였는데, 대정부질문 등 다른 의원들이 발언이나 질문을 하는 본회의에서 단골로 빚어져 18회의 본회의 도중에 장내소란이 있었으며, 한 본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장내 소란이 빚어지기도 하였다. 가장 많은 장내소란이 빚어진 것은 제396회 임시회(4월) 제1차 본회의(2022.4.30.)로 모두 5차례 장내 소란이 빚어졌으며, 소위 ‘검수완박’ 법안 처리과정에서 빚어졌다.

(3) 본회의 시간은 개회식을 포함해 87시간에 불과해 지난 1차년도 203시간 28분보다 대폭 줄었다. 필리버스터가 있었던 3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6시간 56분)와 제396회 임시회(2022.4.30.) 제1차 본회의(7시간 38분)에서도 1차년도와 같은 시간이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회기조정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사실상 형해화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로 1차년도 필리버스터가 있었던 제383회 임시회 제1차(2020.12.10.)는 88시간 8분이나 되었다.

3.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재석(在席)은

“입법·재정통제·정부견제 책무”의 이행이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는 “대통령 선거(2022.3.9.), 지방선거(2022.6.1.)에 매몰되어 국회가 국회의 4대 기능(입법, 국민대표, 정부견제, 예산통제)에 사실상 등한하였다.” “국회의원의 충실한 본회의 출석/재석은 입법기능 등 국회의원의 4대 기능/역할에 충실한 가장 기본적인 의정활동인바, 이를 제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4. 법률소비자연맹 분석, 제21대 국회 2차년도 의원의 본회의 재석을 통계

가. 지역별 2차년도 본회의 재석을 1위 국회의원

지역	의원명	당선	선거구	정당	성별	본회의재석률
서울특별시	김영호	재선	서대문구을	더불어민주당	남	92.17%

지역	의원명	당선	선거구	정당	성별	본회의재석률
부산광역시	이주환	초선	연제구	국민의힘	남	81.74%
부산광역시	이헌승	3선	부산광역시진구을	국민의힘	남	81.74%
대구광역시	류성걸	재선	동구갑	국민의힘	남	87.83%
인천광역시	허종식	초선	동구미추홀구갑	더불어민주당	남	84.35%
광주광역시	윤영덕	초선	동구남구갑	더불어민주당	남	92.17%
대전광역시	박병석	6선	서구갑	무소속	남	88.70%
울산광역시	김기현	4선	남구을	국민의힘	남	78.26%
세종시	강준현	초선	세종특별자치시을	더불어민주당	남	83.48%
경기도	김민기	3선	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	남	99.13%
강원도	허영	초선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더불어민주당	남	83.48%
충청북도	임호선	초선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더불어민주당	남	85.22%
충청남도	어기구	재선	당진시	더불어민주당	남	86.09%
전라북도	한병도	재선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	남	89.57%
전라남도	소병철	초선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더불어민주당	남	86.96%
경상북도	정희용	초선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국민의힘	남	85.22%
경상남도	최형두	초선	창원시마산합포구	국민의힘	남	80.87%
제주도	송재호	초선	제주특별자치도시갑	더불어민주당	남	78.26%
비례대표	정필모	초선		더불어민주당	남	93.91%

나. 제21대 국회 본회의 2차년도 재석률 통계 분석

(1) 제21대국회 2차년도 의원 재석률: 70.35%(출석률보다 20.91%p적어)

분석결과,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의 본회의 재석률은 70.35%(1차년도 74.13%)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국무위원 겸임 국회의원을 제외한 수치임에도 1차년도 본회의 재석률(1차년도에는 포함)보다도 떨어졌다.

제21대 국회의 2차년도 본회의 출석률은 평균 91.26%(1차년도 94.66%)로 본회의 출석률과 재석률의 차이가 20.91%p 차이가 났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본회의 출석률 및 재석률 비교>>

구분	본회의 재석률	본회의 출석률	개의회 참석률	산회시 참석률
279명 평균	70.35%	91.26%	69.87%	47.46%

<<제21대 국회 1차년도 본회의 출석률 및 재석률 비교>>

구분	재석률	출석률	개의회 참석률	산회시 참석률
300명 평균	74.13%	94.66%	73.88%	53.49%

(2) 1년간 본회의 재석률 최상위 : 김민기, 정필모 등 90% 이상 6명에 불과

제21대 국회 2차년도에서는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9.13%(1차년도 99.33%)로 가장 높은 재석률을 기록하였으며,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3.91%(1차년도 97.99%)로 2위였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본회의 재석률 90% 이상>>

의원명	당선횟수	선거구	정당	재석률	재석횟수
김민기	3선	경기도 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	99.13%	114
정필모	초선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93.91%	108
김영호	재선	서울 서대문구을	더불어민주당	92.17%	106
윤영덕	초선	광주 동구남구갑	더불어민주당	92.17%	106
이종성	초선	비례대표	국민의힘	92.17%	106
류호정	초선	비례대표	정의당	91.30%	105

(3)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본회의 재석률이 가장 높아(73.85%)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균 재석률이 73.85%(1차년도 77.89%)로 국민의힘 의원의 평균 재석률 65.11%(1차년도 69.24%)보다 높게 나왔다.

본회의 단순 출석률 역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 94.38%로 양호한 반면, 국민의 힘은 87.23%였다.

본회의 시작(개회시)할 때 재석체크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3.75%(1차년도 78.92%)였고, 국민의힘 의원은 64.62%, 비교섭 의원은 64.21%에 불과했다.

본회의가 끝날 때(산회시)의 재석체크에 있어서도 평균 47.46%(1차년도 53.49%)였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98%, 국민의힘 의원은 40.92%였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교섭단체별 본회의 재석률 및 출석률 현황>>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	평균
본회의재석률	73.85%	65.11%	68.81%	70.35%
본회의 출석률	94.38%	87.23%	85.50%	91.26%
개회시 참석률	73.75%	64.62%	64.21%	69.87%
산회시 참석률	50.98%	40.92%	54.63%	47.46%
의원수	161	103	15	279

«참고 :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교섭단체별 본회의 재석률 및 출석률 현황»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	평균
평균 재석률	77.89%	69.24%	67.69%	74.13%
평균 출석률	96.73%	91.59%	92.72%	94.66%
의원수	174	102	24	300

(4) 국회의원 본회의장 재석률은 초선이 73.42%로 가장 높아

국회의원 본회의 재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초선 의원들로, 평균 73.42%(1차년도 78.42%)로 전체 평균 70.32%보다 3%p 정도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재선 의원의 재석률이 69.39%(1차년도 72.51%)로 높았고, 3선 의원의 재석률은 66.39%(1차년도 68.74%), 5선 이상 의원의 재석률이 65.30%(1차년도 67.44%)으로 낮아졌으며, 4선 의원의 재석률은 60.63%(1차년도 62.90%)로 가장 낮아 간신히 낙제를 면했다.

회의시작을 할 때(개회시) 참석률을 살펴보면 초선의원은 73.76%인 반면, 4선 의원은 57.66%에 불과했다.

본회의 회의끝날 때(산회시) 참석률은 평균 47.46%였고, 4선 의원은 36.52%에 불과했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당선횟수별 본회의 재석률 현황»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평균/계
본회의 재석률	73.42%	69.30%	66.39%	60.63%	65.30%	70.35%
본회의 출석률	92.26%	91.08%	91.28%	84.98%	89.32%	91.26%
개회시 참석률	73.76%	69.31%	63.58%	57.66%	62.68%	69.87%
산회시 참석률	51.73%	45.05%	42.04%	36.52%	41.67%	47.46%
의원수	146	67	37	18	11	279

«제21대 국회 1차년도 당선횟수별 재석률 현황»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평균/계
본회의 재석률	78.42%	72.51%	68.74%	62.90%	67.44%	74.13%
본회의 출석률	95.62%	95.47%	93.22%	88.89%	92.23%	94.66%

(5) 본회의 재석률, 최고는 세종지역 81.74%, 최저는 경남지역 60.58%

본회의장 재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지역으로 81.74%(1차년도 87.25%)로 평균보다 11%p 이상 높게 나왔다. 그 다음은 전남지역으로 평균 재석률은 78.78%

였다. 3위는 제주지역으로 **77.83%**였다.

서울지역은 70.04%(1차년도 **73.22%**)로 평균 **70.35%**보다 조금 낮았으며, 의원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지역은 71.35%(1차년도 77.68%)였다.

평균(70.35%) 미달 지역은 꼴찌인 **경남지역** 비롯해 **서울, 울산, 충남, 부산, 강원, 충북** 등 7개 시도나 되었다.

비례대표의 본회의 재석률은 70.59%(지난해 **76.86%**)로 평균보다는 높았지만 저조하였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지역/비례대표별 국회의원 본회의 재석률/출석률 현황>>

구분	평균재석률	평균출석률	의원수
세종특별자치시	81.74%	97.50%	2
전라남도	78.78%	97.75%	10
제주특별자치도	77.83%	95.00%	2
광주광역시	76.85%	94.06%	8
대구광역시	72.98%	93.21%	10
대전광역시	72.46%	90.00%	6
전라북도	72.17%	95.56%	9
경기도	71.35%	91.86%	55
경상북도	71.30%	91.54%	13
인천광역시	71.23%	93.96%	12
비례대표	70.59%	89.06%	45
서울특별시	70.04%	92.38%	44
울산광역시	69.28%	89.58%	6
충청남도	68.61%	92.25%	10
부산광역시	67.05%	89.17%	18
강원도	65.34%	87.14%	7
충청북도	64.84%	89.29%	7
경상남도	60.58%	84.83%	15
평균/계	70.35%	91.26%	279

<<제21대 국회 1차년도 선거구별 국회의원 본회의 재석률/출석률 현황>>

광역시도별	평균재석률	평균출석률	의원수
세종	87.25%	100.00%	2
광주	82.05%	94.61%	8
전남	81.34%	98.82%	10
대전	80.82%	96.64%	7

경기	77.68%	96.69%	59
충북	73.68%	95.23%	8
전북	73.47%	96.13%	10
서울	73.22%	94.61%	49
경북	71.81%	92.64%	13
울산	71.60%	93.64%	6
인천	70.71%	94.67%	13
제주	70.69%	88.89%	3
대구	70.51%	91.64%	12
충남	70.18%	93.13%	11
강원	68.42%	92.82%	8
경남	66.89%	91.06%	16
부산	66.16%	90.71%	18

(6) 본회의 출석률과 재석률의 차이가 큰 의원 : 35%P 이상 차 8명

본회의의 출석률과 재석률을 비교해서 그 격차가 35%P이상인 경우인 의원은 모두 8명이었다. 출석률이 높지만 재석률이 낮은 경우는 본회의장에 출석체크는 하였지만 본회의장을 지키지 않고 자리를 떴다는 의미가 된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출석률과 재석률의 차이가 큰 의원>>

의원명	당선	선거구	정당	재석률	출석률	출석률과 재석률 차이
윤한홍	재선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국민의힘	51.30%	95.00%	43.70%p
박덕흠	3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국민의힘	40.87%	82.50%	41.63%p
이용호	재선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국민의힘	55.65%	95.00%	39.35%p
윤영석	3선	경남 양산시갑	국민의힘	51.30%	90.00%	38.70%p
김윤덕	재선	전북 전주시갑	더불어민주당	55.65%	92.50%	36.85%p
권은희	3선	비례대표	국민의힘	48.70%	85.00%	36.30%p
김홍걸	초선	비례대표	무소속	53.91%	90.00%	36.09%p
박광온	3선	경기도 수원시정	더불어민주당	61.74%	97.50%	35.76%p

5. 제21대 국회 2차년도 본회의 출석, 개의, 산회시 분석

가. 제21대 국회 2차년도 본회의 출석률이 100%인 의원은 58명

국회 본회의는 38회의 출석과 개회식 2회의 참석 등 40회의 출석통계를 보면 출석체크를 한 의원은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58명(1차년도 98명)이었다.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이었으며 국민의힘 의원은 김도읍 의원, 조해진 의원 등 6명에 불과하였다.

반면 본회의 출석률이 60%를 넘지 못한 의원은 3명이었다.

«제21대국회 2차년도 본회의 출석률이 60% 미만인 의원»

이름	당선	선거구	정당	소속위원회	출석	본회의출석률
이 용	초선	비례대표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6	40.00%
심상정	4선	경기도 고양시갑	정의당	국토교통위원회	17	42.50%
우상호	4선	서울시 서대문구갑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1	52.50%

나. 본회의 시작(개회) 시각을 비교적 잘 지킨 의원 12명

회의시작 시각을 잘 지킨 의원이 있는지 살펴보면, 제21대 국회 2차년도에서 개회 시(회의시작할 때)에 38회 모두 100% 참석한 의원은 없었고, 90%이상 참석한 의원은 모두 12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은 류성걸 의원, 강대식 의원, 추경호 의원 등 3명이었고,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제21국회 2차년도 회의시작(개회) 시간을 비교적 잘 지킨 의원»

의원명	당선	선거구	정당	성별	개회시참석	개회시참석률
김민기	3선	경기도 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	남	37	97.37%
김주영	초선	경기도 김포시갑	더불어민주당	남	37	97.37%
정필모	초선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남	37	97.37%
한병도	재선	전북 익산시을	더불어민주당	남	36	94.74%
오기형	초선	서울 도봉구을	더불어민주당	남	36	94.74%
홍성국	초선	세종 세종자치시갑	더불어민주당	남	36	94.74%
류성걸	재선	대구 동구갑	국민의힘	남	35	92.11%
소병훈	재선	경기 광주광역시시갑	더불어민주당	남	35	92.11%
강대식	초선	대구 동구을	국민의힘	남	35	92.11%
윤영덕	초선	광주 동구남구갑	더불어민주당	남	35	92.11%
임호선	초선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더불어민주당	남	35	92.11%
추경호	재선	대구 달성군	국민의힘	남	32	91.43%

다. 회의 종료(산회) 시각에 자리를 잘 지킨 의원은 8명

38회의 본회의 중 산회 체크가 없었던 2회를 제외한 36회 회의가 끝날 때 참석현황을 살펴 본 결과, **김민기** 의원이 36번 중에 36번 자리에 있어 100%를 달성하였으며, 10번 중 8번 이상 있었던 의원은 **김민기** 의원을 포함해서 **박병석** 국회의장, **이종성** 의원, **김영호** 의원, **전용기** 의원, **류호정** 의원, **윤영덕** 의원, **정필모** 의원 등 8명에 불과했다.

산회시 참석 체크를 하지 않았던 회의는 2021년 12월 2일 제12차 본회의로 2022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2월 3일 새벽에 다시 본회의를 열었고, 2022년 2월 14일 제393회 임시회 2차회의에서도 산회없이 끝났다.

◀회의 종료시(산회시)에 자리를 비교적 양호하게 지킨 의원>

의원명	당선	선거구	정당	성별	산회시참석	산회시참석률
김민기	3선	경기 용인시을	더불어민주당	남	36	100.00%
이종성	초선	비례대표	국민의힘	남	32	88.89%
박병석	6선	대전 서구갑	무소속	남	31	86.11%
김영호	재선	서울 서대문구을	더불어민주당	남	31	86.11%
전용기	초선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남	31	86.11%
류호정	초선	비례대표	정의당	여	30	83.33%
윤영덕	초선	광주 동구남구갑	더불어민주당	남	30	83.33%
정필모	초선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남	30	83.33%

6. 본회의 중에 출석하지 못한 사정이 많았던 의원

가. 청가서(결근 사유서)를 많이 제출한 의원 : 10회 이상 5명

국회법 제32조²⁾에 근거하여, 의원은 사고로 인해서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 청가서를 제출할 수 있다.

- 2) **국회법** 제32조(청가 및 결석) ①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로 결석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외에는 국회의원수당 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활동비에서 그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신설 1994.6.28.>
- ③ 제1항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국회 본회의 중 한 번이라도 청가한 의원은 총 176명(1차년도 139명)이었으며, 전체 본회의 38회 중 10회 이상 청가서를 낸 의원은 6명이었다.

대통령선거에 나갔던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 용혜인 의원, 박진 의원, 신원식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이었다

<<청가를 많이 한(10회 이상) 의원 현황>>

의원명	당선횟수	선거구	정당	성별	청가횟수
심상정	4선	경기 고양시갑	정의당	여	13
용혜인	초선	비례대표	기본소득당	여	12
박진	4선	서울 강남구을	국민의힘	남	10
신원식	초선	비례대표	국민의힘	남	10
황보승희	초선	부산 중구영도구	국민의힘	여	10

나. 본회의 중에 출장을 간 의원 : 7회 김경협 의원 등 10명

제21대 국회 2차년도 본회의가 열리는 중에 출장을 간 의원은 모두 47명(1차년도엔 모두 4명에 불과)이었고, 이중 3번 이상 출장을 간 의원도 10명이나 되었다.

<<제21대 국회본회의 중 출장을 3회 이상 간 의원 현황>>

의원명	당선횟수	선거구	정당	성별	출장횟수
김경협	3선	경기 부천시갑	더불어민주당	남	7
강훈식	재선	충남 아산시을	더불어민주당	남	4
엄태영	초선	충북 제천시단양군	국민의힘	남	4
이학영	3선	경기 군포시	더불어민주당	남	4
김민철	초선	경기 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	남	3
박병석	6선	대전 서구갑	무소속	남	3
박찬대	재선	인천 연수구갑	더불어민주당	남	3
양이원영	초선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여	3
이은주	초선	비례대표	정의당	여	3
조정훈	초선	비례대표	시대전환	남	3

7. 제21대 국회 2차년도 본회의 개황 : 본회의 횟수는 대폭 줄어 38회 불과 감정싸움으로 18개 장내 소란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는 필리버스터 본회의로 인해 본회의시간이 200시간이 넘었으나, 제21대 국회에서는 필리버스터가 2회 있었으나, 본회의시간은 87시간에 불과하였다.

본회의의 개의시간이 제대로 안 지켜져 여야간의 합의에 많은 난관이 있었음을 보여 주었다. 즉, 10시나 오후 2시에 개의하지 않은 횟수가 12번이나 되었으며,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때 새벽에 개의하기도 하였으며, 야간이나 밤중에 개의를 하기도 하였다. 회의 중 막말소동 및 끼어들기도 심각해 장내 소란이 8회 본회의중 18회나 되었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대표적으로 장내 소란이 있었던 본회의>

회의일자	국회	차수	주요안건 및 사유
2021.08.31.	390	1차본회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토론회
2021.09.14.	391	5차본회의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김석기 의원의 대통령이 간첩 도움받아 당선 발언)
2021.09.16.	391	7차본회의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최형두 의원의 부정선거 의혹제기)
2021.09.28.	391	8차본회의	5분자유발언(김은혜 의원의 대장동 관련 발언시)
2022.04.27.	395	2차본회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토론회
2022.04.30.	396	1차 본회의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처리시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토론회
2022.05.03.	397	1차 본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시 및 사법개혁특위 구성시
2022.05.20.	397	3차 본회의	국회의원(김기현) 징계안 처리시 등

<<제21대 국회 1차년도와 2차년도 비교>>

구분	제21대 국회 2차년도	증감	제21대 국회 1차년도
본회의 회의횟수	38회	-10회	48회
본회의 회의시간	87시간	-116시간	203시간 28분
국회의원 출석률	91.26%	-3.40%p	94.66%
국회의원 재석률	70.35%	-3.78%p	74.13%
대정부질문 횟수	2회(임사회1, 정기회1) 7일	-6일	4회(정기회1, 임사회3) 13일
본회의가결법안수	682건	-139건	821건

제21대 국회 2차년도 본회의별 주요 안건 등

본회의	회의일	개회시간	회의시간	주요안건	특이사항
제388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	2021-06-16	10:00	0:41:13	교섭단체 대표연설(송영길 더불어민주당대표)	
제02차 본회의	2021-06-17	10:00	0:49:00	교섭단체 대표연설(김기현 국민의힘원내대표)	
제03차 본회의	2021-06-22	14:01	5:00:42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제04차 본회의	2021-06-23	14:00	4:58:49	경제에 관한 질문	
제05차 본회의	2021-06-24	14:00	4:51:55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제06차 본회의	2021-06-29	14:00	3:23:3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86건 의안처리	
제07차 본회의	2021-07-01	14:40	1:38:40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등 3건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	2021-07-08	10:01	0:37:3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정부의 시정연설(김부겸 국무총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 거
제02차 본회의	2021-07-23	22:20	1:35:41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등 56건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 거
제03차 본회의	2021-07-24	0:13	1:12:29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3건	
제390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	2021-08-31	14:05	5:25:47	상임위원장 보궐선거 등 46건	
제391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2021-09-01	14:01	0:25:56	제391회 국회(정기회) 개회식	
제01차 본회의	2021-09-01	14:26	0:04:59	제391회국회(정기회) 회기결정의 건 등 3건	
제02차 본회의	2021-09-08	10:01	0:37:48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03차 본회의	2021-09-09	10:01	0:52:02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04차 본회의	2021-09-13	14:10	4:35:02	정치에 관한 질문	국회의원(윤희숙) 사직 의 건
제05차 본회의	2021-09-14	14:01	4:33:15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제06차 본회의	2021-09-15	14:04	4:37:13	경제에 관한 질문	국회의원(이낙연) 사직 의 건
제07차 본회의	2021-09-16	14:01	4:47:16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등8건	2021년도국정감사정기 회기간중실시건 본회의의결을요하는국 정감사대상기관승인의 건(10건)
제08차 본회의	2021-09-28	14:00	1:15: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0건 의안처리	
제09차 본회의	2021-09-29	21:00	0:37:26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원안,송 재호의원대표발의)등14건	국회의원(정찬민) 체포 동의안
제10차 본회의	2021-10-25	10:00	0:40:14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문재인 대통령)	
제11차 본회의	2021-11-11	14:23	2:35:58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국회의원(곽상도) 사직

본회의	회의일	개회시간	회의시간	주요안건	특이사항
				구성결의안(위원회안) 등 59건	의 건
제12차 본회의	2021-12-02	20:02	1:59:09	2022년도 예산안(원안, 정부제출) 89건	
제13차 본회의	2021-12-03	9:01	0:50:59	2022년도 예산안(원안, 정부제출) 6건	
제14차 본회의	2021-12-09	14:06	3:18:2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14건	
제392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	2021-12-31	10:35	0:45: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6건	
제02차 본회의	2022-01-11	15:02	1:14:3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6건	
제393회 국회(임시회) 개회식	2022-01-27	14:08	0:15:37	제393회 국회(임시회) 개회식	
제01차 본회의	2022-01-27	14:24	0:26:28	제393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 의시정연설(김부겸 국무총리)	
제02차 본회의	2022-02-14	15:12	0:12: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4건	
제03차 본회의	2022-02-21	20:28	0:23:5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 정부제출) 등 3건	
제39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	2022-04-05	14:03	0:55:59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3건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 거
제395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	2022-04-15	17:14	0:52:09	이예람 중사 사건 특검법안(대안) 등 12건	
제02차 본회의	2022-04-27	17:04	6:56:0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3건	무제한토론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	2022-04-30	16:22	7:38:00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등 3건	무제한토론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	2022-05-03	10:03	0:21:0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등 3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안)
제02차 본회의	2022-05-16	10:00	0:23:13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18건)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윤석열 대통령)	
제03차 본회의	2022-05-20	18:09	1:24:11	국무총리(한덕수) 임명동의안 등 3건	국회의원(이영)사직의건 3.국회의원(김기현)징계 안
제04차 본회의	2022-05-29	19:41	3:05:26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제출) 등 130건	

«참고 2000년 이후 역대 국회의 본회의 회의시간»

국회	제16대 국회 (2000.5.30.~2004.5. 29)	제17대 국회 (2004.5.30.~2008.5.29)	제18대 국회 (2008. 5.30~2012.5.29.)	제19대 국회 (2012.5.30~2016.5.29)	제20대 국회 (2016.5.30.~2020.5.29.)	제21대 국회 (2020.5.30.~21.5.29)
본회의 회의시간	765시간17분	707시간4분	719시간44분	836시간40분	514시간18분	203시간28분
의원정수	273인	299인	299인	300인	300인	300인
주의	1. 지난국회의 본회의 회의시간은 역대 국회 경과보고서에 의함 2. 20대 국회 본회의 회의시간은 개회식을 포함한 시간이며, 산회가 없는 경우 회의종지시까지의 시간만을 회의시간에 포함시킴					

II. 제21대국회 2차년도(21-2),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

10점 만점에 8.79점

법률연맹, 국회(21-2) 16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총 319회) 출결/안건 등 전수조사 발표
<<상임위 중심주의 우리 국회에서 “상임위” 개회를 앓거나 불참은 의원의 중대한 직무유기>>

정무위 등 상임위(전체) - “월 2회이상 개회의무(국회법 49조의2②) 위반”

<<국회법상 월2회 개회하도록 명문화한 상임위원회 개회의무를 위반해도 불이익 없어>>

- 국회 본회의 출석률(91.26%) 보다, 낮은 상임위 출석률(87.91%) - 국회의원의 본분을 망각
- 상임위 **무더기 법안상정/심사** - 기획재정위(위원장 윤후덕) 448개 법안 1시간도 안돼 졸속처리
10개 상임위에서 한번에 100건 이상 상정한 횟수만 30회나 됨
- **장관 겸임 의원은 상임위 회의참석을 못하므로** 국회법(39조)따라 상임위원직 **사임**해야 마땅
- **국회(21-2) 상임위원회 출석률 하위(50%이하) 박용진/박진/심상정/윤호중/이용/정찬민 의원**
- 제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꼴찌 의원 : 김태호 의원(국, 52.50%)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및 검수완박 처리 등 회의에서 21번 여·야간 **막말** 막장

- **법사위**(위원장 박광온)가 36회 회의할 때, **교육위**(위원장 조해진)는 겨우 12회 회의
- **법사위**(위원장 박광온)가 103시간 회의할 때, **교육위**(위원장 조해진)는 고작 14시간 회의
- **다선의원 일수록** 상임위 출석에 등한/무책임 - **4선의원 18명**의 평균 출석률 : 73.46%
- 상임위출석률 1위 세종(96.88%) 2위 전남(95.78%) / 꼴찌 대전(80.61%) 16위경남(81.29%)
- 교섭단체별 상임위 출석률 : **더불어민주당**(91.34%) > **국민의힘**(82.93%)
-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 전략적 사·보임 등으로 76명의 의원들이 무려 267회 사·보임, 사·보임 빈번 의원** : 김승원(12회), 권성동(8회), 윤영덕(8회), 박수영(8회) 의원 등

1. 16개 상임위원회 319회 전체회의의 조사

사법/입법감시 법률전문 NGO/NPO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제21대 국회 2차년도(2021.5.30.~2022.5.29.) 정보위를 제외한 16개 상임위원회 총 319회 전체회의의 활동을 조사, 의원별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 등을 발표했다.

< 제21대 국회 2차년도 지역별 상임위 출석률 꼴찌의원(평균출석률 이하만 표시) >

지역	의원명	선거구	선수	출석률
----	-----	-----	----	-----

지역	의원명	선거구	선수	출석률
서울특별시	박진	강남구을	4선	46.67%
부산광역시	황보승희	중구영도구	초선	57.89%
대구광역시	추경호	달성군	재선	61.54%
인천광역시	배준영	중구강화군옹진군	초선	70.59%
광주광역시	양향자	서구을	초선	75.00%
대전광역시	박영순	대덕구	초선	60.87%
울산광역시	이상헌	북구	재선	70.37%
경기도	윤호중	구리시	4선	42.86%
강원도	권성동	강릉시	4선	56.25%
충청북도	엄태영	제천시단양군	초선	69.23%
충청남도	정진석	공주시부여군청양군	5선	70.59%
전라북도	이용호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재선	76.47%
전라남도	소병철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초선	86.67%
경상북도	김병욱	포항시남구울릉군	초선	66.67%
경상남도	김태호	산청함양거창합천	3선	52.94%
제주자치도	송재호	제주시갑	초선	81.25%
비례대표	이 용	비례대표	초선	50.00%

2. 상임위원회 회의시간 및 출석률 조사결과

- (1) 제21대 국회 2차년도 16개 상임위는 총 319회 전체회의(1차년도 431회)를 하였으며, 시간으로는 606시간 39분(1차년도 1012시간 52분)회의를 하였다. 1회당 평균 1시간 54분꼴(1차년도 2시간 21분)꼴로 회의를 하였다. 대통령 선거와 통합지방선거로 국회가 본연의 활동을 등한시 한 것이 그대로 드러났다.
- (2) 의원별 평균 상임위 출석률은 87.91%이었으며, 1, 2차년도 합산하여 전반기 상임위 출석률 100% 의원은 29명에 불과하였고, 꼴찌 의원은 김태호 의원(국)이었다.
- (3)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소관부처 업무보고나 현안보고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그 다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예산처리 등이었다. 법안심사의 경우에는 10개 상임위원회에서 30회 한번에 100개가 넘는 법안을 상정해 놓고 처리하였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우에는 한번에 448개 법안(2021년 11월 11일)을 상정

해 처리하였다

(4)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이 열린 상임위원회에서는 여/야간의 입장차와 날카로운 대립으로 “장내소란” 등이 21회 있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2022년 4월 26일부터 27일 제395회 임시회 제3차, 제4차 전체회의에서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로 장내 소란이 크게 빚어졌다.

3. 상임위 출석은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무

이번 조사를 총괄한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김대인 총재는 “**국회법 32조와 국회윤리규범 제14조에 규정**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기본적**이며 중요한 의무가 회의출석”이라며,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국회에서 상임위 출석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직무유기” 라고 강조했다.

4.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분석

상임위원회 -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여러 의원들로 구성된 집단으로,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며, 제21대 국회는 17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소관 안건(**법률안, 예산안, 결산 등**)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의 판단 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국회법 제49조의 2의 제2항 - 위원회(소위원회는 제외한다)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2.22.> 1. 해당 위원회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실시기간 2. 그밖에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기간

국회법 제39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항 -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

(1) 상임위원회 출석률의 구간별 의원분포

제21대 국회 2차년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을 보면, 100% 출석률을 보인 의원이 64명(1차년도 70명)으로 전체 279명의 22.94%였다. 90%대는 89명(1차년도 121명)으로 전체의 31.90%를 차지하였다.

70%미만 의원은 24명(1차년도 19명)이었다. 10번 중 2번 이상 결석한 의원(80%미만)은 54명(1차년도 45명)이나 되었다.

< 제21대 국회 2차년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분포 >

구분	의원수	비율
100% 출석	64	22.94%
90%이상~100%미만	89	31.90%
80%이상~90%미만	72	25.81%
70%이상~80%미만	30	10.75%
60%이상~70%미만	13	4.66%
50%이상~60%미만	8	2.87%
40%이상~50%미만	3	1.08%
계	279	100

< 제21대 국회 1차년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분포 >

구분	의원수	비율
100% 출석	70	23.41%
90%이상~100%미만	121	40.47%
80%이상~90%미만	63	21.07%
70%이상~80%미만	26	8.70%
60%이상~70%미만	12	4.01%
50%이상~60%미만	5	1.67%
40%이상~50%미만	0	0.00%
40%미만	2	0.67%
계	299	100.00%

(2) 교섭단체별 상임위 출석률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높아(91.34%)

교섭단체별로 분석해 본 결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상임위 전체회의 출석률이 91.34%(1차년도 92.56%)로 국민의힘(82.93%)이나 비교섭(85.40%)보다 높았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	평균
평균출석률	91.34%	82.93%	85.40%	87.91%
의원수	161	104	14	279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교섭단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	평균
평균출석률	92.56%	85.24%	85.79%	89.54%
의원수	174	102	23	299

(3) 당선 횟수별 초선의원 147명의

상임위 전체회의 평균 출석률이 90.02%로 가장 높아

당선 횟수별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을 살펴본 바, 초선 의원의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90.02%으로 가장 높았다.

3선 의원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이 88.84%로 평균보다 1%p 높았다. 재선 의원은 88.11%였고, 18명의 4선 의원은 73.46%(1차년도 76.75%)로 70%대에 머물렀다.

5선 이상 10명의 평균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은 78.15%로 전체의원 평균 출석률보다 크게 저조하여 10번에 8번 미만 출석하였다.

<<제21대국회 2차년도(21-2) 당선횟수별 전체회의 출석률 현황>>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평균/계
평균출석률	90.02%	88.11%	88.84%	73.46%	78.15%	87.91%
의원수	147	67	37	18	10	279

<<제21대국회 1차년도(21-1) 당선횟수별 전체회의 출석률 현황>>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평균/계
평균출석률	91.79%	92.38%	84.87%	76.75%	81.06%	89.54%
의원수	152	73	42	19	13	299

(4) 지역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

출석률 최저는 대전광역시 국회의원(80.61%)

지역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을 비교해 보면, 세종출신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이 96.88%(1차년도 98.3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전라남도 95.78%(1차년도 97.55%)였으며, 전라북도 9명의 상임위 전체회의 평균 출석률도 93.52%로 높았다.

반면, 대전지역 5명의 의원의 상임위 출석률이 80.61%로 가장 저조하였고, 그 다음 경상남도(81.29%), 충남지역(82.67%) 순으로 저조하였다.

참고로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46명의 평균상임위원회 출석률이 90.14%로 평균보다 조금 높았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지역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률 순위>>

광역시도			출석률 높은 순		
광역시도	의원수	평균출석률	광역시도	의원수	평균출석률
서울특별시	44	87.01%	세종특별자치시	2	96.88%
부산광역시	18	86.15%	전라남도	10	95.78%
대구광역시	10	85.78%	전라북도	9	93.52%
인천광역시	12	89.01%	제주특별자치도	2	90.63%
광주광역시	8	89.70%	경기도	55	90.04%
대전광역시	5	80.61%	광주광역시	8	89.70%
울산광역시	6	83.82%	인천광역시	12	89.01%
세종특별자치시	2	96.88%	서울특별시	44	87.01%
경기도	55	90.04%	부산광역시	18	86.15%
강원도	7	82.79%	충청북도	7	85.72%
충청북도	7	85.72%	대구광역시	10	85.78%
충청남도	10	82.67%	경상북도	13	84.58%
전라북도	9	93.52%	울산광역시	6	83.82%
전라남도	10	95.78%	강원도	7	82.79%
경상북도	13	84.58%	충청남도	10	82.67%
경상남도	15	81.29%	경상남도	15	81.29%
제주특별자치도	2	90.63%	대전광역시	5	80.61%

5. 제21대 국회 2차년도 상임위 전체회의 현황

(1) 제21대 국회 2차년도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 회의횟수 현황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횟수는 319회로 1차년도 431회 보다 무려 112회나 대폭 줄었다.

양적으로 보더라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국회가 국회 본연의 활동을 경시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회의를 많이 한 상임위원회는 양원제 국가의 상원적인 법제사법위원회로 36회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회의를 한 위원회는 겸임 상임위원회인 국회운영위원회였고, 교육위원회는 12회를 하였다.

< 제21대 국회 2차년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회의횟수 현황 >

국회법(제37조)순			회의차수가 적은 순		
상임위원회	위원장	회의수	상임위원회	위원장	회의수
국회운영위원회	윤호중	9	국회운영위원회	윤호중	9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36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11
정무위원회	윤재옥	16	교육위원회	조해진	12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21	정무위원회	윤재옥	16
교육위원회	조해진	12	외교통일위원회	이광재(사퇴)	17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원욱	19	국방위원회	민홍철	17
외교통일위원회	이광재(사퇴)	17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17
국방위원회	민홍철	17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원욱	19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26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채익	27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승	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사퇴)	23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출	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사퇴)	23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1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25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출	22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26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승	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채익	27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11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36
계		319	계		319

<<2022년도 상임위원회의 21대 국회 2차년도 월별회의횟수>>

위원회	2021년							2022년					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법제사법	6	1	2	3	2	3	4	2	2	1	5	5	36
정무	1	3	3	2	3	3	0	0	0	0	0	1	16
기획재정	3	2	3	1	0	3	1	1	1	0	3	3	21
교육	1	1	1	1	1	3	2	0	0	0	1	1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	2	0	3	3	3	1	0	0	1	1	3	19
외교통일	2	0	2	3	1	2	1	0	1	1	1	3	17
국방	1	1	1	2	0	2	1	1	1	2	2	3	17
행정안전	3	2	2	3	2	3	1	2	2	0	3	3	26
문화체육관광	4	2	3	3	3	2	1	0	1	2	2	4	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2	2	2	2	4	2	3	0	0	0	1	5	2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	2	2	3	3	4	1	1	3	0	0	5	25
보건복지	1	1	3	1	3	3	0	0	1	0	2	2	17
환경노동	1	1	2	3	6	2	1	0	0	0	1	5	22
국토교통	1	1	1	3	2	3	3	1	0	0	1	5	21

< 제21대 국회 1차년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회의횟수 현황 >

국회법(제37조)순			회의차수가 적은 순		
상임위원회	위원장	회의수	상임위원회	위원장	회의수
국회운영위원회	김태년	12	국회운영위원회	김태년	12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42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16
정무위원회	윤관석	23	국방위원회	민홍철	21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23	교육위원회	유기홍	22
교육위원회	유기홍	22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22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원욱	27	정무위원회	윤관석	23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23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23
국방위원회	민홍철	21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23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3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35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원욱	2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24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3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35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2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35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38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37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31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38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16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42
계		431	계		431

(2) 제21대 국회 2차년도 회의시간(정회 등 시간 제외)

제21대 2차년도 국회 상임위원회의 전체회의시간은 총 606시간 39분으로 지난해의 1,012시간 52분보다 406시간 넘게 줄어들었다.

가장 적은 회의시간을 기록한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해진)으로 14시간 38분 밖에 회의를 하지 않았다.

< 제21대 국회 2차년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회의시간 현황 >

국회법(제37조)순			회의시간이 적은 순		
상임위원회	위원장	회의시간	상임위원회	위원장	회의시간
국회운영위원회	윤호중	26:39:00	교육위원회	조해진	14:38:00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103:37:00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15:56:00
정무위원회	윤재옥	21:28:00	정무위원회	윤재옥	21:28:00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38:39:00	국회운영위원회	윤호중	26:39:00
교육위원회	조해진	14:38:00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출	27:26:00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원욱	32:19: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사퇴)	30:45:00
외교통일위원회	이광재(사퇴)	33:28:00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원욱	32:19:00
국방위원회	민홍철	52:22:00	외교통일위원회	이광재(사퇴)	33:28:00

국회법(제37조)순			회의시간이 적은 순		
상임위원회	위원장	회의시간	상임위원회	위원장	회의시간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45:16:00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33:41: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채익	51:12:00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승	35:37: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사퇴)	30:45:00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38:39: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43:36: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43:36:00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33:41:00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45:16:00
환경노동위원회	박대출	27:26: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채익	51:12:00
국토교통위원회	이현승	35:37:00	국방위원회	민홍철	52:22:00
여성가족위원회	송옥주	15:56:00	법제사법위원회	박광온	103:37:00
계		606:39:00	계		606:39:00

< 제21대 국회 1차년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 회의시간 현황 >

국회법(제37조)순			회의시간이 적은 순		
상임위원회	위원장	회의시간	상임위원회	위원장	회의시간
국회운영위원회	김태년	23:35:00	국회운영위원회	김태년	23:35:00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127:47:00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24:52:00
정무위원회	윤관석	52:32: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44:35:00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62:14:00	교육위원회	유기홍	49:15:00
교육위원회	유기홍	49:15:00	정무위원회	윤관석	52:32:00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원욱	67:58:00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53:15:00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53:41:00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53:41:00
국방위원회	민홍철	58:33:00	국방위원회	민홍철	58:33:00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76:16:00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62:14: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69:03:00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원욱	67:58: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44:35: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69:03: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73:16: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73:16:00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53:15:00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76:16:00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78:46:00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78:46:00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97:14:00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97:14:00
여성가족위원회	정춘숙	24:52:00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127:47:00
계		1012:52:00	계		1012:52:00

(3) 제21대 국회 2차년도 상임위원회 장내 소란

회의 중 교섭단체가 의견 충돌이나 끼워들기로 장내소란이 벌어진 회의를 살펴보면 총 21건(21대 국회 1차년도 19건)이며 한 회의에서 여러 차례 장내 소란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2차년도에는 ‘검수완박’ 관련 법안의 처리과정에서의 충돌과 새정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관련 여야간의 충돌이 빚어졌다.

< 제21대 국회 2차년도 상임위원회 장내소란 현황 >

회기	차수	회의일	위원회	안건
388	3	2021.06.23.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63) 등 19건
390	2	2021.08.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55) 등 17건
390	2	2021.08.23.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라. 대통령경호처 소관 결산 및 업무보고
391	4	2021.11.02.	여성가족위원회	개의
391	6	2021.11.03.	국토교통위원회	개의
391	6	2021.11.09.	법제사법위원회	o 현안질의
391	5	2021.11.10.	여성가족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등
391	7	2021.11.18.	국토교통위원회	개의
391	8	2021.11.22.	국토교통위원회	개의
393	2	2022.02.25.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
395	3	2022.04.26.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3)등
395	4	2022.04.27.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395	4	2022.04.27.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6	1	2022.05.02.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사청문회
397	1	2022.05.03.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인사청문회
397	1	2022.05.03.	보건복지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호영) 인사청문요청안 등
397	1	2022.05.04.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요청안 등
397	2	2022.05.09.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한동훈) 인사청문요청안 등
397	2	2022.05.11.	여성가족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 인사청문요청안 등
397	1	2022.05.17.	국회운영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2115572) 등
397	3	2022.05.17.	국토교통위원회	개의

< 제21대 국회 1차년도 상임위원회 장내소란 현황 >

회기	차수	회의일	위원회	안건
380	2	2020.07.28.	기획재정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홍익표 위원 외 1인 서면동의)
380	1	2020.07.28.	국토교통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380	1	2020.07.29.	국회운영위원회	개의
380	3	2020.08.03.	법제사법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381	1	2020.08.25.	법제사법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381	1	2020.08.25.	국회운영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382	3	2020.09.16.	국방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서욱) 인사청문회
382	4	2020.09.18.	국방위원회	합동참모의장후보자(원인철) 인사청문회
382	8	2020.12.07.	정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 (김병욱 위원 서면동의)
382	14	2020.12.08.	법제사법위원회	'낙태죄' 개정 관련 공청회
382	14	2020.12.08.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2	14	2020.12.08.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기	차수	회의일	위원회	안건
383	2	2020.12.23.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383	3	2020.12.24.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383	4	2020.12.28.	국토교통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계속)
383	5	2021.01.25.	법제사법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법무부장관 박범계)
384	1	2021.02.05.	외교통일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회 (외교부장관 정의용)
384	3	2021.02.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387	2	2021.05.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4) 무더기 법안상정 처리 여전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부처의 업무보고나 현안보고 그리고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이었다. 그 다음으로 예산심사였다. 상임위 전체회의에서의 법안심사는 무더기 법안 상정 처리 관행이 여전하였다.

한번에 100개 넘는 법안을 상정해 놓고, 발의위원의 제안설명이 있는 경우 그것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주로 서면으로 대체)와 찬반토론이 있는데, 기획재정위원회의 제391회(정기회) 제3차(2021년 11월 11일)에서는 2022년 회계연도 예산안과 법안을 포함하여 450여건(법안 44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는데 1시간도 되지 않는 57분이 소요되었다.

16개 상임위원회 중 10개 상임위원회에서 30회 100건 이상 상정처리를 하였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상임위원회별 상정건수가 100건이상인 횟수현황»

위원회	100건이상 상정횟수	위원회	100건이상 상정횟수
법제사법위원회	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정무위원회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
기획재정위원회	3	보건복지위원회	4
교육위원회	1	환경노동위원회	3
행정안전위원회	5	국토교통위원회	4

«제21대 국회 2차년도 상임위원회별 상정건수가 가장 많은 회의일 현황»

위원회	집회 차수 (일자)	상정처리된 안건수
국회운영	390회(2021.08.17.~2021.08.31.) 제1차(2021년08월17일)	41
법제사법	제388회(2021.06.04.~2021.07.03.) 제3차(2021년06월18일)	189

위원회	집회 차수 (일자)	상정처리된 안건수
정 무	제397회(2022.05.03.~2022.06.01.) 제1차(2022년05월17일)	161
기획재정	제391회(2021.09.01.~2021.12.09.)(정기회) 제3차(2021년11월11일)	450
교 육	제395회(2022.04.06.~2022.04.27.) 제1차(2022년04월29일)	102
과학기술정보통신	제391회(2021.09.01.~2021.12.09.)(정기회)제7차(2021년11월09일)	95
외교통일	제388회(2021.06.04.~2021.07.03.) 제1차(2021년06월22일)	40
국 방	제390회(2021.08.17.~2021.08.31.) 제1차(2021년08월20일) (부록)	81
행정안전	제391회(2021.09.01.~2021.12.09.)(정기회)제7차(2021년11월15일) (부록)	138
문화체육관광	제394회(2022.03.07.~2022.04.05.) 제1차(2022년03월29일) (부록)	1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제391회(2021.09.01.~2021.12.09.)(정기회)제9차(2021년12월03일) (부록)	14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제388회(2021.06.04.~2021.07.03.) 제1차(2021년06월28일)	95
보건복지	제391회(2021.09.01.~2021.12.09.)(정기회)제5차(2021년11월11일) (부록)	272
환경노동	제397회(2022.05.03.~2022.06.01.)제2차(2022년05월04일)	255
국토교통	제395회(2022.04.06.~2022.04.27.) 제1차(2022년04월25일)	225
여성가족	제391회(2021.09.01.~2021.12.09.)(정기회) 제1차(2021년09월09일) (부록)	47

«제21대 국회 1차년도 상임위원회별 상정건수가 가장 많은 회의일 현황»

위원회	집회 차수 (일자)	상정처리된 안건수
국회운영	제382회 제2차(2020년09월24일)	112
법제사법	제385회 제1차(2021년03월16일)	167
정무	제384회 제2차(2021년02월17일)	147
기획재정	제382회 제7차(2020년11월06일)	347
교육	제384회 제1차(2021년02월16일)	125
과학기술정보통신	제384회 제1차(2021년02월01일)	99
외교통일	제382회 제3차(2020년09월28일)	52
국방	제382회 제9차(2020년11월09일)	76
행정안전	제382회 제14차(2020년11월17일)	217
문화체육관광	제384회 제4차(2021년02월24일)	1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제386회 제1차(2021년4월27일)	1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제384회 제3차(2021년02월23일)	161
보건복지	제382회(정기회) 제9차(2020년11월17일)	405(399개 법안)
환경노동	제384회 제2차(2021년02월16일)	112
국토교통	제382회(정기회) 제1차(2020년09월08일)	135
여성가족	제382회(정기회) 제6차(2020년12월02일)	54

(5) 국감직전 및 도중 상임위 회의현황

2021년도 국정감사의 시작 전 또는 국정감사 도중에 위원회 회의를 연 경우는 모두 11개 상임위원회에서 32회였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해(2020년도 국정감사)와 같이 6차례로 가장 많이 회의를 하였고,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각각 4차례씩 회의를 하였다.

주로 국정감사 일정 변경, 2021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이나 증인이나 참고인의 출석요구를 철회하는 것이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경우에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회의도 하였다.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에는 국정감사 시작전에 회의를 통해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의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 횡령사건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 2021년도 국정감사 도중(직전 포함) 상임위 회의 개최 현황 >

위원회	횟수	위원회	횟수	위원회	횟수
법제사법	1	행정안전	2	보건복지	3
정 무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4	환경노동	6
과학기술정보통신	4	문화체육관광	3	국토교통	2
외교통일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3	계	32

< 2020년도 국정감사 도중(직전 포함) 상임위 회의 개최 현황 >

위원회	횟수	위원회	횟수	위원회	횟수
국회운영	1	과학기술정보통신	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4
법제사법	1	국 방	2	보건복지	5
정 무	1	행정안전	4	환경노동	6
기획재정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4	국토교통	2
교 육	3	문화체육관광	2	계	40

(6)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의 위원회 사·보임 현황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사보임을 살펴보면, 국회운영위원회(88회)나 여성가족위원회(8회) 등의 겸임상임위원회를 제외하고도 본상임위원에서 76명의 의원이 무려 267회 사·보임을 하였다.

사·보임은 사임과 보임의 준말로 사임과 보임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긴 조어이다.

2차년도 사·보임은 처음에는 여·야간 상임위원장 배분 합의(정무, 교육, 문체, 농림, 환노, 국토교통위 위원장 국민의힘 몫)로 인해 사·보임이 있었으며, 후반에는 전략적 사보임으로 특정이슈(대장동 국감, 검수완박 법안 처리, 군 성폭력문제 등)에 대한 사·

보임도 행해졌다. 장관 출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상임위의 빈자리로 이동하는 사·보임이 행해졌다. 황희 의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한정애 의원(환경부장관)의 사보임이 많은 이유다. 이인영 의원(통일부장관)과 박범계 의원(법무부장관)도 각각 4회 사·보임을 하였다.

«21대 국회 2차년도 사·보임이 많았던 의원»

위원명	연월일	사보임	위원회	출처국회공보
김승원	2021-08-24	보임	법제사법위원회	2021-118
김승원	2021-08-27	사임	법제사법위원회	2021-120
김승원	2022-02-25	보임	법제사법위원회	2022-22
김승원	2022-03-03	사임	법제사법위원회	2022-24
김승원	2022-03-07	보임	법제사법위원회	2022-24
김승원	2022-03-28	사임	법제사법위원회	2022-30
김승원	2021-08-24	사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118
김승원	2021-08-27	보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120
김승원	2022-02-25	사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22
김승원	2022-03-03	보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24
김승원	2022-03-07	사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24
김승원	2022-03-28	보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2-30
권성동	2021-06-21	보임	법제사법위원회	2021-87
권성동	2022-04-12	사임	법제사법위원회	2022-37
권성동	2022-04-12	보임	기획경제위원회	2022-37
권성동	2022-04-28	사임	기획경제위원회	2022-48
권성동	2022-04-28	보임	외교통일위원회	2022-48
권성동	2021-06-15	사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85
권성동	2021-06-15	보임	환경노동위원회	2021-85
권성동	2021-06-21	사임	환경노동위원회	2021-87
박수영	2021-10-18	사임	정무위원회	2021-146
박수영	2021-10-20	보임	정무위원회	2021-148
박수영	2022-03-21	사임	정무위원회	2022-28
박수영	2022-03-28	보임	정무위원회	2022-30
박수영	2022-03-21	보임	국방위원회	2022-28
박수영	2022-03-28	사임	국방위원회	2022-30
박수영	2021-10-18	보임	행정안전위원회	2021-146
박수영	2021-10-20	사임	행정안전위원회	2021-148
윤영덕	2021-06-22	사임	교육위원회	2021-88
윤영덕	2021-06-25	보임	교육위원회	2021-92

위원명	연월일	사보임	위원회	출처국회공보
윤영덕	2021-11-19	사임	교육위원회	2021-169
윤영덕	2021-12-22	보임	교육위원회	2021-187
윤영덕	2021-11-19	보임	외교통일위원회	2021-169
윤영덕	2021-12-22	사임	외교통일위원회	2021-187
윤영덕	2021-06-22	보임	행정안전위원회	2021-88
윤영덕	2021-06-25	사임	행정안전위원회	2021-92
한정애	2021-10-18	보임	정무위원회	2021-146
한정애	2021-10-20	사임	정무위원회	2021-148
한정애	2021-09-16	사임	행정안전위원회	2021-131
한정애	2021-09-23	보임	행정안전위원회	2021-133
한정애	2021-10-18	사임	행정안전위원회	2021-146
한정애	2021-10-20	보임	행정안전위원회	2021-148
한정애	2021-09-16	보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131
한정애	2021-09-23	사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133
홍준표	2022-03-21	보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28
홍준표	2022-03-28	사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2-30
홍준표	2022-01-14	보임	국방위원회	2022-8호
홍준표	2022-03-21	사임	국방위원회	2022-28
홍준표	2022-03-28	보임	국방위원회	2022-30
홍준표	2022-01-14	사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2022-8호
황희	2021-08-25	보임	정무위원회	2021-118
황희	2021-09-01	사임	정무위원회	2021-122
황희	2021-06-07	보임	교육위원회	2021-80
황희	2021-06-10	사임	교육위원회	2021-82
황희	2021-11-02	보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157
황희	2021-06-07	사임	국방위원회	2021-80
황희	2021-06-10	보임	국방위원회	2021-82
황희	2021-08-25	사임	국방위원회	2021-118
황희	2021-09-01	보임	국토교통위원회	2021-122
황희	2021-11-02	사임	국토교통위원회	2021-157

Ⅲ. 제21대국회 전반기(21,1~2),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율

2차년도 법안투표율 성적은 18점 만점에 14.94점

법률연맹, 제21대 국회 전반기 본회의 전자표결(총1,510회)의 법안투표율 전수조사 발표

“ 국회의원의 **최종요** 책무인 입법<법안투표>과정에 “거수기 노릇이나 불참” 하는 것은 **의원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다** ”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율³⁾ 성적은 C 학점(78.11%)

- 국회 본회의는 **통법부로 전략**!! 1510건 중 찬반토론은 43개에 불과 <국회법 93조는 있으나 마나>
- 의원은 **법안내용도 모른채 표결**!! 법사위 통과후 하루 만에 본회의 상정가능<국회법 제93조의 2>
- 국회의원이 **법안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국익과 국민권익을 위한**” **입법책임**을 방기하는 행태

- 법안투표율 전체 1위 김민기(99.93%), 2위 서삼석(99.74%), 3위 전용기(99.60%)
- 다선의원 일수록 법안투표율 **불성실/무책임** - 4선의원- 평균 법안투표율 67.43%(순위공개 3쪽)
- **교섭단체별** 법안투표율 : 더불어민주당(85.65%), 국민의힘(65.65%), 비교섭(82.78%)
--- 국민의힘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일방적(?)국회운영에 반발 **법안투표 보이콧**한 탓(?)인 듯
- 지역별 법안투표율 1위 세종(95.89%) 2위 전남(93.68%)
 꼴찌 경남(54.63%) 16위 충북(67.98%)
- 법안내용도 모른채 **무조건(거수기) 찬성**하는 건 무책임 / **기권, 반대**라도 하는 의원이 있어 희망
 반대건수 1위 김웅(179건), 2위 한기호(154건), 3위 박대출(139건) <모두 국민의힘>
 기권건수 1위 정경희(358건), 2위 김웅(341건), 3위 김미애(274건) <모두 국민의힘>

1. 전반기 전자표결 1510회 전수조사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NGO/NPO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제21대 국회 전반기(2020.5.30.~2022.5.29) 국회의원별 법안투표율을 분석해 발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1차년도 822회, 2차년도 688회 총 1,510회 전자표결)

<<교섭단체별 제21대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법안투표율 상위10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명	선수	선거구		법안투표율	의원명	선수	선거구		법안투표율
김민기	3	경기	용인시을	99.93%	윤창현	초	비례		95.76%
서삼석	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99.74%	정동만	초	부산	기장군	93.77%
전용기	초	비례		99.60%	이헌승	3	부산	부산광역시진구을	93.64%
허종식	초	인광	동구미추홀구갑	99.40%	임이자	재	경북	상주시문경시	93.38%
기동민	재	서울	성북구을	99.07%	김도읍	3	부산	북구강서구을	92.91%

3) 법안투표율 : 본회의에서 전자투표 표결 처리된 의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표결을 한 건수의 비율
(국회의원 표결참여건수/ 의원별 참여해야할 본회의 표결처리건수×100)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명	선수	선거구		법안투표율	의원명	선수	선거구		법안투표율
서동용	초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99.07%	박수영	초	부산	남구갑	90.73%
정필모	초	비례		99.07%	이주환	초	부산	연제구	88.28%
윤관석	3	인천	남동구을	99.01%	이종성	초	비례		87.42%
서영석	초	경기	부천시정	98.87%	윤주경	초	비례		86.75%
여기구	재	충남	당진시	98.81%	박형수	초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86.49%

«지역별 제21대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법안투표율 1위/최하위(비례대표 포함)»

지역	1위 의원					지역	최하위 의원				
	의원명	정당	선거구	선수	법안투표율		의원명	정당	선거구	선수	법안투표율
서울	기동민	민	성북구을	재	99.07%	서울	배현진	국	송파구을	초	41.26%
부산	정동만	국	기장군	초	93.77%	부산	장제원	국	사상구	3	30.99%
대구	양금희	국	북구갑	초	85.76%	대구	주호영	국	수성구갑	5	37.42%
인천	허종식	민	동구미추홀갑	초	99.40%	인천	윤상현	국	동구미추홀을	4	21.85%
광주	윤영덕	민	동구남구갑	초	98.28%	광주	송갑석	민	서구갑	재	58.41%
대전	박영순	민	대덕구	초	89.40%	대전	이상민	민	유성구을	5	53.97%
울산	서범수	국	울주군	초	83.58%	울산	박성민	국	중구	초	51.46%
세종	홍성국	민	세종시갑	초	96.16%	세종	세종 하위는 전체 평균 이상임				
경기	김민기	민	용인시을	3	99.93%	경기	최춘식	국	포천시가평군	초	50.79%
강원	허영	민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갑	초	92.45%	강원	권성동	국	강릉시	4	53.77%
전북	한병도	민	익산시을	재	98.21%	전북	이용호	국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재	53.18%
전남	서삼석	민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재	99.74%	전남	전남하위는 전체 평균 이상임				
충북	임호선	민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초	94.70%	충북	박덕흠	국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3	10.99%
충남	여기구	민	당진시	재	98.81%	충남	홍문표	국	홍성군예산군	4	51.66%
경북	임이자	국	상주시문경시	재	93.38%	경북	송언석	국	김천시	재	25.30%
경남	김정호	민	김해시을	재	90.93%	경남	김태호	국	산청군합천군거창군합천군	3	11.66%
제주	위성곤	민	서귀포시	재	97.02%	제주	송재호	민	제주시갑	초	65.23%
비례	전용기	민	비례대표	초	99.60%	비례	권은희	국		3	26.69%

2.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율 분석

- (1) 제21대 국회 전반기 본회의 법안투표율 90%이상 의원은 80명이었고, 그 다음으로 80%대가 85명, 70%대가 40명이었다. 60%대는 29명이었고, 50%대 26명, 40%대 6명, 40% 미만 13명이었다.
- (2) 당선횟수별로 보면 4선 의원이 가장 저조하여 평균투표율이 67.43%에 불과했다. 초선의원의 법안투표율은 82.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재선의원으로 76.36%이었으며, 5선 이상 의원은 70.79%였다.

(3) 제21대 국회 1차년도에서도 3대 쟁점법안(남북관계법, 국정원법, 공수처법)과 2차년도 검수완박법안(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있었으나, 필리버스터(filibuster)의 성격은 발휘되지 못했다. 무제한 토론(국회법 § 106의2)을 포함해 전체 표결법안(1510건) 중 **43건**(1차년도 21건, 2차년도 22건)만(전체 표결법안의 **2.85%**) 표결시 찬반토론(국회법 § 106조)을 하였고, 대부분 찬반토론도 없이 무더기로 법안(100건 이상 4회)을 처리하였다. 찬반토론으로 국민의힘 수정안은 부결되었고, 원안부결된 법안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개**였다.

3. 법안표결에 있어서 법안정보 충실화 필요

이번 조사를 총괄한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본회의가 사실상 찬반토론없이 통법과정으로 전락해 다선 중진의원들이 법안투표참여율이 저조한 가운데, 법안에 대한 찬반토론이 많아지고, 반대·기권법안수가 많아지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국회의원이 법안표결에 불참하는 것은 무책임한 입법권 포기행태일 뿐더러, 일시에 100여개씩 처리되는 내용도 모르는 법안의 졸속처리는 즉시 지양되어야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4. 제21대 국회 전반기 4선이상 다선의원 법안투표율 순위

법안표결시 참여는 국회의원의 책무라 할 것인데, 모범을 보여야할 다선의원들이 투표율이 저조하여 법률연맹이 조사한 4선이상 다선의원의 법안투표율을 공개하여 투표율을 제고하고자 발표한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4선이상 다선의원의 법안투표율 순위»

순위	의원명	정당	선거구		당선횟수	법안투표율
1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	5선	95.10%
2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갑	4선	94.97%
3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갑	4선	93.44%
4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갑	4선	93.05%
5	설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부천시을	5선	90.86%
6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구리시	4선	88.01%
7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수원시무	5선	87.75%

순위	의원명	정당	선거구		당선회수	법안투표율
8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양주시	4선	84.57%
9	서병수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진구갑	5선	84.50%
10	김기현	국민의힘	울산광역시	남구을	4선	82.25%
11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부천시병	4선	78.21%
12	정진석	국민의힘	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5선	76.95%
13	박진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강남구을	4선	76.21%
14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시흥시을	5선	72.78%
15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	부평구을	4선	65.30%
16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충청북도	청주시청원구	5선	62.85%
17	이명수	국민의힘	충청남도	아산시갑	4선	62.72%
18	조경태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사하구을	5선	61.39%
19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4선	60.79%
20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노원구을	4선	55.23%
21	박병석	무소속	대전광역시	서구갑	6선	55.10%
22	심상정	정의당	경기도	고양시갑	4선	54.17%
23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	유성구을	5선	53.97%
24	권성동	국민의힘	강원도	강릉시	4선	53.77%
25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갑	4선	51.92%
26	홍문표	국민의힘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4선	51.66%
27	권영세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용산구	4선	45.64%
28	주호영	국민의힘	대구광역시	수성구갑	5선	37.42%
29	윤상현	국민의힘	인천광역시	동구미추홀구을	4선	21.85%

5.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율 세부 분석

(1) 10건 중 4건도 투표하지 않은 의원이 13명

국회법 제112조 제1항 전자표결에 부쳐진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율을 분석해 본 결과, 10건 중 4건도 참여하지 않은 의원이 13명으로 조사되었다.

법안투표율	의원수
90%이상	80
80%이상~90%미만	85
70%이상~80%미만	40
60%이상~70%미만	29
50%이상~60%미만	26
40%이상~50%미만	6
30%이상~40%미만	13

(2) 당선횟수별 법안투표율은 초선의원(82.73%)이 가장 높고,

당선횟수가 높을수록 낮아져

제21대 국회 전반기 초선의원의 법안투표율 평균이 82.73%(1차년도 86.87%)로 가장 높고, 재선의원의 투표율은 76.36%(1차년도 79.82%), 3선의원의 법안투표율은 70.40%(1차년도 71.21%)이었다.

4선 의원의 법안투표율은 67.43%(1차년도 69.70%)로 낮고, 5선이상 의원의 투표율은 70.79%(1차년도 68.63%)였다.

지난 제20대국회와 같이 법안투표율은 당선횟수가 증가할수록 저조한 것은 여전하였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법안투표율 당선횟수별 현황>>

당선횟수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평균
법안투표율	82.73%	76.36%	70.40%	67.43%	70.79%	78.11%
의원수	146	67	37	18	11	279

(3) 교섭단체별 법안투표율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균이 85.65%로 가장 높아

더불어민주당의 법안투표율은 평균 85.65%로 전체 평균 78.11%보다 높았다.

제21대 국회 전반기에서 거대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법안처리를 많이 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법안투표율은 평균 65.65%(1차년도 72.50%)로 많이 저조하여 당 방침에 따라 법안표결 불참 등의 강수를 두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안투표율 교섭단체별 현황>>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	평균
법안투표율	85.65%	65.65%	82.78%	78.11%
의원수	161	103	15	279

(4) 지역별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율 :

최고 세종(95.89%), 2등 전남(93.68%)

꼴찌 경남(54.63%) 16등 충북(67.98%)

지역별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율을 분석해보면, 최고의 법안투표율은 세종자치도

(95.89%)이며, 2위는 전라남도로 95.86%였다. 그 다음으로 3위는 전라북도가 88.73%였다.

반대로 최악의 법안투표율은 경남지역으로 경남출신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율이 54.63%로 전반기 가장 저조하였다. 그 뒤는 충북(67.98%), 경북(69.23%)의 순으로 낮았다.

참고로 비례대표 출신 국회의원의 법안투표율은 78.87%(1차년도 84.97%)로 평균치와 비슷하였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의 평균법안투표율 지역별 순위 현황>>

지역별	법안투표율	의원수
세종특별자치시	95.89%	2
전라남도	93.68%	10
전라북도	88.73%	9
광주광역시	87.49%	8
경기도	83.08%	55
제주특별자치도	81.13%	2
서울특별시	80.63%	44
인천광역시	80.33%	12
비례대표	78.87%	45
대전광역시	77.08%	6
부산광역시	74.02%	18
강원도	73.05%	7
충청남도	72.91%	10
울산광역시	72.02%	6
대구광역시	71.04%	10
경상북도	69.23%	13
충청북도	67.98%	7
경상남도	54.63%	15

(5) 제21대 국회 전반기 투표성향 분석 :

법안 찬성건수 1위는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안 반대건수 1위는 김웅 의원(국민의힘)

표결 기권건수 1위는 정경희 의원(국민의힘)

1510회의 법안표결 과정에서 찬성표를 가장 많이 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

삼석 의원으로 1,499개 법안에 대해 찬성을 하였고, 반대한 법안은 주로 국민의힘이 제출한 수정안이었다. 전용기 의원과 윤관석 의원은 뒤를 이어서 1490건과 1488건에 대해 찬성을 하였다.

표결과정에서 반대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으로 179개 법안에 대해 반대하였고, 한기호 의원은 154개 법안, 박대출 의원은 139개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였다.

기권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으로 358개 법안(1차년도까지 258개)에 대해서 기권을 하였으며,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341개의 법안에 기권을 하였다. 김미애 의원은 274개 법안에 대해 기권하였다.

(6) 법안표결시 찬반토론 법안 43개,

토론참여의원은 1차년도 51명, 2차년도 34명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본회의 의결시 찬반토론⁴⁾이 이루어진 법안은 모두 43개 법률안이었다.

43개 법률안 중 5개 법률안은 무제한 토론이었으며, 38개 법률안은 시간제한이 있는 찬반토론이었다. 2021년 8월 31일 처리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회장)’은 찬반토론을 거쳐서 부결되었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에서는 무제한토론⁵⁾을 포함하여 토론을 한 의원은 모두 34명이었으며, 이중 3번 토론을 한 의원 2명, 2번 토론을 한 의원은 3명, 그리고 한번 토론을 한 의원은 29명이었고, 모두 합해 41번 토론을 하였다. 3개 법률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한 의원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었다.

2개 법률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안민석 의원은 무제한 토론을 하였다.

4) **국회법** 제106조(토론의 통지) 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려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가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전문개정 2018. 4. 17.]

5) **국회법** 제106조의2(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①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법안표결시 찬반토론 현황»

법안처리일	토론된 개정법안명	토론의원 (토론순)	당일표결 법안수	토론 법안수	비고
제388회 제6차 (2021년06월29일)	3·15의거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등 에 관한법률안	최형두	75	5	가결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 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	소병철			가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혜영/양기 대			가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			가결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안)	이영/강은미/ 이해식			가결
제388회 제7차 (2021년07월01일)	국가교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 률안(대안)	정경희/서동 용	3	2	가결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 정법률안(대안)수정안	조정훈/류호 정/정태호/김 태흠			가결
제389회 제2차 (2021년07월23일)			53	0	
제389회 제3차 (2021년07월24일)			28	0	
제390회 제1차 (2021년08월31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탄희/홍정 민	26	10	부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은주			가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혜영/용혜 인/정일영			가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 정안	박찬대			부결
	기초학력 보장법안(대안) 수정안	강득구			부결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수 정안	권인숙			부결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수정 안	박찬대			부결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류호정			부결
	사회서비스지원및사회서비스원설립· 운영에관한법률안(대안)	이종성/남인 순			가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기본법안(대안)	강은미/윤준 병			가결
제391회 제8차 (2021년09월28일)			39	0	
제391회 제9차 (2021년09월29일)			12	0	
제391회 제11차 (2021년11월11일)			56	0	

법안처리일	토론된 개정법안명	토론의원 (토론순)	당일표결 법안수	토론 법안수	비고
제391회 제12차 (2021년12월02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혜영/용혜인	74	1	가결
제391회 제14차 (2021년12월09일)			107	0	
제392회 제1차 (2021년12월31일)			33	0	
제392회 제2차 (2022년01월11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대안)	류호정	46	1	가결
제393회 제2차 (2022년02월14일)			2	0	
제394회 제1차 (2022년04월05일)			10	0	
제395회 제1차 (2022년04월15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만희	12	1	가결
제395회 제2차 (2022년04월27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권성동/김종민/김웅/안민석	0	1	무제한토론
제396회 제1차 (2022년04월30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형동/최기상/김미애/임호선	1	1	무제한토론
제397회 제1차 (2022년05월03일)			1	0	가결
제397회 제4차 (2022년05월29일)			110	0	

제21대 국회 제1차년도에는 무제한토론을 포함하여 토론을 한 의원은 모두 51명이었으며, 이중 3번 토론을 한 의원 3명, 2번 토론을 한 의원은 4명, 그리고 한번 토론을 한 의원은 44명으로 **61회** 토론을 하였다. 3개 법률안에 대해 찬반토론을 한 의원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 **김태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2개 법률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한 의원은 **김경협** 의원, **박수영** 의원, **이해식** 의원, **최형두** 의원이었다.

참고로 제20대 국회 1차년도 법안표결시 찬반토론이 이루어진 경우는 561건 중 한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법안표결시 찬반토론현황>>

법안처리일	개정법안명	토론의원(토론순)	당일 처리법안수	비고
2020-07-30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수진/송기현/강은미	2	
2020-08-04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김희재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박홍근/김진애/용혜인		

법안처리일	개정법안명	토론의원(토론순)	당일 처리법안수	비고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김경협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이해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허영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희국/소병훈		
2020-09-07			1	토론 없음
2020-09-24			71	토론 없음
2020-11-19			80	토론 없음
2020-12-01			51	토론 없음
2020-12-02			97	토론 없음
2020-12-09	상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제출)	조정훈	100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이은주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제출)	송석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배진교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제출)	강은미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및안전사회건설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제출)	성일종/박주민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제출)	장혜영/이해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	김기현		무제한토론
2020-12-10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이철규/김병기/조태용/홍익표/김웅/오기형/윤희숙/김경협/안병길/이용우/김태흠/김원이/박형수/김용민/윤두현	15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제출)	태영호/송영길/최형두/이재정/주호영		무제한토론
2021-1-8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안(대안)	권성동/강민정/김태흠/강은미/송석준/류호정	14	
2021-02-26	가덕도신공항건설을위한특별법안(대안)	곽상도/진성준/심상정/박수영	6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대표발의)	최형두/이병훈		
2021-03-24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김태흠/민형배	165	
2021-04-29			47	토론 없음
2021-05-21			98	토론 없음
계			821	

IV. 제21대 국회 전반기(21,1-2), 법안통과율 : 25.3%

제21대 국회 2차년도(21,2)의 법안발의 성적은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점수 : 20점 만점에 12.35점

통과된 공동발의 법안 점수 : 10점 만점에 09.81점

전반기 법안통과율 점수 : 10점 만점에 2.53점

“법률연맹, - 제21대국회 전반기(2년간) 통과된 -의원발의 법률안- 총 3,571건 조사 발표”

국회의원 **의정평가, 입법활동부터 -매년6월경 발표, 12분야 종합평가-** **현정대상** 선정시상
제21대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률안 **1건도 통과못시킨 의원** - 박진/윤호중 의원 등 11명
법안발의는 많았지만(의원당 평균 47.75개), **통과는 못시켜**(평균 12.19개 통과)
국회의원의 대표발의 법안통과율(25.33%)보다 정부제출 법안의 통과율(52.95%)이 훨씬높아

- ◆ 법안통과율⁶⁾: 비례대표 의원(19.45%)보다 지역구의원(26.46%)의 법안통과율이 높아
- ◆ 시도별 법안통과율: 의원수 2명인 세종시 1등, 제주시 꼴찌, 2등 전남, 16등 울산
- ◆ 교섭단체별 법안통과건수 1위: 민주당 서영교 의원(55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48건)
비례대표 의원 중에서는 이종성 의원(38건, 국민의힘)
- ◆ 2차년도 원안가결법안 94건 중 22건이 단순용어 개정 (예: 노임⇒임금, 지불⇒지급 등)
장경태 의원은 가결 8건 중 5건이 용어개정 / 국회사무처나 소관 상임위서 일괄정리 필요

1.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실적 및 전반기 통과율 분석

입법 및 사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제 21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3,571개**(처리된 3,825개 법안중 단순폐기 55개, 철회 155개, 기타 4개 제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제21대국회 전반기 법률안 현황	구분	광의의 의원발의법안 (14,831개)		정부 제출법안 (헌법§52)
		의원발의법안 (헌법§52, 국회법§79①)	위원회 제안법안(대안) (국회법 §51)	
	접수된 법률안	14,144	687	491
	통과된 법률안	3,571	685	260

(1) 제21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수 대비 통과된 법안수를 분석한 통과율 분포를 보면 50% 이상은 14명에 불과하였고, 110명의 의원이 20%미만

6) **의원별 법안통과율** : 의원이 발의하여 제21대 국회 전반기(2020. 5. 30.~2022.5.29.)에 처리된 가결법안과 대안반영폐기 법안의 합계를 당해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나눈 백분율값

대에 머물렀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통과된 대표법안이 한 건도 없는 의원이 11명이나 되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통과된 “대표법안 0건” 의원 : 11명〉

의원명	정당	선거구	당선횟수	의원명	정당	선거구	당선횟수
김 용	국	서울 송파구갑	초선	전해철	민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3선
김의겸	민	비례대표	초선	조수진	국	비례대표	초선
김희곤	국	부산 동래구	초선	조정훈	시	비례대표	초선
박병석	무	대전 서구갑	6선	최강욱	민	비례대표	초선
박 진	국	서울 강남구을	4선	홍영표	민	인천 부평구을	4선
윤호중	민	경기 구리시	4선	만: 더불어민주당, 국: 국민의힘, 사: 시대전환, 무: 무소속, 당 표시 및 통계는 2022.5.29 기준, 이하 같음			

(2) 교섭단체별 법안통과율 상위의원과 지역별 1위 의원은 아래와 같았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섭단체별 대표법안 통과율 상위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명	발의한 법안수	통과한 법안수	대표법안 통과율	의원명	발의한 법안수	통과한 법안수	대표법안 통과율
최인호	38	24	63.16%	임이자	75	44	58.67%
박찬대	26	16	61.54%	김희국	29	15	51.72%
천준호	27	15	55.56%	이헌승	39	19	48.72%
안호영	49	27	55.10%	추경호	99	48	48.48%
조응천	55	29	52.73%	송석준	29	14	48.28%
고용진	44	23	52.27%	백종헌	32	15	46.88%
서영교	106	55	51.89%	※ 교섭단체별 상위10위 중 평균 통과건수 이상만 표시			

〈제21대 국회 전반기 지역별 법안통과율 1위 의원〉

구분	의원명	발의한 법안수	통과된 법안수	법안 통과율	구분	의원명	발의한 법안수	통과된 법안수	법안 통과율
서울	천준호	27	15	55.56%	충남	박완주	41	17	41.46%
부산	최인호	38	24	63.16%	전북	안호영	49	27	55.10%
대구	추경호	99	48	48.48%	전남	주철현	26	13	50.00%
인천	박찬대	26	16	61.54%	경북	임이자	75	44	58.67%
울산	권명호	82	28	34.15%	제주	위성곤	63	16	25.40%
세종	강준현	33	16	48.48%	*법안통과율 1위 의원이 기준 미달인 지역 제외 (통과건수 평균 이상만 표시)				

(3) 의원이 발의하여 통과된 법안 중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은 707건(2차년도에는 30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2,864건)는 상임위원장 대안에 흡

수되는 **대안반영폐기법안**이어서 의원발의 책임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여전 하였다. 참고로 제21대 국회 전반기 가결법안이 한 건도 없는 의원은 134명이나 되었다.

(4) 2차년도(2021.5.30.~2022.5.29.)에 원안가결된 법안(94건)중에서는 단순용어 정리 등 법안이 22건을 차지하였다. 장경태 의원의 경우에는 원안가결 8건 중 5건이 용어정리 법안이었으며, 정청래 의원의 경우에는 3건이 단순용어 정리법안이었다. 이러한 용어정리 법안은 검토보고서 작성 등 인력낭비가 심하므로 국회사무처나 소관 상임위원회 일괄 정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분석되었다.

(5) 전반기 전체의원발의 법안수(현역의원은 물론 사직한 의원까지 포함)는 모두 14,144건인데, 1차년도에는 국회의원들이 9,543건을 발의하였으나, 2차년도에는 4,601건을 발의하여, 법안발의 추세는 크게 둔화되었다.

(6) 21대 국회 사실상 첫날(2020. 6.1)접수된 법안 55건 중 백혜련 의원 발의 2건 과 김영주의원 발의안 1건만 수정가결되고, 20건은 대안반영 폐기되었으며, 32개 법안은 2년 넘도록 아직도 소관 상임위원회 계류 중이다.

2. 실적 쌓기가 아닌 민생을 위한 법안 발의 필요

이번 조사를 총괄한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김대인 총재**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관련 법안심사소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하며,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위헌법률 등이 만들어지지 않을 것**” 이라며, “**실적 쌓기 법안발의가 아닌 국익과 민생에 직결된 법안의 충실한 입법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3.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의 통과율 분석

가. 제21대 국회 전반기 의원발의 대표법안의 통과율 총괄

제21대 국회 전반기 의원발의 대표법안 통과율을 살펴보면, 50%이상 높은 통과율을 보인 의원은 14명으로, 초선 2명, 재선 8명, 3선 3명, 5선 이상 1명이었

다. 가장 많은 통과율 분포는 20%이상 30%미만으로 84명이 의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구간에 초선의원 45명이 분포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10%이상 20%미만이 81명으로 많았으며, 통과된 법안이 0건이라 통과율이 0%인 의원이 11명이었다. 다만, 통과율 상위의원 중에서도 통과법안 건수가 평균(12.19건)이하인 의원도 많았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의 대표법안 통과율 분포구간별 분석>>

통과율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계/평균
50%이상	2	8	3	0	1	14
40%이상~50%미만	6	9	8	1	0	24
30%이상~40%미만	31	14	6	2	1	54
20%이상~30%미만	45	21	9	8	1	84
10%이상~20%미만	46	15	11	4	5	81
0%초과~10%미만	11	2	2	1	2	18
0건	6	0	1	3	1	11
계	147	69	40	19	11	286
통과율 평균	23.07%	30.73%	28.38%	20.65%	18.72%	25.33%

나. 교섭단체별 현역의원 대표발의법안의 통과율 분석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을 정당별로 분석해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은 26.94%(1차년도까지 20.2%)로 평균 25.33%(1차년도 17.59%)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1차년도보다 통과율 상승이 둔화되었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통과율은 23.89%(1차년도까지 14.56%)이었고, 무소속 등 비교섭단체 소속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통과율은 17.45%(1차년도 12.89%)로 가장 저조하였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교섭단체별 대표발의법안의 통과율 분석>>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	평균/계
전반기 대표발의법안 평균통과율	26.94%	23.89%	17.45%	25.33%
의원수	167	104	15	286
1차년도 대표발의법안 평균통과율	20.02%	14.56%	12.90%	17.59%

다. 당선횟수별 현역의원 대표발의법안의 통과율 분석

제21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의 통과율을 당선횟수별로 분석해 보면, 가장 높은 통과율을 보인 것은 재선 의원으로 30.73%(1차년도 22.34%)였으며, 그다음 3선의원으로 28.38%(1차년도 19.20%)로 재선과 3선의원의 대표법안 통과율이 높았다. 가장 저조한 것은 5선 의원이상 의원으로 18.72%(1차년도 14.06%)이었으며, 초선의원은 23.07%(1차년도 15.32%)로 1차년도와 같이 평균을 밑돌았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당선횟수별 대표발의법안의 통과율 분석»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평균/계
전반기 대표발의법안 평균 통과율	23.07%	30.73%	28.38%	20.65%	18.72%	25.33%
의원수	147	69	40	19	11	286
1차년도 대표발의법안 평균 통과율	15.32%	22.34%	19.20%	14.06%	17.47%	17.59%

라. 지역별 현역의원 대표발의법안의 통과율 분석

제21대 국회 전반기 광역시도별 대표발의법안 통과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로 2명 의원의 통과율이 39.57%(1차년도 27.54%)였다. 평균 통과율인 25.33%보다 13%p가량 높았다. 가장 낮은 시도는 제주특별자치도로 2명 의원의 통과율이 17.05%(1차년도 10.58%)에 불과했다. 의원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57명의 의원의 대표법안 통과율이 25.82%(1차년도 16.55%)였다. 서울의 경우에는 26.37%로 평균보다 조금 높았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광역시도별 대표발의법안 통과율 순위»

광역시도	전반기 대표발의법안 통과율	의원수	1차년도 대표발의법안 통과율
세종특별자치시	39.57%	2	27.54%
전라남도	31.75%	10	19.68%
전라북도	31.02%	9	26.69%
인천광역시	29.08%	12	20.97%
광주광역시	27.51%	8	17.54%
대전광역시	27.46%	7	19.56%
부산광역시	27.01%	18	19.32%
강원도	26.94%	7	13.82%

광역시도	전반기 대표발의법안 통과율	의원수	1차년도 대표발의법안 통과율
서울특별시	26.37%	47	22.10%
경기도	25.82%	57	16.55%
경상남도	25.58%	15	15.15%
충청남도	25.30%	10	16.57%
경상북도	24.84%	13	16.81%
대구광역시	24.28%	10	13.83%
충청북도	23.08%	7	17.76%
울산광역시	21.63%	6	12.85%
제주특별자치도	17.05%	2	10.58%
평균	25.33%	240	17.59%

마. 비례대표 의원의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안통과율

2022. 5. 29. 현재 현역 비례대표의원 46명의 법안통과율은 19.45%로 지역구 의원 평균 26.46%보다 크게 저조하였다. 1차년도까지도 13.41%로 전체 평균 17.59%에 못미쳤으며, 지역구 의원 평균 18.37%보다 낮았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지역구/ 비례대표 법안통과율 비교»

구분	비례대표	지역구	평균
전반기 대표발의법안 평균 법안통과율	19.45%	26.46%	25.33%
의원수	46	240	286
1차년도 대표발의법안 평균 법안통과율	13.41%	18.37%	17.59%

4.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대안반영폐기법안 포함)된 법률안 통계 분석

가. 현역 의원의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수 분석

제21대 국회 전반기 현역의원의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수의 평균은 12.19건(1차년도까지 5.72건)였는데, 비례대표의원의 경우에는 9.52건, 지역구 의원의 경우에는 12.70건으로 지역구 의원들의 통과된 대표법안수가 많았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통과된 대표법안건수 현황»

구분	비례대표	지역구	전체평균
통과된 평균 법안건수	9.52	12.70	12.19

통과 대표법안이 가장 많은 의원은 55건을 통과시킨 **서영교** 의원이었고, 그 다음 **추경호** 의원이 48건이었으며, 두 의원을 비롯해 30건 이상 통과된 대표법안을 가진 의원이 11명이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통과된 대표법안건수 상위의원»

의원명	정당	선거구		성별	당선횟수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여	3선	55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남	재선	48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	여	재선	44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여	재선	44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갑	여	초선	41
이종성	국민의힘	비례대표		남	초선	3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을	남	3선	38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	남	3선	32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	여	재선	31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을	남	재선	31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정	남	초선	30

나. 통과된 대표발의법안 0건 의원 : 김웅 의원 등 11명

박병석 국회의장은 대표발의 자체를 하지 않음

제21대 국회 전반기(제1차년도)에 통과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3,571건(1차년도까지 1,716건)를 분석 결과, 통과된 법안이 0건인 **국회의원은 모두 11명**(1차년도까지 25명)이었다. 초선의원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선 의원이 3명, 3선 의원과 5선이상 의원이 각각 1명이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통과된 대표발의법안 0건인 국회의원 현황(가나다순)»

의원명	정당	선거구	성별	당선	대표발의
김웅	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남	초선	8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남	초선	11
김희곤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남	초선	12
박병석	무소속	대전 서구갑	남	6선	0
박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	남	4선	13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경기 구리시	남	4선	10

의원명	정당	선거구	성별	당선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남	3선	8
조수진	국민의힘	비례대표	여	초선	10
조정훈	시대전환	비례대표	남	초선	18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남	초선	19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남	4선	8

다. 당선 횟수별 대표발의 법안 건수는

재선의원(15.72건)이 초선의원(11.34건)보다 많았다.

당선 횟수별 통과된 대표발의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제21대 현역 국회 의원 1인당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수는 평균 12.19건이었다. 재선의원의 평균 대표발의 법안 수는 15.72건(1차년도까지 8.15건)으로 가장 많았고, 3선의원이 13.63건(1차년도까지 6.81건)로 2위, 초선의원이 11.34건(1차년도까지 4.86건)로 3위였으며, 4선 의원은 6.89건(1차년도까지 3.42건), 5선 이상 의원은 5.27건(1차년도까지 2.29건)로 가장 저조하였다.

<<제21대 국회의원 전반기 당선횟수별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수 현황>>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평균
통과법안수 (가결+대안반영폐기)	11.34	15.72	13.63	6.89	5.27	12.19

라. 지역별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수

— 전북지역 의원(19.56건) 1위, 강원지역의원(8.86건) 꼴찌

지역별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 건수를 분석해 본 결과, 전라북도 출신 국회의원의 평균 대표발의 법안 건수가 19.56건(1차년도까지 9.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주 출신 의원의 대표발의 건수는 17.88건(1차년도까지 8.63건)으로 그 다음이었다.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 출신 의원의 대표발의건수가 17.50건(1차년도까지 8.5건)이었다.

반면,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8.86건(1차년도까지 3건)으로 가장 적었다.

서울출신 국회의원의 평균 대표발의 건수는 평균 12.55건(1차년도까지 5.76건)으로 평균 12.19건(1차년도까지 5.72건)보다 약간 많았다. 의원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는 12.88건(1차년도까지 6.22건)이었다.

«제21대국회 전반기 통과된 대표발의법안 건수 순위현황»

광역시도	전반기 통과된 대표법안건수	광역시도	전반기 통과된 평균 대표법안건수
전라북도	19.56	울산광역시	12.00
광주광역시	17.88	부산광역시	11.89
세종특별자치시	17.50	경상남도	11.33
전라남도	16.20	충청남도	10.70
대구광역시	14.30	대전광역시	10.57
경기도	12.88	충청북도	10.43
서울특별시	12.55	인천광역시	9.33
경상북도	12.08	강원도	8.86
제주특별자치도	12.00		

마. 통과된 대표법안 발의건수 상위의원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통과된 대표발의 법안수 상위의원을 교섭단체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더불어민주당 소속 통과된 대표법안건수 상위 의원 10인

의원명	선거구	당선	성별	통과된 대표법안건수
서영교	서울 중랑구갑	3선	여	55
송옥주	경기 화성시갑	재선	여	44
임오경	경기 광명시갑	초선	여	41
정청래	서울 마포구을	3선	남	38
박홍근	서울 중랑구을	3선	남	32
정춘숙	경기 용인시병	재선	여	31
한병도	전북 익산시을	재선	남	31
이용우	경기 고양시정	초선	남	30
백혜련	경기 수원시을	재선	여	29
송갑석	광주 서구갑	재선	남	29
조응천	경기 남양주시갑	재선	남	29

(2) 국민의힘 소속 통과된 대표법안건수 상위 의원 10인

의원명	선거구	당선횟수	성별	통과된 대표법안수
추경호	대구 달성군	남	재선	48
임이자	경북 상주시문경시	여	재선	44

의원명	선거구	당선헌수	성별	통과된 대표법안수
이종성	비례대표	남	초선	38
권명호	울산 동구	남	초선	28
이주환	부산 연제구	남	초선	26
강기윤	경남 창원시성산구	남	재선	21
김예지	비례대표	여	초선	20
김도읍	부산 북구강서구을	남	3선	19
김성원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남	재선	19
양금희	대구 북구갑	여	초선	19
이명수	충남 아산시갑	남	4선	19
이현승	부산 부산진구을	남	3선	19

5. 제21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 개황

가. 전체 14,144개 의원발의 법안 중 3,571개만 통과(대안반영포함)

제21대 국회 전반기(2020.5.30.~2021.5.29.)에 국회의원들이 14,144개(1차년도까지 9,543개)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이 중 통과된 법률안은 겨우 발의법안의 25%(1차년도 18%)에 불과한 3,571개(1,717개)였으며, 미처리되어 적체된 법률안이 10,319개(1차년도까지 7,670개)로 72.96%(1차년도까지 80.4%)나 되었다. 폐기, 철회로 법률이 되지 못한 경우는 254건으로 전체의 1.8%였다. 원안가결 내지 수정가결된 법안은 접수된 법안 14,144건(1차년도 9,543개)중 5%에 불과한 707건(1차년도까지 403건)이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률안 접수/처리법안 상세 현황»

구분	접수	처리	처리내용										미처리 (계류)	
			계	법률반영 ¹⁾				계	법률미반영 ⁷⁾					
				가결 ²⁾		대안 반영 ⁵⁾	수정안 반영 ⁶⁾		부 결 ⁸⁾	폐기 ⁹⁾	철회 ¹⁰⁾	반 려		기타 ¹¹⁾
				원 안 ³⁾	수정 ⁴⁾									
의원	14,144	3,825	3,571	220	487	2,864		254		95	155		4	10,319
위원장	687	686	685	683	2			1	1					1
정부	491	260	260	43	68	149								231
총계	15,322	4,771	4,516	946	557	3,013		255	1	95	155		4	10,551

자료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stat/statFinishBillSearch.do>)

- 1) 법률반영 :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으나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안에 반영된 법률안 등 국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된 법률안
- 2) 가결 :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안
- 3) 원안가결 : 위원회에서 수정되지 않은 법률안, 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안 등 원안이 본회의에서도 수정 없이 가결된 경우
- 4) 수정가결 : 본회의에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된 경우,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또는 제안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수정된 경우 등 당초 원안이 수정되어 가결된 경우
- 5) 대안반영 :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그 법률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법률안과 차이가 없음
- 6) 수정안반영 :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 본회의 자동부의되어 처리되는 경우, 수정안에 그 법률안의 내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어 폐기하기로 한 법률안
- 7) 법률미반영 :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률안,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법률안(대안반영 제외), 발의 후 철회된 법률안 등 최종적으로 법률에 반영되지 못한 법률안
- 8) 부결 :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률안
- 9) 폐기 :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 보고 후 7일(휴회·폐회 기간 제외) 이내에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어 폐기되는 법률안,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률안
- 10) 철회 : 법률안 발의 또는 제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철회한 법률안
- 11) 기타 : 위원회 심사결과 대안반영을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은 법률안 중 대안이 부결된 경우 또는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법률에 반영되지 못한 법률안 등
-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main.do>)

«제21대 국회 국회의원 발의 법안건수와 통과건수 현황»

구분	1차년도 (20.5.30~21.5.29)	2차년도 (21.5.30.~22.5.29)	전반기 합계
발의건수	9543	4601	14144
통과법안건수 (가결법안+대안반영폐기법안)	1,717 (가결법안 403)	1,854 (가결법안 304)	3,571 (가결법안 707)

나. 제21대국회 첫날(2020.6.1.)제출된 55개 법률안 중 3개 법률안만 수정가결

제21대 국회의 사실상 첫날(2020. 6. 1.) 발의된 법률안은 20대 국회보다 많은 55개 법률안이었으며, 이중 1차년도에 가결된 법률안 2개였으며, 2차년도 1개가 더 추가 가결되어 3개가 수정가결되었으며, 위원장안에 포함되어 대안반영폐기된 안은 20개였다.

«제21대 국회 첫날 발의된 법안 중 수정가결된 법안»

의안번호	법안명	제안일자	의결일자	의결결과
2100043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김영주의원 등 13인)	2020-06-01	2021-08-31	수정가결
21000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3인)	2020-06-01	2020-08-04	수정가결
210001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3인)	2020-06-01	2020-08-04	수정가결

아직 계류되어 있는 법안은 32개가 되었다. 통과율은 41.82%(1차년도까지 34.54%)로 평균 25.33%(1차년도까지 17.59%)보다 높지만 첫날 상징적으로 제출한 법안도 적체되어 그대로 임기말 폐기될 우려가 있다. 참고로 지난 제20대 국회 첫날(2016. 5. 30.) 앞 다투어서 발의하여 첫날 51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임기 말까지 계류되어 있다가 폐기된 법안이 30개나 되었다.

V. 상임위 소위 활동 : 6회 이상 회의 출석 따라 가감점

법률연맹 전수조사 발표, - 국회(21-2), “핵심기구-소위원회” <총 256회, 법안소위 178회> “회의실태 엉망”

<< 상임위 소위<10명 안팎으로 구성>만 통과<대개 2-3명이 주도>시키면, 그를 빙자해 상임위/법사위/본회의 통과시키는 악폐!>>

다수결이나 합의처리거나 양심없는 "소위"가 삼류(나쁜) 국회의 원흉이다

국회법 위반 제57조⑥⁷⁾(매월 3회이상 회의 의무화) - 25개 법안소위 한 곳도 안 지켜

- 법안소위만 통과시키면 국회의원 300명이 표결하는 본회의까지 자동 통과로 이어지는 망국적 입법 악폐개선이 시급함에도, 법안심사소위는 - 법안당 평균 5분 17초 꼴로 여/야/정부 등 2-3명 주도로 **줄속 심사**
- 국회법상의 1달에 3회 이상개최 커녕, 적체된 민생법안 몰라라하며, 1년에 고작 3번 개최한 소위는 --- 법제사법 2소위(소위원장 윤한홍, 장제원) ---문광위 체육관광법안소위(소위원장 이용, 배현진)
- 청원심사소위는 모든 상임위에서 1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어, 청원심사소위(장) 등은 세비반납해야

- 적체된 법안(10,186개)은 많은데, 1년간 소위 심사횟수(178회)는 줄어(최소 4.4배 이상 가동해야)
- 회의시간이 제일 적은, 문화체육관광위의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소위원장 배현진) 3시간 43분
- 회의횟수가 제일 적은 예결소위 --- 국토위(소위원장 박성민)와 외교위(소위원장 김석기)
- 1년에 한 차례도 회의안한 무책임한 청원심사소위 --- 법사(유상범), 정무(유의동), 교육(정경희) 과방(허은아), 외통(이태규), 국방(김민기), 행안(김용판), 문체(김승수), 농해수(서삼석), 산자중기(신정훈), 복지(서정숙), 환노(윤준병), 국토(김윤덕), 여가(서정숙)
- 대표발의위원의 ‘소위’에서의 진술권 보장 등 외부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등의 확대 필요

1. 상임위 전체회의의 소위 전수 조사

사법/입법감시 법률전문 NGO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가 제21대 국회 2차년도(2021.5.30~2022.5.29.) **상임위 소위(256회, 법안소위, 청원소위, 예결산 소위 등)의 국회의원 출석상황과,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178회 회의실태를 조사하였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및 적체법안수 현황>>

위원회 (위원장)	소위원회	회의시 소위원장	회의시간 (시:분:초)	회의수	2차년도 소위 상정법안수	2차년도 위원회별 처리법안수	위원회별 적체법 안수(2022.6.19. 현재)
국회운영 (윤호중/박홍근)	국 회 운 영 개 선	한병도	11:23:00	6	67	25	236
법제사법 (윤호중/박광온)	법 안 심 사 제 1	박주민	46:07:00	19	221	98	1121
	법 안 심 사 제 2	윤한홍/장제원	5:55:00	3	13		

7) 국회법 제57조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개최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2020. 12. 22.> 참고: 개정전 ‘모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회 이상 개최한다’였으므로 이 규정으로 해도 위반임

위원회 (위원장)	소위원회	회의시 소위원장	회의시간 (시:분:초)	회의수	2차년도 소위 상정법안수	2차년도 위원회별 처리법안수	위원회별 적체법 안수(2022.6.19. 현재)
정무 (윤관석/윤재옥)	법안심사제1	김병욱	12:17:00	5	169	93	970
	법안심사제2	김희곤	9:43:00	4	122		
기획재정 (윤후덕)	경제재정	류성걸	17:17:00	6	124	230	986
	조세	김영진	40:30:00	13	889		
교육 (유기홍/조해진)	법안심사	박찬대	18:41:00	4	358	95	513
과학기술정보통신 (이원욱)	과학기술지리법안심사	조승래	9:50:00	5	118	114	416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박성중/김영식	7:00:00	4	68		
외교통일 (송영길/이광재/공석)	법안심사	이재정	13:23:00	6	64	14	128
국방 (민홍철)	법률안심사	성일중	9:32:00	5	146	24	218
행정안전 (서영교)	법안심사제1	박재호	45:29:00	19	842	387	1157
	법안심사제2	박완수	14:08:00	5	131		
문화체육관광 (도종환/이재익)	체육관광법안심사	이용/배현진	3:43:00	3	32	125	371
	문화예술법안심사	박정	15:23:00	6	11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이개호/김태홍/공석)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위성곤	16:26:00	7	290	200	429
	해양수산법안심사	이양수/정점식	7:19:00	4	7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학영)	중소벤처기업	김정재/송갑석	18:38:00	6	112	172	547
	산업통원특허	이철규/강훈식	21:45:00	7	152		
보건복지 (김민석)	제1법안심사	강기윤/김성주	22:14:00	7	211	274	1240
	제2법안심사	김성주/강기윤	14:41:00	5	233		
환경노동 (송옥주/박대출)	환경법안심사	임이자	12:53:00	5	70	140	875
	고용노동법안심사	안호영	17:53:00	10	256		
국토교통 (진선미/이현승)	국토법안심사	조웅천	24:15:00	7	186	304	779
	교통법안심사	송석준	15:23:00	5	116		
여성가족 (정춘숙/송옥주)	법안심사	권인숙	6:48:00	2	20	13	200
계	27개 소위		458:36:00	178	5,205	2,308	10,186

2. ‘법안심사’의 핵심 관문이며, 실질적 입법 결정과정인 법안심사소위의 실태 분석

- (1) 제21대 제2차년도 **법안심사 소위**는 상임위원회당 1개 또는 2개를 운영하여 **총 27개가 운영**되었으며, 27개 소위의 제2차년도 1년간 회의는 총 178회(1차년도 255회)이고, 시간은 총 458시간 36분(1차년도 734시간 55분)이었다.
- (2) 국회에서 **법안심사의 최중요한 제1관문인 상임위 소위의 법안심사**는 소위원 회당 1년동안 평균 6.6회 소위원회회를 개최하였고, 1회당 평균 회의시간은 2

시간 34분 35초(1차년도 2시간 59분 34초)에 불과했다.

- (3) 상임위원회 소위 회의록을 보면 소위원회 회의 1회당 평균 29.2개(1차년도 34.26개)의 법률안을 심사하는데, 시간은 평균 5분 17초(1차년도 5분 14초)였다. 제2차년도 가장 짧은 소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진)로 1개 법안당 2분 44초였다.
- (4) 현재(6월 19일) **상임위원회별**로 전반기에 제출되어 **적체된 법안이 10,186개**(정보위 제외)이므로 2차년도에 처리된 법률안 2,308개 대비 법안심사 소위를 최소 **4.4배** 더해야 전반기 적체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분석된다.

3.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국회의원 평균 출석률 순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법안이나 예산심사를 하는 소위원회에서 국회의원이 전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실제로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경우에는 90.90%에 불과하였고, 예결산소위의 경우에는 89.13%에 불과하였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법안심사소위 위원의 회의별 평균 출석률 순위»

상임위원회	소위명칭	회의시 소위원장	회의	소위 현원 변동	국회의원 회의출석률
교 육 위 원 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박찬대	4	7	100.00%
여 성 가 족 위 원 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권인숙	2	8	10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김정재/송갑석	6	10/11	98.3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	위성곤	7	7	97.96%
정 무 위 원 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병욱	5	13	95.38%
국 회 운 영 위 원 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한병도	6	9	94.4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강기윤/김성주	7	11/12	92.8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정점식	4	7	92.86%
국 토 교 통 위 원 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이헌승/송석준	5	10	92.50%
환 경 노 동 위 원 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임이자	5	8	92.5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조승래	5	8	92.50%
환 경 노 동 위 원 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안호영	10	8	92.50%
행 정 안 전 위 원 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박완수	5	9	91.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박정	6	7	90.4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박주민	19	8	90.13%
행 정 안 전 위 원 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박재호	19	8/9	89.3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재정	6	8/9	88.6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	박성중/김영식	4	11	88.64%

상임위원회	소위명칭	회의시 소위원장	회의	소위 현원 변동	국회의원 회의출석률
국 방 위 원 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성일종	5	7	88.5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김성주/강기윤	5	10/12	88.33%
법 제 사 법 위 원 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윤한홍/장제원	3	11	87.8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조응천	7	11	87.88%
정 무 위 원 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김희곤	4	10/11	87.7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이철규/강훈식	7	11	87.2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조세소위원회	김영진	13	13	86.3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이용/배현진	3	7	80.95%
기 획 재 정 위 원 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류성걸	6	11/10	79.24%

*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의 현원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결과보고를 참고하였고, 출석의원수는 소위원회 회의록을 기준으로 하였음(결과보고의 출석인원과 소위원회 회의록이 다른 경우)

«제21대 국회 2차년도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소위 위원들의 출석률 순위»

상임위원회	소위명칭	회의시 소위원장	회의	소위 현원 변동	국회의원 회의출석률
정 무 위 원 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김한정	5	8	100%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정일영	8	5	95.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예산·결산소위원회	이철규	7	12/13	94.66%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오영훈/이해식	6	7/5	94.2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박성민	3	10/11	93.94%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상헌	5	9	93.33%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홍석준/김웅	5	9	93.33%
농 립 축 산 식 품 해 양 수 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만희/정점식	4	7	92.86%
교 육 위 원 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곽상도/조경태	5	8	92.5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홍익표	4	8	90.6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강병원	5	11	89.09%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추경호	3	9	88.8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박주민	5	7	85.00%
국 방 위 원 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기동민	7	7	76.19%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김석기	3	8/9	75.93%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김정재	3	9	70.37%

4. 제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회의 현황

«제21대 국회 2차년도 16개 상임위 소위원회 구성 및 회의현황»

구분	법안심사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계
소위구성	27	16	15	58
회의횟수	178	78	0	256
회의시간	458시간 36분	220시간 34분	0	679시간10분

«비교 : 제21대 국회 1차년도 16개 상임위 소위원회 구성 및 회의현황»

구분	법안심사소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계
소위구성	27	16	15	58
회의횟수	255	63	2	320
회의시간	734시간55분	226시간18분	44분	961시간 57분

상설소위원회 - 「국회법」 제57조제1항은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설소위원회는 제13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제도화되었고, 제15대 국회(2000.2.16)에서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에 3개의 상설소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제17대 국회(2005.7.28)에서 위원회의 운영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상설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상설소위원회의 설치를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다.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소관 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 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원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4. 16.>. ② **상임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심사를 분담하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4. 16.>

국회법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① **위원장(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49조제2항의 의사일정 및 개최일시**를 정한다. <개정 2019. 4. 16., 2020. 12. 22.>

2. 소위원회 개최일시: **매주 수요일·목요일 오전 10시**

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현황

(1) 제21대 국회 2차년도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횟수 순위

(소위원장 개선의 경우 마지막 회의 소위원장만 표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회의
법 제 사 법 위 원 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박주민	19
행 정 안 전 위 원 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박재호	19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조세소위원회	김영진	13
환 경 노 동 위 원 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안호영	10
농 립 축 산 식 품 해 양 수 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위성곤	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김성주	7
국 토 교 통 위 원 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조응천	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강훈식	7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박 정	6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회의
기 획 재 정 위 원 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류성걸	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송갑석	6
국 회 운 영 위 원 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한병도	6
외 교 통 일 위 원 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재정	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강기윤	5
국 방 위 원 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성일종	5
정 무 위 원 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병욱	5
과 학 기 술 정 보 방 송 통 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	조승래	5
행 정 안 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박완수	5
국 토 교 통 위 원 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송석준	5
환 경 노 동 위 원 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임이자	5
교 육 위 원 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박찬대	4
정 무 위 원 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김희곤	4
농 립 축 산 식 품 해 양 수 산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정점식	4
과 학 기 술 정 보 방 송 통 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김영식	4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배현진	3
법 제 사 법 위 원 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장제원	3
여 성 가 족 위 원 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권인숙	2

(2) 제21대 국회 2차년도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총 회의시간 순위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회의시간
법 제 사 법 위 원 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박주민	46:07:00
행 정 안 전 위 원 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박재호	45:29:00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조세소위원회	김영진	40:30:00
국 토 교 통 위 원 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조응천	24:15:00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김성주	22:14: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강훈식	21:45:00
교 육 위 원 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박찬대	18:41: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송갑석	18:38:00
환 경 노 동 위 원 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안호영	17:53:00
기 획 재 정 위 원 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류성걸	17:17:00
농 립 축 산 식 품 해 양 수 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위성곤	16:26:00
국 토 교 통 위 원 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송석준	15:23:00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박정	15:23:00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강기윤	14:41:00
행 정 안 전 위 원 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박완수	14:08:00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회의시간
외 교 통 일 위 원 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재정	13:23:00
환 경 노 동 위 원 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임이자	12:53:00
정 무 위 원 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병욱	12:17:00
국 회 운 영 위 원 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한병도	11:23:00
과 학 기 술 정 보 방 송 통 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	조승래	9:50:00
정 무 위 원 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김희곤	9:43:00
국 방 위 원 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성일종	9:32:00
농 립 축 산 식 품 해 양 수 산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정점식	7:19:00
과 학 기 술 정 보 방 송 통 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	김영식	7:00:00
여 성 가 족 위 원 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권인숙	6:48:00
법 제 사 법 위 원 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장제원	5:55:00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	배현진	3:43:00

(3) 제21대 국회 2차년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1법안당 평균회의시간 순위

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회의시간	총상정법안수	법안당 회의시간 평균
법 제 사 법 위 원 회	법 안 심 사 제 2 소 위	장제원	5:55:00	13	0:27:18
여 성 가 족 위 원 회	법 안 심 사 소 위 원 회	권인숙	6:48:00	20	0:20:24
외 교 통 일 위 원 회	법 안 심 사 소 위 원 회	이재정	13:23:00	64	0:12:33
법 제 사 법 위 원 회	법 안 심 사 제 1 소 위	박주민	46:07:00	221	0:12:3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환 경 법 안 심 사 소 위	임이자	12:53:00	70	0:11:03
국 회 운 영 위 원 회	국 회 운 영 개 선 소 위	한병도	11:23:00	67	0:10: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중 소 벤 처 기 업 소 위	송갑석	18:38:00	112	0:09:5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산 업 통 상 자 원 특 허 소 위	강훈식	21:45:00	152	0:08:35
기 획 재 정 위 원 회	경 제 재 정 소 위 원 회	류성걸	17:17:00	124	0:08:2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교 통 법 안 심 사	송석준	15:23:00	116	0:07:5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 화 예 술 법 안 심 사	박정	15:23:00	116	0:07:57
국 토 교 통 위 원 회	국 토 법 안 심 사	조웅천	24:15:00	186	0:07:4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 육 관 광 법 안 심 사	배현진	3:43:00	32	0:06:58
행 정 안 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박완수	14:08:00	131	0:06:2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김성주	22:14:00	211	0:06: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김영식	7:00:00	68	0:06: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해 양 수 산 법 안 심 사	정점식	7:19:00	79	0:05:3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	조승래	9:50:00	118	0:05:00
정 무 위 원 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김희곤	9:43:00	122	0:04:47
정 무 위 원 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병욱	12:17:00	169	0:04:22
환 경 노 동 위 원 회	고 용 노 동 법 안 심 사	안호영	17:53:00	256	0:04:11

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회의시간	총상정법안수	법안당 회의시간 평균
국 방 위 원 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성일종	9:32:00	146	0:03:55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강기윤	14:41:00	233	0:03:4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위성곤	16:26:00	290	0:03:24
행 정 안 전	법안심사제1소위	박재호	45:29:00	842	0:03:14
교 육 위 원 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박찬대	18:41:00	358	0:03:08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조 세 소 위 원 회	김영진	40:30:00	889	0:02:44

(4) 제21대 국회 2차년도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1회의당 평균회의시간 순위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회의시간	회의	평균회의시간
교 육 위 원 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박찬대	18:41:00	4	4:40:15
국 토 교 통 위 원 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조응천	24:15:00	7	3:27:51
여 성 가 족 위 원 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권인숙	6:48:00	2	3:24:00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김성주	22:14:00	7	3:10:3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조 세 소 위 원 회	김영진	40:30:00	13	3:06:5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강훈식	21:45:00	7	3:06: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중 소 벤 처 기 업 소 위	송갑석	18:38:00	6	3:06:20
국 토 교 통 위 원 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송석준	15:23:00	5	3:04:3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강기윤	14:41:00	5	2:56:1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경 제 재 정 소 위 원 회	류성걸	17:17:00	6	2:52:50
행 정 안 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박완수	14:08:00	5	2:49:36
환 경 노 동 위 원 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임이자	12:53:00	5	2:34:3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	박정	15:23:00	6	2:33:50
정 무 위 원 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병욱	12:17:00	5	2:27:24
정 무 위 원 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김희곤	9:43:00	4	2:25:45
법 제 사 법 위 원 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박주민	46:07:00	19	2:25:38
행 정 안 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박재호	45:29:00	19	2:23:3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위성곤	16:26:00	7	2:20:51
외 교 통 일 위 원 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재정	13:23:00	6	2:13:50
법 제 사 법 위 원 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장제원	5:55:00	3	1:58: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	조승래	9:50:00	5	1:58:00
국 방 위 원 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성일종	9:32:00	5	1:54:24
국 회 운 영 위 원 회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한병도	11:23:00	6	1:53:5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해 양 수 산 법 안 심	정점식	7:19:00	4	1:49:45
환 경 노 동 위 원 회	고 용 노 동 법 안 심 사	안호영	17:53:00	10	1:47:1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김영식	7:00:00	4	1:45: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 육 관 광 법 안 심 사	배현진	3:43:00	3	1:14:20

«참고» 제21대 국회 전반기 법안처리건수 및 위원회별 현재 적체된 법안수 현황

상임위원회	위원장	법안소위명칭	소위원장	상임위별 적체법안수 (2022. 6. 19 현재)	2차년도 처리법안수
국 회 운 영 위 원 회	박홍근	국 회 운 영 개 선	한병도	236	25
법 제 사 법 위 원 회	박광온	법 안 심 사 제 1	박주민	1121	98
		법 안 심 사 제 2	장제원		
정 무 위 원 회	윤재옥	법 안 심 사 제 1	김병욱	970	93
		법 안 심 사 제 2	김희곤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윤후덕	조 세 심 사	류성걸	986	230
		경 제 재 정	김영진		
교 육 위 원 회	조해진	법 안 심 사	박찬대	513	9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이원욱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	조승래	416	114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김영식		
외 교 통 일 위 원 회		법 안 심 사	이재정	128	14
국 방 위 원 회	민홍철	법 률 안 심 사	성일종	218	24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서영교	법 안 심 사 제 1	박재호	1157	387
		법 안 심 사 제 2	박완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채익	문화예술법안심사	배현진	371	125
		체육관광법안심사	박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위성곤	429	200
		해양수산법안심사	정점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학영	산업통상자원특허	송갑석	547	172
		중 소 벤 처 기 업	강훈식		
보 건 복 지 위 원 회	김민석	제 1 법 안 심 사	김성주	1240	274
		제 2 법 안 심 사	강기윤		
환 경 노 동 위 원 회	박대출	환 경 법 안 심 사	임이자	875	140
		고용노동법안심사	안호영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이현승	국 토 법 안 심 사	조응천	779	304
		교 통 법 안 심 사	송석준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송옥주	법 안 심 사	권인숙	200	13
계		27개소위		10,186	2,308

※ 상임위별 두 개 법안소위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법률안으로 분배되어야 함

나. 제21대 국회 2차년도 상임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회의실적

(1) 제21대 국회 2차년도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소위 회의실적

상임위원회	소위명칭	소위원장	회의시간	회의	인원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추경호	5:56:00	3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박주민	18:50:00	5	7
정 무 위 원 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김한정	11:29:00	5	8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정일영	18:57:00	8	5
교 육 위 원 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조경태	12:57:00	5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홍익표	9:03:00	4	8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	김석기	8:10:00	3	9
국 방 위 원 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기동민	17:14:00	7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이해식	20:13:00	6	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이상헌	14:17:00	5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정점식	10:41:00	4	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예산·결산소위원회	이철규	35:32:00	7	1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강병원	16:57:00	5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김웅	11:22:00	5	9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박성민	6:14:00	3	11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김정재	2:42:00	3	9
계			220:34:00	78	135

(2) 제21대 국회 2차년도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소위 회의시간 순위

상임위원회	소위명칭	소위원장	회의시간	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예산·결산	이철규	35:32:00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이해식	20:13:00	6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정일영	18:57:00	8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예산결산기금심사	박주민	18:50:00	5
국 방 위 원 회	예산결산심사	기동민	17:14:00	7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예산결산심사	강병원	16:57:00	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이상헌	14:17:00	5
교 육 위 원 회	예산결산기금심사	조경태	12:57:00	5
정 무 위 원 회	예산결산심사	김한정	11:29:00	5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예산결산기금심사	김웅	11:22:00	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예산결산심사	정점식	10:41:00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예산결산심사	홍익표	9:03:00	4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예산·결산·기금심사	김석기	8:10:00	3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예산결산기금심사	박성민	6:14:00	3

상임위원회	소위명칭	소위원장	회의시간	회의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예 산 결 산 심 사	추경호	5:56:00	3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예 산 결 산 심 사	김정재	2:42:00	3

(3) 제21대 국회 2차년도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소위 회의횟수 순위

상임위원회	소위명칭	소위원장	회의시간	회의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예 산 결 산 기 금 심 사	정일영	18:57:00	8
국 방 위 원 회	예 산 결 산 심 사	기동민	17:14:00	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예 산 · 결 산	이철규	35:32:00	7
행 정 안 전	예 산 · 결 산 기 금 심 사	이해식	20:13:00	6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예 산 결 산 기 금 심 사	박주민	18:50:00	5
정 무 위 원 회	예 산 결 산 심 사	김한정	11:29:00	5
교 육 위 원 회	예 산 결 산 기 금 심 사	조경태	12:57:00	5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예 산 결 산 심 사	이상헌	14:17:00	5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예 산 결 산 심 사	강병원	16:57:00	5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예 산 결 산 기 금 심 사	김웅	11:22:00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예 산 결 산 심 사	홍익표	9:03:00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예 산 결 산 심 사	정점식	10:41:00	4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예 산 결 산 심 사	추경호	5:56:00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예 산 · 결 산 · 기 금 심 사	김석기	8:10:00	3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예 산 결 산 기 금 심 사	박성민	6:14:00	3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예 산 결 산 심 사	김정재	2:42:00	3

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청원심사소위원회 실적

제21대 국회 2차년도 16개 상임위원회의 청원심사소위원회는 1년 동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기획재정위원회에는 청원심사소위원회가 1차년도에 이어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

참고로 국회에 아직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인 청원은 모두 79건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이 10건이었다. (출처: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022. 6. 19. 15:00방문)

<<제21대 국회 청원 처리 및 계류현황>>

(소위원장 : 2022. 5. 18. 기준)

위원회	위원장	접수	처리내용					위원회 계류
			채택	본회의 불부	철회	폐기	계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소위원장 없음	3						3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유상범	21		1			1	20
정 무 위 원 회	유의동	8		1			1	7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소위자체 없음	5						5
교 육 위 원 회	정경희	8		1			1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허은아	0						0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이태규	1		1			1	
국 방 위 원 회	김민기	1						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김용판	5		1			1	4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김승수	1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서삼석	6		2			2	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신정훈	5		1			1	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서정숙	10						10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윤준병	4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김윤덕	3		1			1	2
여 성 가 족 위 원 회	서정숙	1						1
미확정(위원회를 정하지 못함)		7			1		1	6
계		89		9	1		10	79

VI. 제21대 국회 2차년도(21-2) 기타 주요 의정활동 실적

1.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 : 국정감사 종합성적은 C- 학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자료를 토대로 해

국정감사 현장출석 3점,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및 준 우수위원 평가

문정권 5년차 국정감사성적, 법치기준 “빈사상태” / 후한평가 “C-”

한국의 국정감사는, 그나마 6.25전쟁과 독재를 극복하면서도 민주주의의 싹을 지켜낸 세계10위의 선진대국이 되는 나름의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서둘러 상시정책청문회 등 365일 상시국정감사를 도입하지 않으면 부패공화국을 면할 수 없다

**국감의 주역인 야당(국민의힘)은 - 용장도, 지장도 없이 헛발질만
여당은 정부잘못을 감싸고, ‘정책제시’에만 치중, 국감본래취지 퇴색**

- ▶ 모든 상임위 팻말논란 등 “단군 이래 최비리”라는 “대장동 등 토건비리” 쟁점화
-- 피감기관장들 답변회피/책임회피 -- 척결/규명 못하는 국회에 국민분노 --
-- 최대부패사건(대장동) 척결위한 **증인(152명) 1명도 채택못한 - 죽은국감**
- ▶ 국정감사에서 코로나(C-19) “정치방역과 백신사망 등” 의혹제기,
-- **백신 부작용 사망관련 자료제출도 거부, 부적절 방역으로 자영업자 등 초토화**
- ▶ 무더기 피감기관 채택 : 하루 10개 이상 피감기관 감사 24회나 (2020년 21회)
 - 과방위 하루 53개 피감기관 국감 그중 35개 기관의 장은 질의를 못받아
 - 국감일순 축소(15대이후 175일⇒ 21대 137일) 감사기관은 증가(15/16대 375개⇒ 21대 745개)
- ▶ 파행하면서 의원의 질의시간 제한 : 100군데 조사결과 총 2,957회 마이크 중단
 - 감사위원당 하루 1.59회 꼴로 마이크 꺼진 - 소리 없는 감사 실시
- ▶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세계 꼴찌 수준의 부끄러운 복지·민생·안전의 단면들**
 - 우리나라 자살율이 17년간 OECD 1위(복지위, 최연숙 의원)
 - 노인빈곤율은 OECD 1위 (운영위, 이수진 비례의원) / 고령화 속도 1위(통계청장)
 - 한국 가계부채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권(기재위, 김주영 의원)
 - 한시적 근로자 비중이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하면 압도적으로 1위 / 69%로 OECD평균의 약 5배(기재위, 추경호 의원)
 - 10대~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문화체육관광위, 임오경 의원)
 - 2년 연속 세계 꼴찌, OECD중 출산율 1명대 미만 유일국(정무위 이정문 의원)
 - 어린이 교통사고율 단연 세계 최고(행안위, 이해식 의원)

1. **[국감성적]** 지난 제15대 국회 말부터 23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밀착 모니터링 해온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 김대인 법률연맹 총재 외 22인)은 제 21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의 5년차 국정감사, 1988년 부활한지 34년째 국정감사인 올해 **국정감사**를 정량 및 정성평가에서 지난해 10월 15일 중간평가에서 밝힌 그대로 **C-학점 국정감사**였다고 평가합니다.

- 1) 중간평가 이후 국방위의 15일 군인공제회 등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당이 군인공제회 피켓 논란으로 파행이 되었고, 국감 마지막날 국회운영위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도 리본, 마스크 논란으로 귀중한 오전 시간을 파행으로 진행하여 더 나아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2)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감수감으로 인해 당사자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가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루어져 여야의 입장차를 비교할 수 있었으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복기되어 ‘대장동’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3) 올해 국정감사는 **대장동 사태**에 대한 여야 공방으로 손팻말 전투로 시작해, 윤석열 검찰총장(국민의힘 대선후보)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경선 승리자)에 대한 **후보검증(대선전초전)**으로 끝나면서, 부동산, 일자리, 경제실정, 백신참사, 외교 실패 등 정부 심판론을 앞세웠던 국민의힘은 날카롭지 못한 공세로 일관했고, 주요 상임위에서 **요청한 증인채택은 여당의 원천봉쇄에 대거 무산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옹호와 정부방어에만 치중하였다는 평가입니다.

2. **[국감행태]** ① 제21대 국회 두번째 국정감사는 지난해와 같이 그동안 정착되었던 ‘일문 일답’이 많이 사라지고, ② 정부여당이 국정감사의 본래적인 취지인 피감기관 직무집행의 문제점을 찾아 지적하고 시정케 하는 국감이 아닌 의원의 비전(정책제안)이나 의견을 길게 발표하는 **비전제시형 국감**으로 퇴보하였습니다.(야당의 입장에서는 피감기관의 답변까지 포함되는 진행방법 때문에 질의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괄질의를 하고 그 다음 답변을 하라고 요구함) ③ 코로나 위기라면서도 745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과다하게 선정했으며, ④ 국감조법으로 정해져 있는 ‘30일 국감’을 하지 않고 20일 국감을 고수한 채, 감사일정은 158일에서 137일로 대폭 축소(위원회별 평균 10일)하였습니다. ⑤ 국감기간 아닌 때에 할 수 있는 현장시찰과 민간인 증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여전하고, ⑥ 태

부족한 감사시간에 피켓, 리본, 마스크 논란, 증인채택논란과 여야간의 끼어들기 막말 등 불필요한 정쟁을 반복하였습니다. 《국회가 국감이 부활한 지 34년간 증인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연구를 하지 않아, 적절한 피감기관선정, 일반인 증인과 기관증인과의 중요성 정도를 알 수 없음》

3. **[국감개선]** 국회의원(감사위원)이 수년간 지적해도 피감기관은 시정이나 개선하지 않고 피감기관장은 그저 “예, 알겠습니다” 라는 형식적 면피성 답변이 많았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감사위원이 1년이 지나서야 감사장에서 되물어 **시정조치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맹탕 국감이 재현되었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의한 의원의 실명을 명시하여 지적한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를 국감이후에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질의실명제 실시) 또한 **현장시찰과 일반증인은 국감조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30일 중 10일간 정기국회 전 실시하도록 개선하여야** 합니다.

4. **[의원평가]**

제21대 국회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대장동 국감, 대선전초전 국감 등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국감이었고, ‘C-’ 학점 국감이었지만, 정책국감을 전개했다고 평가된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수상의원** 수는 **포지티브** 운동을 하는 본 모니터단의 성격과 노선에 비추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권영세·김영주·노웅래·안규백·우원식 의원 등 4선 중진위원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원의 25%를 수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 1) 기본적으로 **평균질의횟수와 질의응답시간**(본질의+보충질의+추가질의 합산횟수 평균), **질의내용전체를 종합 수집**하였습니다. 내용면에서는 예산집행관련 문제점 지적, 부정비리 지적, 정책관련 문제점 지적, 전년도 국정감사 시정조치내역 점검여부를 6단계(아주잘함 5점, 잘함 4점, 보통 3점, 못함 2점, 아주못함 1점, 해당사항 없음 0점)로 나누어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평균질의 횟수 이상 질의, 대안 또는 법과 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은 가점하고, 중복질의**(발전 없이 같은 내용을 중복 질의한 경우) **질의 매너**(막말, 소리 지르기, 질의시간 안지키기, 상대방 의원 비난) **감사매너**(끼어들기, 잡담, 딴짓) **국정감사 방해**(파행유발,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국감방해) 등은 **감점**하였고, 추천 및 지적의 경우에는 ①적시성(필요성) ②충실성 ③논리성(실효성) ④정확성(적법성) 등의 기준에 따랐습니다.

2)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의 경우 국정감사모니터위원들의 평가와 전문가들의 평가를 종합하여 잘한 의원들을 1차 선발(50%)한 후 선발된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여러 차례 교차하여 평가하였고(예: 한 상임위원회에서 A, B, C, D 의원들이 추천된 경우 AB, AC, AD, BC, BD, CD의 질의를 비교하여 평가함), 의원실에서 제출한 자료는 모니터단에서 모니터·분석·확보한 자료와 맞는지 내용을 비교 확인하여 평가에 반영하였으며, 국감불참 2일 이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고, 국감우수의원(국리민복상)은 각 상임위별 상위 25%내에서 선정하였습니다. 겸임 상임위의 경우에는 본상임위원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의원 중에서 선정하였습니다.

3) 이번 평가에서 모범의원으로, 5선이면서도 정확한 자료와 피감기관을 압도하는 정책질의로 국감의 생기를 불어 넣은 변재일 의원(과방위)과 서병수 의원(재정위) 그리고 당차원의 전략적 사보임 중에도 공무원 증원 문제 등 날카로운 정책질의와 함께 모범적인 감사를 한 이명수 의원(행안위)과 상임위원장으로 매 피감기관마다 정책질의를 하여 국정감사 활성화에 기여한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선정하였습니다.

4) 이번 우수 상임위원장 평가에서는 위원장의 리더십과 역량을 비중있게 평가하였고, 여야정쟁 속에서도 편파시비나, 파행없이 감사를 한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3선의 박광온 법사위원장(민), 윤재옥 정무위원장(국)과 박대출 환경노동위원장(국)을 선정하였습니다.

5. **[국감당부]** 김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은 “권력은 집중(분권-Balance)되거나 통제(감사-Check)가 없으면 반드시 부패한다.(Lord Acton)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모든 국가기관을 감사하는 국정감사의 의미는 막중하다. 그러므로 여당이라 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권력(정부)을 제대로 감사해야(헌법 제46조②, 국회법 제114의2)하고, 야당은 여당보다 더 엄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으로 무장해 사전준비와 철저한 현장점검을 거쳐 충실국감을 해야 할 것임에도, 이번 국감은 끝까지 상대방 대선주자에 대한 흠집내기에 치중하는 부실국감이었다.” 고 강조했습니다.

예년(근년12/27)보다 1개월 늦어진 - **국정감사 종합평가/국리민복상 수상자 발표 지연이유** : 2021 연말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주관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에 위중증 환자 등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자가격리/ 자발적 사무실 폐쇄 등으로 정밀평가에 시일이 걸렸음을 양해바랍니다.

2021년도 국정감사(21-2)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명단

(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23년 전통의--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 국정감사 국리민복상(모범의원상) (가나다 순)

변재일 의원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5선)	서병수 의원 (재정위, 국민의힘, 5선)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명수 의원 (행안위, 국민의힘, 4선)

■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위원장상)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박광온 국회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재욱 정무위원장 (국민의힘)
박대출 환경노동위원장 (국민의힘)	

■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위 원 회	선정 수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존칭 생략, 가나다순》 정당표시 : 더불어민주당(민), 국민의힘(힘), 시대전환(시)
국 회 운 영	6	성일종(국) 이수진(민) 임이자(국) 전주혜(국) 추경호(국) 홍기원(민)
법 제 사 법	4	송기현(민) 유상범(국) 조수진(국) 최기상(민)
정 무	6	강민국(국) 김희곤(국) 민병덕(민) 유동수(민) 윤창현(국) 이용우(민)
기 획 재 정	6	김수흥(민) 류성걸(국) 박흥근(민) 서일준(국) 우원식(민) 유경준(국)
교 육	3	권인숙(민) 이탄희(민) 정경희(국)
과 학 기 술 정 보 신	5	박성중(국) 조승래(민) 한준호(민) 허은아(국) 황보승희(국)
외 교 통 일	5	김경협(민) 김석기(국) 김영주(민) 조태용(국) 지성호(국)
국 방	4	강대식(국) 김민기(민) 신원식(국) 안규백(민)
행 정 안 전	5	김도읍(국) 김민철(민) 박완수(국) 박재호(민) 서범수(국)
문화체육관광	4	김승수(국) 김승원(민) 배현진(국) 임오경(민)
농 립 축 산 식 품	5	여기구(민) 위성곤(민) 이만희(국) 이양수(국) 이원택(민)
산 업 통 상 자 원	7	김정재(국) 신영대(민) 양금희(국) 양이원영(민) 이장섭(민) 이철규(국) 조정훈(시)
보 건 복 지	6	김미애(국) 신현영(민) 이종성(국) 전봉민(무) 정춘숙(민) 최혜영(민)
환 경 노 동	4	권영세(국) 김성원(국) 노웅래(민) 안호영(민)
국 토 교 통	7	김은혜(국) 김희재(민) 송언석(국) 조오섭(민) 조응천(민) 천준호(민) 하영제(국)
여 성 가 족	2	강선우(민) 서정숙(국)
비 고	79	1. 선정비율 : 상임위원회별 25% 범위 내에서 선정 2. 전체 340명(운영 28/ 여가 17) 중 79명으로 전체 23.24% 3. 겸임상임위는 본상임위에서도 우수하였음 4.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당시의 상임위원회임(사보임의 경우 맨 마지막 상임위)

2021년도 국정감사(21-2) 국리민복상 수상의원 통계

2021. 10. 27. 국정감사 종료시점 기준

① 교섭단체별

구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
선정의원(명)	41	43	2
전체의원(명)	163(169)	103	23
선정비율(%)	25.15%	41.75%	8.70%
검임상임위포함(명)	189	119	26
선정비율(%)	21.69%	36.13%	7.69%

※ 국회의장 제외. 더불어민주당(163인)의 경우에는 국무위원(6인)을 제외한 수치임 <<운영, 여성가족위원회 포함 의원수>>

② 당선횟수별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이상
선정의원(명)	46	23	10	6	2
전체의원(명)	149	73	42	19	12
선정비율(%)	32.21%	30.14%	19.05%	31.58%	16.67%

※ 박병석 국회의장(6선) 불포함

③ 여성의원

구분	여성의원(명)	우수의원(명)	선정비율(%)
의원수(명)	55	22	40.0%

※ 감사위원 295명 중 여성감사위원의 비율은 18.64%임

④ 지역구 / 비례대표

구분	비례대표	지역구
선정의원(명)	15	71
전체의원(명)	47	248
선정비율(%)	31.91%	28.63%

※ 지역구 의원 249명 중 국회의장님 제외

⑤ 지역구 의원의 선거구별

광역 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광역 시도	전체의원	선정의원	비율(%)
서울특별시	47	14	29.79%	강원도	8	4	50.00%
부산광역시	18	7	38.89%	충청북도	7	2	28.57%
대구광역시	12	6	50.00%	충청남도	11	3	27.27%
인천광역시	13	1	7.69%	전라북도	10	4	40.00%
광주광역시	8	1	12.50%	전라남도	10	1	10.00%
대전광역시	6	1	16.67%	경상북도	13	5	38.46%
울산광역시	6	1	16.67%	경상남도	16	5	31.25%
세종시	2	0	0.00%	제주도	3	1	33.33%
경기도	58	15	25.86%	계	248	71	28.63%

※ 국회의장은 국감위원이 아니므로 대전은 7명 중 국회의장 지역구인 대전시 서구갑 1명 제외

가.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의 성적은 C-학점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제21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의 성적을 지난해(D학점)보다 조금 상향된 ‘C-’ 학점으로 평가한다.

(1) 국감행태

- ①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동영상(주로 뉴스)을 재생하거나, 자기 의견을 길게 발표하는 비전제시형 국감으로 퇴보하였으며, 시간 부족으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일대일 질의/답변을 통한 생동감 있는 감사라는 국회법상의 일문일답원칙이 훼손되었다.
- ② 감사일정은 대폭 줄고, 코로나 위기라면서도 지난해보다도 40개가 증가한 745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선정했다.
- ③ 국감조법으로 정해져 있는 ‘30일 국감’을 하지 않고 21일 국감(행안위의 경우에는 26일)을 고수한 채, 감사일정은 대체 공휴일로 인해 3일 국감하고 4일 쉬는 3감 4휴 국정감사를 하였다.
- ④ 국감기간 아닌 때에 할 수 있는 현장시찰과 민간인 증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일부 위원회에서 여전하였고,
- ⑤ 태부족한 감사시간을 ‘대장동’ 팻말이 국회법 148조⁸⁾ 위반인지, 정치적 표현인지 논란으로 불필요한 파행을 반복하며 낭비(?)하였다. <<다행히 위원별로 협의가 이루어져 순차적으로 양당의 국회의원 앞 손팻말을 제거하기로 하였으나 10월 26일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 국정감사에서는 근조리본, 마스크의 문구 때문에 의사진행발언만 이어지다가 정회한 후 오후에 국정감사를 진행>>
- 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질의참고를 위해 캔, 물병, 병 등을 이용했고, 환경

8) **국회법**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노동위원회에서는 수조, 산업용 안전벨트(윤준병 의원), 문광위에서는 게임VR 시연(이성현 의원), 국토위원회에서는 양가면 개인형(송석준 의원) 등 소품이 등장하였으나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윤준병 의원은 수조에서의 물고기가 죽어서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비난성명을 받기도 하였음»

(2) 최대 이슈

① 대장동 국감 : 판교 대장동(이재명) 게이트 vs 국민의힘 게이트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국감장 곳곳에서 충돌하였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천하동인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른바 '50억 클럽' 명단을 공개해 당사자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진행된 것이라면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였다. 환노위에서는 광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이 쟁점이 되었고, 기재위는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법사위에서는 전 대법관의 관여여부와 이재명 선거법위반 재판에서의 영향력 행사 여부가 집중되었다. 그 외 정무위와 국토위 등 대부분의 상임위 국감장에서 관련 질의가 있었다.

«대장동 의혹 관련 국정감사 쟁점»

쟁점	내용	관련 상임위
초과이익 환수 조항 뺀 최종 결정자는 누구였나	민간사업자에게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환수해야 한다는 조항이 최종 사업협약서에서 빠진 경위 등	행정안전위, 국토교통위 등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련	컨소시엄 구성 당시 전후 사정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과정 하나은행 컨소시엄 측이 주주협약 변경 과정에서 화천대유에만 유리하게 바꾼 점	정무위 등
권순일 전 대법관 등 '호화 고문단' 영입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유명 법조인들로 구성된 화천대유의 '호화 고문단'이 어떤 목적으로 영입됐는지	법제사법위 등

② 플랫폼 국감 : 플랫폼 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올해는 네이버, 카카오 등 IT기업인 위주로 국정감사 증인이 채택되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비롯해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 강한승 쿠팡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 플랫폼 기업인들이 위원회별로 겹치기 증인으로 채택되어 기업 자체의 문제와 중소기업

업, 골목상권과의 충돌 문제에 대한 호통과 질책을 들었다.

③ 손팻말 국감 : 손팻말에 리본, 마스크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교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 등의 피켓과 마스크와 리본에,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父) 집, 광상도(子) 50억. 아빠의 힘,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50억 클럽 돈 받은 자가 범인이다’ 등의 손팻말이 나타났다.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 안합니까. 적당히들 하세요’라는 손팻말을 게시했다. 이 때문에 10월 1일과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상임위원회가 ‘손팻말’로 인해 파행을 겪었다. 다만 이 팻말논란으로 인해 성남 판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한 관심이 더 고조되었다는 평가도 받았다.

(3) 최대관심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11월 9일부터 ‘위드 코로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기운 의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이달(10월) 마지막 주 초쯤 전 국민의 70%가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2주인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하면 11월 9일쯤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세우는 ‘단계적 일상회복’은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으나, 위드 코로나 정책을 가늠한 말로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또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의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감한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지금까지 시민들의 불편·분노케 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과학적이지 않은 정치방역조치였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평가되었다.

(4) 실망스러웠던 국감장

① 국방위(위원장 민홍철)의 국방부 국정감사

10월 5일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의 국방부 국정감사가 무산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설치한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피켓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시작되지 못했다. 이면에는 군인공제회의 대장동 관련 투자 실패 국감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장 이원욱)의 ‘버르장머리’ 파행 국정감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5일 오전 10시에 개시한 방송통신

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30분 만에 중단됐다. 진행 절차를 놓고 이원욱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 간에 고성이가 오가는 다툼이 벌어졌다. 이원욱 위원장은 “야당 간사가 버르장머리 없게”라는 말을 하였다.

③ 문화체육관광위(위원장 이채익)의 특혜성 이건희 컬렉션 관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 소속 의원들이 10월 7일 무려 11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오후 5시 23분경에 서둘러 마치고, 야밤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족이 기증한 작품들을 관람하였다. 이에 ‘여야 의원들의 특혜성 관람’과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논란이 야기되었다. 그럼에도 문체위는 10월 8일에도 현장시찰을 하였다.

④ 의원간의 언쟁으로 장내 소란 / 파행

의원간의 언쟁으로 인해서 장내 소란이 벌어져서 파행을 빚기도 하였다. 첫날 외교통일위원회가 대표적이었다(오후 5시 넘어 국정감사가 중단됨). 가장 많은 소란이 있었던 곳은 국토교통위원회로 모두 5곳의 국정감사장에서 소란이 벌어져 정회를 하기도 하였다. 그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로 3곳 국정감사에서 소란이 있었고, 정회가 되기도 하였다.

마지막 10월 26일과 27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도 소란이 빚어졌고, 26일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는 오전에 국정감사를 하지 못하고, 오후에 국정감사를 하는 파행성 정회를 하였다.

«의원간의 언쟁으로 인해 장내 소란사태가 발생한 국정감사장»

국감일자	위원회	피감기관
2021.10.01.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교류재단 · 재외동포재단 · 한아프리카재단
2021.10.01.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2021.10.05.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새만금개발청
2021.10.0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사무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시청자미디어재단
2021.10.07.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 국토안전관리원 · 주택관리공단(주) · 건설기술교육원
2021.10.08.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2021.10.18.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2021.10.19.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2021.10.20.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2021.10.20.	국토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2021.10.26.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 국가안보실 · 대통령경호처
2021.10.27.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5) 어느 나라 공직자인지 의문시된 답변들

① 성남 판교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책임회피 소극답변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이면서 또 국민들을 절망케 한 대장동 게이트는 많은 국가기관과 관련이 있었으나 정작 공직자들은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듯한 답변을 이어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장동 감사에 대해 ‘직무범위를 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고,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NH공사가 직접 한 사업이 아니다’라며, 그 ‘당시에 재직 중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김대지 국세청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세무조사나 금융조사와 관련해서 “**수사과정을 지켜 본 후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다.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 하였으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화천대유의 담합여부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 오면 하겠다**”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였다.

② 정의용 외교부 장관 “안보개념 변화로 북한은 주적 아니다?”

10월 1일 외교부에 대한 외교통일위의 국정감사에서는 9월 30일 북한의 근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대통령이 UN연설과 국군의날 행사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을 질타하였다. 또한 북한의 계속된 도발행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요구조건을 계속 들어주고 있는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김석기 의원이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 아니냐**”고 질문하자 외교부 장관은 “**주적개념이 변화하였다**”고 답변하여 많은 국민을 경악케 했다.

김석기 의원) 대통령께서는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주적이라는 말씀을 한 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군의 날 행사에서도 어제 또 오늘도 북한의 미사일도발이 계속 되는 데에도 북한이라는 말을 굳이 안 하십니다. 우리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아닙니까?

정의용 장관) 주적 개념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것으로 압니다만, 주적개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안보개념이 바뀐 것은 의원님이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께서 연설 과정에 우리 군에 대한 자부심과 신뢰를 밝히시고, 또 우리 군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그러한 계획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김석기 의원) 아니, 우리 군을 신뢰하고 국방력을 강화한다 그건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대통령께서 굳이 북한이라는 말을 한 마디도 안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외교부 국정감사 2021.10.1.>

또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임에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제는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라고 발언하였다.

③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실패라기 보다는, 부동산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조치 다 했다”

서병수 의원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는가, 성공했다고 평가하는가”를 묻자, 기재부 장관은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정책적 조치는 전부 했다”고 답변하였다. 잘못했음을 인식해야 정확한 대책마련이 가능한데,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더 할 정책도 없다면 앞으로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다.

서병수 의원)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실패했다고 평가를 하세요, 성공했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홍남기 기재부장관) 예, 의원님 뭐 여러 가지 경제정책 분야가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과 관련되어서는 아주 전 국민이 밀접하게 관련이 된 현안이기 때문에 정부도 할 수 있는 조치는 정책적 처방은 전부 다 했다고 보여집니다.

서병수 의원) 아니 결과적으로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홍남기 기재부장관) 제가 뭐 그렇게 평가하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작년과 올해 이렇게 안정되지 못해서

서병수 의원)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송영길 민주당 집권 여당의 대표께서도 부동산정책의 실패를 자인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총리께서는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고 계시네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021.10.5.>

④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북한 퍼주기 연구서 관련 ‘용역일뿐’ 답변

문화체육위원회(위원장 이채익)의 문화체육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정부가 북한관광 개발을 위해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방안을 담아 보고서(용역비 3억)를 만들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는데, 황희 문체부 장관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후속 조치 차원에서 연구한 것으로 연구용역 차원일 뿐 전혀 실행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북한은 사실상 리스크를 거의 감당하지 않으면서 관광사업으로 인한 수익은 대부분 받아가는 이상한 구조”라며 “어떻게 하면 국내 자본을 수월하게 북한으로 유입시켜 북한관광자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지, 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어떻게 적절하게 회피할 수 있을지 고민이 담긴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⑤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의 저출산문제에 대한 무대책 답변

보건복지위원회의 10월 6일 국정감사 첫날 이달곤 의원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 문제를 지적하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다른 정책을 개발해야지 돈을 주는 정책만 계속 하고 있다”라며 “돈은 나가고 성과는 나지 않고 있다. 복지부 장관 업무 범위에서 세계 최악의 결과가 나왔으니

사과하라”고 하였고, “국정감사는 여태까지 한 일에 대해 오류가 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유가 뭔지를 따지는 자리”라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대답은 국정질의해서 하면 된다. 장관과 청장의 답변이 감사받는 태도가 아니다. 너무 심하다”라고 질타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위험상황 등을 대통령에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달려가서 보고했나”고 물으며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권덕철 장관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⑥ 정의용 외교장관, 서욱 국방장관의 북한의 발사는 도발이 아니라 위협

북한의 SLBM에 대한 발사에 대해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서욱 국방부장관은 도발을 “(우리) 영공과 영토, 영해 등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며 북한의 SLBM에 대해선 “이번 건은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고 말했다.

강대식 위원) SLBM 사거리가 590km에 불과합니다. 이번 SLBM하고 최근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하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아주 도발 행위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서욱) 저희가 용어를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여집니다.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공·영토·영해에, 국민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이고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북한의 위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0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SLBM 발사와 관련 “우리 군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전략적 도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6) 피감기관의 자료부실/지연

①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감전날 자료 제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 12시간 전에야 법사위 요구자료 제출한 대법원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대법원은 9월 30일 밤 10시경에야 법사위가 의결해 요구한 국감용 자료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선거법위반 관련 재판연구관의 의견서는 끝끝내 제출을 거부하였다.

② 외교부의 소속정당 이름 틀린 자료 제출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에서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가 정부(외교부)의 자료제출 거부 및 부실 실태를 조목 조목 PPT로 지적하기도 하였고, 국민의힘을

국민의 당이라고 표시하거나, 무소속이라고 표시하여 외교부의 국회 무시(정신나간) 행태를 강력하게 질타하였다.

③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의 자료제출 거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감 시작과 동시에 야당 의원들은 10월 6일 ‘백신 이상반응 인과관계’ 자료제출 미흡을 지적했다. 질병청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이유는 이상반응 관련 신고자료에 의무기록 등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고 변명하였다.

④ 대장동 관련 요구자료 214건 중 제출자료 0건

언론보도에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 의하면, 10월 13일 기준 대장동 관련 요구자료 214건 중 제출 자료 0건, 자신만만해하던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대놓고 ‘꼼수 국감’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료 없이 국감을 하라며 국회를 짓밟는 이재명식 신(新)독재다.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재명 후보의 ‘독재국가 예고편’ ” 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자료제출 거부(지연) 및 부실제출이 논란이 되었다.

박성민 위원) 박성민 위원입니다. 우선 성남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자료가 사실은 꼭 제출받아야 되는 자료임에도 전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부터 드립니다. 꼭 필요한 자료는 성남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광역교통부담금 현황 및 납부내역 그다음에 감면액 현황 그 자료를 감사 오전 중에, 이걸 충분히 댈 수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배 위원)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시장 결재직인이 찍혔거나 결재·서명된 서류를 요구했는데 일부만 제출하고 또 주주협약서 요구에 대해서는 표지하고 14페이지, 15페이지만 발췌해서 제출하는 등 이런 선택적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7) 미흡하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국감성과

- ① 법치와 정의를 유린하고, 사법비리 의혹까지 들게 한 성남 판교 대장동 게이트 사태를 실시간으로 질의해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알권리를 보장하였다.
- ②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에 퍼져 있는 관피아 낙하산 인사와 캠프코더(대선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확인하였다.
- ③ 플랫폼 기업의 확장과 중소기업, 골목상권간의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국감이 되었다.
- ④ 청와대 게시판만 통해서만 들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이 감사장에 나와 코로나19 백신 피해 호소 등의 목소리를 국민들이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8) [국민소통] 국회의원의 82.2%(185명)는 네이버 블로그를 자신의 홈페이지로 소개

국정감사 기간 중 홈페이지를 통해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해 실시간을 볼 수 있게 하고 있는 지를 조사해 본 결과(10. 9~10), 국회 홈페이지에 자신의 홈페이지 주소를 공개하고 있는 의원은 전체 감사위원(295명)의 76.27%인 225명이었다. 국회의원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국정감사 자료를 게시하고 있는 의원은 141명으로 과반이 안 되는 47.80%였다. 국회의원 소개란 홈페이지에는 개인 홈페이지, 유튜브, 페이스북 북, 네이버 블로그 등이 소개 되어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를 소개해 놓은 의원이 185명으로 82.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대표 등이 국감장(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불러 와서 플랫폼 기업과 고용여건(갑질) 관련 질타를 받은 것과 상당히 대조적이다.

(9) [국감개선] 시정조치 여부 확인 점검 해야

- ① 국회의원(감사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해도 시정/개선하지 않고 피감기관장은 “예, 알겠습니다” 만 하고, 올해에도 감사위원들이 “작년 국감에서” “지난번 국정감사” 에서라며 시정조치가 되었는지를 감사장에서 확인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바람직했다. 시정조치의 여부를 끝까지 제대로 점검해 ‘그 나물에 그밥’ ‘붕어빵’ 국감을 근절해야 한다(시정조치는 질의한 의원의 실명을 명기하여야 할 것).
- ② 또한,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도 보강해, 실시간 시청 중 버퍼링 현상, 화면정지 등도 개선해야 한다.
- ③ 이번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하루에 10개 이상의 피감기관을 선정하여 감사를 하는 날이 135일 중 25일로 지난해 21일보다 많았다. 하루에 여러 국정감사 대상기관을 정하여 하루종일 한 번도 질문을 받지 못하는 피감기관도 많아, 무더기 피감기관 선정을 근절해야 한다.

[참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10월 18일 월요일 한국연구재단 등 5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다. 53개 기관중 무려 35개 기관은 질의를 받지 못하였다. 2016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로 변경 국감상황을 보면 질문을 받지 못한 기관수가 많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연구재단 등 국정감사》

연도	구분	피감기관수	질의를 못한 기관수	비고
2017 (20대 국회 2차년도)	1일차	26	6	박상열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은 "예" 한마디 답변 제외
	2일차	26	6	
2018 (20대 국회 3차년도)	1일차	26	9	
	2일차	26	4	
2019 (20대 국회 4차년도)	1일차	27	3	
	2일차	25	6	
2020 (21대 국회 1차년도)	하루	53	7	22개 기관만 출석요구함
2021 (21대 국회 2차년도)	2일차	53	35	

[조사] 국회 연도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회의록(2021. 9. 28.~30)

- ④ 국정감사시 요구자료에 대해 거부를 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따라 주무장관의 해명 또는 관계자의 징계를 요구해야 한다.

김석기 위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이 자료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거짓으로 제출하면 관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징계조치를 촉구해주시시오. 말로 해서 안 되지 않습니다. 국회가 왜 이렇게 사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국민을 위해서 정부를 감시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우리가 국정감사 준비를 하자고 하는데 이렇게 무시당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징계촉구를 요구하겠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 중에서 2021.10.1.>

■ 국감 자료제출관련 문제가 된 곳 <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 2021.10.5. >

윤한홍 위원) 난 금요일 날 대법원 국감을 처음 했었는데 그 당시에 대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감 하루 전날 거의 밤 10시, 12시 돼서 자료를 보내기도 하고 또 자료를 보내지 않기도 하고.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 아닌가 보여지는데 법무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주지 않아요. 의도적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질타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그냥 넘어가서 될 사항도 아니고요. 예시를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특검법 관련해서 법무부의 입장이 뭐냐고 서면질의를 했는데 답을 안 합니다. 이게 답을 안 할 사항이에요?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5년간 공무원 뇌물죄·사후수뢰죄 기소 현황, 검찰 기소중지 현황, 최근 5년간 불기소처분 관련 수사기록, 은수미 선거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이유서, 월성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해 기소된 관련자들 공소장, 다 줄 수 있는 자료예요. 다 줄 수 있는 자료인데 지금 국감이 시작을 하는데도 자료가 안 와요. 새롭게 요구하는 자료도 아니고 이미 지난주에 벌써 요청을 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국감을 하라는 겁니까? 그냥 여기 앉아서 얼굴 보고 업무보고 듣고 법무부장관 설명이나 듣고 가라는 얘기입니까? 대법원 국감 할 때도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국감이 오늘 두 번째 날인데, 거기다가 법사위 국감의 가장 핵심이 법무부 아닙니까? 이렇게 자료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법무부장관에게 경위를 확인해 주시고 오전 중에 모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은) 여야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 그리고 자료제출의 불성실성 문제까지 지적을 하시는데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법무부장관님께서 여야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충실히 응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전주혜 위원님 말씀하시는 약식명령 제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 위원님 그리고 소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장동 사건 관련 출국금지 신청내용은 현재 수사가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기획재정위원장

윤후덕 기획재정위원장(자평) 이번 국감은 이번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자 최장수 경제부총리이신 홍남기 장관님과 여러 기관장을 모시고 종합 국정감사라는 첫날입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여야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수준 높은 정책 대안 제시가 빛나는 국감이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합 국정감사 첫날을 맞아 2021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과연 제대로 된 국정감사였나 되돌아보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대장동 관련 자료 제출 그리고 증인과 참고인 채택 등 야당 위원님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고 야당 간사께서 그렇게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욱이 위원장님께서 여야 간에 잘 협의해서 진행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유감입니다.

헌법 제61조제1항에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들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제대로 관철하지 않은 것과 증인·참고인을 제대로 채택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다는 말을 남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국정감사의 임무를 방기하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외면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국회를 질타하고 특검을 더더욱 요구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는 각별히 더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국민 앞에 반성하겠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서두에서 2021.10.20.>

나. 국정감사 질의 횟수 및 질의응답 시간

('국민의힘' 이 '더불어민주당' 보다 국회의원당 평균 1.5회, 12분 정도 많아
질의총량은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이 450시간으로 국민의힘 311시간보다 많아)

(1) 총괄 : 질의횟수 총 5,934회, 질의응답 총 698시간 22분 46초

개별 국회의원의 질의응답 시간을 분석하기 위해 국정감사 진행도중 국회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및 자료요구 발언, 그리고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를 제외한 감사위원이 실제 국정감사를 한 질의응답(증인신문 포함)시간을 조사해본 결과, <<속기회의록과 영상회의록을 비교·확인작업에 질의의원이 달리 표시된 경우 등 3군데 차이점이 있어서, 발견한 내용은 일부 보정하였음.>>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총 질의횟수는 5,934회였으며, 국회운영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를 제외하면 5,781회였고, 질의응답 총시간은 681시간 3분 35초였다.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한 감사위원당 평균 질의횟수는 19.5회였으며, 질의응답시간은 약 2시간 18분 58초로 잠정 조사되었다.

지난해(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한 감사위원당 평균 질의횟수는 24.3회였으며, 질의응답시간은 약 2시간 45분 41초였다.

수치상으로는 지난해 보다 질의횟수 및 질의시간이 조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가 및 결석으로 한 번도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한정애** 환경노동부장관(행정안전, 정무-사·보임), **이인영** 통일부 장관(기획재정위원회),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기획재정위원회),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국토교통위원회), **박범계** 법무부장관(환경노동위원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곽상도** 의원(교육위원회), 정찬민 의원(교육위원회) 이상직 의원(국방위) 등과 일부 여야당 경선 후보나, 국정감사기간중 구두질의를 하지 않은 의원(법제사법위원회) 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상임위원장과 청가 및 결석 위원을 제외한 수치였음.>>

<<2021년도 국정감사 질의횟수 및 질의응답시간 현황>>

위원회	위원수	질의횟수	질의응답시간	의원당 평균질의 횟수	의원당 평균질의응답시간
국 회 운 영	28	111	12:09:13	4.0	0:26:03
법 제 사 법	18	421	56:57:02	23.4	3:09:50
정 무	24	526	61:52:41	21.9	2:34:42
기 획 재 정	25	538	62:31:56	21.5	2:30:05
교 육	16	336	41:06:53	21.0	2:34: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509	52:22:20	25.5	2:37:07
외 교 통 일	20	160	18:39:56	8.0	0:56:00
국 방	17	255	30:56:31	15.0	1:49:12
행 정 안 전	22	584	59:34:21	23.4	2:22:58
문 화 체 육 관 광	16	289	36:21:44	18.1	2:16:2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412	47:37:47	21.7	2:30: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9	461	60:40:12	15.9	2:05:31
보 건 복 지	24	386	48:55:57	16.1	2:02:20
환 경 노 동	16	397	49:19:11	24.8	3:04:57
국 토 교 통	29	507	54:07:04	17.5	1:51:58
여 성 가 족	17	42	5:09:58	2.5	0:18:14
총계/평균		5781	681:03:35	19.5	2:18:58
검임포함 총계/평균		5934	698:22:46		

※ 외교위는 국내에서 진행된 것만 통계함 (국방위의 경우 합참 국감 제외)

(2) 질의횟수 최고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저는 국방위원회

의원의 질의횟수가 가장 많은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

원옥)로 한 감사위원회당 평균 25.25회 질의하였고, 가장 저조한 위원회는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로 15회에 불과했다.《참고로, 국내반만 통계한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에는 8회임》

(3) 질의응답시간 최고는 법제사법위원회, 저조한 위원회는 국방위원회

의원들의 질의 및 피감기관의 답변시간을 통계한 결과 평균 질의응답시간인 가장 긴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로 3시간 9분 50초였고, 그 다음은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로 3시간 4분 57초였다.

질의응답 시간이 가장 저조한 위원회는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로 1시 49분 12초에 불과했고, 그 다음으로 이번 국정감사의 가장 큰 이슈였던 대장동 사건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현승)로 질의응답 평균시간은 1시간 51분 58초에 불과했다.

(4) 국회운영, 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를 살펴 보면, 전체 의원의 질의횟수는 평균 4회(지난해 4.3회)였고, 질의응답시간은 26분 03초(지난해 26분 11초)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횟수는 3.8회(지난해 3.93회)였고, 질의응답시간은 24시간 49분(지난해 23분 54초)인 반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횟수는 4.4회(지난해 4.6회)였고, 질의응답시간은 29분 23초(지난해 28분 21초)였다.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1일 위원당 평균질의횟수는 2.5회(지난해 3.1회), 평균 질의응답시간은 18분 14초(지난해 19분 26초)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의 질의응답평균횟수는 2.7회로 19분이었고, 국민의힘 의원 역시 2.7회로 20분 46분초였다.

(5) 질의시간 총량 : 의석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우세

수적으로 우세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응답시간 총량은 14개 상임위원회에서만 살펴보더라도 대략 373시간35분(지난해 449시간 55분)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응답시간 241시간 59분(지난해 311시간 21분)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1년도 교섭단체 감사위원의 질의총횟수 및 질의응답총시간 현황>>

위원회	전체의원(위원장 포함)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 제외)			국민의힘 의원 (위원장 제외)		
	위원	총질의횟수	총질의시간	위원	총질의횟수	총질의시간	위원	총질의횟수	총질의시간
법 제 사 법	18	421.0	56:57:02	10	253.0	34:34:10	6	137.0	18:42:07
정 무	24	526.0	61:52:41	14	308.0	35:45:34	7	160.0	19:36:41
기 획 재 정	25	538.0	62:31:56	13	249.0	28:49:57	8	214.0	24:57:20
교 육	16	336.0	41:06:53	9	226.0	27:28:35	4	81.0	9:47:1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509.0	52:22:20	11	251.0	26:36:50	7	224.0	23:00:26
외 교 통 일	20	160.0	18:39:56	9	74.0	8:26:19	8	65.0	7:45:40
국 방	17	255.0	30:56:31	9	147.0	17:50:45	6	92.0	12:02:36
행 정 안 전	22	584.0	59:34:21	12	294.0	30:02:25	8	221.0	22:54:18
문 화 체 육	16	289.0	36:21:44	8	154.0	18:31:04	6	98.0	12:5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412.0	47:37:47	11	235.0	27:35:05	6	152.0	17:52: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9	461.0	60:40:12	15	242.0	32:05:22	11	175.0	22:55:33
보 건 복 지	24	386.0	48:55:57	14	221.0	27:21:33	6	111.0	14:50:28
환 경 노 동	16	397.0	49:19:11	8	198.0	24:44:02	5	133.0	16:10:34
국 토 교 통	29	507.0	54:07:04	18	313.0	33:43:29	9	179.0	18:28:23
계	295	5781	681:03:35	161	3165	373:35:10	97	2042	241:59:02
주의	1.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실시한 경우만 산정하였음. 2. 국방위의 경우에는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제외된 수치임. 3. 전체위원 평균은 위원장과 비교섭 단체의원까지 포함한 평균수치임.								

(6) 교섭단체 상임위별 평균질의 응답시간 및 평균질의횟수 비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의 소속의원의 질의횟수 및 질의응답시간에 가장 많은 격차가 있었던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8회 질의를 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은 32회 질의를 하였다. 이것은 10월 21일 종합감사시에 나로호 발사참관으로 위원장 포함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이 빠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많이 한 것임을 나타낸다.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 역시 평균 질의횟수가 저조한 데, 이는 상임위원회에 장관 겸임인 이인영 의원과 전해철 의원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보다 평균질의횟수가 많아 차이가 나는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해진)으로 교육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균

25.1회 질의를 하였고, 국민의힘 의원은 20.3회 질의를 하였다. 2021. 9. 29.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정찬민 의원이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마찬가지로 무소속의 박상도 의원 역시 불출석하여 비교집단체의 평균질의횟수도 저조하였다.

그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평균 19.3회 질의를 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은 16.3회였다.

«2021년도 교섭단체 감사위원의 평균질의횟수 및 평균질의응답시간 현황»

위원회	전체의원(위원장 포함)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장 제외)			국민의힘 의원 (위원장 제외)		
	의원	질의횟수평균	질의시간평균	의원	질의횟수평균	질의시간평균	의원	질의횟수평균	질의시간평균
법 제 사 법	18	23.4	3:09:50	10	25.3	3:27:25	6	22.8	3:07:01
정 무	24	21.9	2:34:42	14	22.0	2:33:15	7	22.9	2:48:06
기 획 재 정	25	21.5	2:30:05	13	19.2	2:13:04	8	26.8	3:07:10
교 육	16	21.0	2:34:11	9	25.1	3:03:11	4	20.3	2:26:5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25.5	2:37:07	11	22.8	2:25:10	7	32.0	3:17:12
외 교 통 일	20	8.0	0:56:00	9	8.2	0:56:15	8	8.1	0:58:12
국 방	17	15.0	1:49:12	9	16.3	1:58:58	6	15.3	2:00:26
행 정 안 전	22	23.4	2:22:58	12	21.0	2:08:45	8	24.6	2:32:42
문 화 체 육	16	18.1	2:16:21	8	19.3	2:18:53	6	16.3	2:09:1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21.7	2:30:25	11	21.4	2:30:28	6	25.3	2:58:4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9	16	2:05:31	15	16.1	2:08:21	11	15.9	2:05:03
보 건 복 지	24	16.1	2:02:20	14	15.8	1:57:15	6	18.5	2:28:25
환 경 노 동	16	24.8	3:04:57	8	24.8	3:05:30	5	26.6	3:14:07
국 토 교 통	29	17.5	1:51:58	18	17.4	1:52:25	9	19.9	2:03:09
계	295	19.6	2:18:58	161	19.6	2:19:55	97	21.1	2:31:10
주의	1. 외교통일위원회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실시한 경우만 산정하였음. 2. 국방위의 경우에는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제외된 수치임. 3. 전체위원 평균은 위원장과 비교섭 단체의원까지 포함한 평균수치임.								

«참고 2020년도 감사위원의 질의횟수 및 질의응답시간 현황»

위원회	전체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의원	질의횟수평균	질의시간평균	의원	질의횟수평균	질의시간평균	의원	질의횟수평균	질의시간평균
법 제 사 법	17(18)	24.4	2:59:22	10(11)	22.9	2:50:02	6	26.2	3:12:42
정 무	23(24)	27.57	3:04:17	13(14)	25.54	2:51:59	8	29.63	3:16:12
기 획 재 정	25(26)	21.8	2:36:46	14(15)	20.9	2:29:15	9	22.8	2:48:50
교 육	15(16)	27.1	2:56:50	8(9)	27.0	2:52:09	6	27.3	3:02:10

위원회	전체의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위원	질의횟수평균	질의시간평균	위원	질의횟수평균	질의시간평균	위원	질의횟수평균	질의시간평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9(20)	29.2	2:50:54	11(12)	24.9	2:26:36	7	35.6	3:25:37
외교통일	20(21)	21.3	2:30:35	10(11)	18.8	2:14:07	7	25.9	3:01:49
국방	16(17)	21.9	2:40:56	9(10)	19.8	2:23:26	6	26.8	3:19:16
행정안전	21(22)	26.0	2:39:15	12(13)	24.5	2:30:51	8	27.4	2:48:38
문화체육	14(16)	23.9	2:40:29	7(8)	22.1	2:30:29	6	28.2	3:03:0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8(19)	26.7	3:07:09	10(11)	23.0	2:41:16	8	31.4	3:39:3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28(30)	19.3	2:20:04	16(18)	18.1	2:11:45	10	21.1	2:31:33
보건복지	23(24)	18.7	2:12:05	14(15)	18.2	2:09:24	7	19.9	2:20:55
환경노동	14(16)	32.2	3:59:05	8(9)	32.9	4:07:13	5	30.4	3:35:14
국토교통	29(30)	20.0	2:01:54	17(18)	18.5	1:53:33	10	22.1	2:13:41
계	282 (299)	24.3	2:45:41	159 (174)	22.7	2:35:09	103	26.7	3:01:22
주의	1. 전체의원과 민주당의 숫자는 위원장과 전일정 국감불참의원수를 뺀 위원수로 이번 통계를 한 의원이며, 위원수의 ()안은 정원임 2. 법사위는 10월 23일 오후 군사법원 국정감사를 제외한 수치임								

다. 눈에 띈 국정감사 쟁점과 상임위 국감 요약

지난해(2020) 국감에서는 여러 위원회에서 국감 끝 날까지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크게 이슈화되었다.

올해(2021)국정감사에서는 10월 1일 손팻말 시위부터 10월 26일 국회운영위원회의 대통령 비서실 등 국정감사까지 **대장동 게이트 관련 내용**이 크게 이슈화되었다.

(1)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 : 대장동과 고발사주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10월 1일부터 20일간 78개 기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매일매일 국정감사 상황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정리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히 알려 주었다. 법사위 핵심쟁점은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게이트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위반 주심 대법관의 부절적인 행보가 논란이 되었다.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하여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와 관련이 있는 자와 수차례 만나는 등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관 각각의 의견을 모아 결정하는 것으로 1명의 대법관이 재판결과를 바꿀 수 있

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견이 대립하였다.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 검찰총장 장모 대응문건 작성 의혹 사건, 권순일 전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사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및 내부감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문제 지적, 대장동 개발 의혹, 감사원 감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감사위원들은 월성원전 1호기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롯하여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감사 필요성, 감사원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직무감사 등에 대하여 여러 지적을 하였다.

전국 고등·지방법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전역 취소 청구 재판이 신속하게 처리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법관의 권위적인 재판 진행(고압적인 말투·태도, 면박 등), 공정성 저하(증거 신청 과도한 제한·예단 등), 하위 법관에 대한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꼬집었다.

같은 날 13개 고등·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노정환 지검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은 권고 수준으로 최종 의사 결정권은 검찰에게 있다”며 “검찰총장이 백 전 장관에 대해 수사지휘를 내린 만큼 이에 맞춰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백 전 장관에 대해 배임교사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고한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기소 여부 시점에 대해서는 “지휘에 맞춰 처리하고 있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법관 탄핵심판 사건이 이슈가 되었고, 사건처리 지연, 장기미제사건 등으로 침해되고 있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판지연보상법 제정, 국회에 대한 미제사건 보고 절차 마련 등 사건처리 신속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처음 실시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 김학의 불법출금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수사 중인데 김만배씨가 4차례 정도 당시 권 대법관실에 출입했다” 며 “김씨와 권 전 대법관이 친분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 경로로 확인되는데 (권 전 대법관이) 성남의뜰 존재를 알았을 가능성이 크고 (김씨가) 화천대유 관계자인 것도 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고검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진 것 등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과 고발사주 사건 등이 쟁점이었고, 열기도 뜨거웠다.

(2) 정무위원회(위원장 윤재옥)- 대장동 사건 vs 도이치 증권

정무위원회(위원장 윤재옥)는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기관, 권익위 등에 대해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국민의 관심사인 대장동 관련 증인은 여야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 채택되지 않았다.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이 여야의 쟁점이었다.

성남시가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대장동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질의를 집중했고,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씨가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질의가 많았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선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 담긴 가계부채 대책을 비롯해 빅테크(Big Tech) 규제 방안, 암호화폐 업권법 논의 등에 대한 주문이 쏟아졌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주요 쟁점으로 부상한 화천대유 논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 등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금융당국 국감에선 가계부채 문제가 가장 주목받았다. 여야 모두 1,800조원을 넘어서며 위험 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대책의 필요성에 원론적으로 공감했다. 다만 가계대출 한파를 초래한 금융당국의 총량규제에 대해선 반론이 쏟아졌다. 여야는 금융당국이 10월 중순에 발표할 가계부채관리 대책에 실수요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과 관련한 자금 흐름 등을 들여다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에는 컨소시엄에 참여한 하나은행과 SK

증권 등에 대한 검사도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빅테크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도 받았다.

먹튀 논란이 일었던 머지포인트 사태에 따른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의 수용률 상향과 은행 간 편차 축소,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하향 조치, 광주은행 채용 비리 후속 조치 점검 등도 금융당국에 요구했다.

권익위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사태와 관련하여 언론인 출신 대표의 김영란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촉구가 있었다.

(3)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 : 가상자산 과세,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의 공과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10월 5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첫날부터 대장동 손팻말 논란으로 파행하다가 오후부터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기획재정위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매일 매일 하루치 국감내용을 국민들에게 정리·공개하였다.

기획재정부 1일차 국감에서는 국가재정 규모 및 국가채무와 관련하여 이번 정부 기간 동안 약 400조원의 국가채무가 증가하여 2022년 예산안 기준 1,000조원이 넘는 규모로 증가한 국가채무의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의 문제점,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한 불용예산·여유자금 관리 강화 및 예산의 제로베이스 편성 방안의 검토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와 ‘세수추계 정확성’에 대한 집중 점검, 가상자산 과세여건의 미흡 등을 고려한 과세유예 필요성 및 과세체계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큰 폭의 세수추계 오차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등 세수추계 정확성 문제 개선 필요, 세법 개정안의 조세지출 효과가 대기업 및 수도권 등 특정대상에 집중될 우려, 부동산 관련 세제의 지나친 복잡성 문제 등 개선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국세청 국정감사에선 대장동 개발이익과 관련하여 철저한 세무조사 및 자금추적 필요성, 개인유사법인 유보소득 간주배당 제도 도입 재검토 필요성, 「국세기본법」상 관련 정보 공개 가능성에 대한 지적 및 질타가 있었다.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통계청이 공표 전 청와대에 사전 제공한 통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통계청 통계의 신뢰성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관세청 세관 직원이 지인들에게 암호화폐(코인) 채굴업체 투자를 알선하고 약 7000만원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디지털화폐 발행 문제가 거론됐다. 총재는 “내년 중에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한국은행의 정책수행에 미칠 영향을 비롯한 제반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해 CBDC 도입 기반을 강화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4)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해진) : 대학역량평가와 학력격차

교육위원회(위원장 조해진)는 7차례의 감사를 실시했다. 교육부와 교육부 소관 기관 그리고 지역교육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하였다. 첫날부터 파행이 이루어져서 오후에 국감이 진행되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교육회복 촉진 관련 현장소통 강화, AI교육 진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 기획 과정 내실화, 노동인권교육, 고교학점제 도입보완, 탈북학생 대안학교 운영 지원, 학교 신설 관련 중앙투자심사의 제도개선, 대학 평가제도의 근본적 개선, 대학별 특별장학금 집행 현황 및 등록금 반환, 국립대학 학생지도비 등 감사, 대학 연구윤리 강화 방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개편과 전문대학·국립대학 지원 방안,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 가천대 이재명 지사 논문 검증, 진주교대 종합감사 실시 요구, 홍익대 특정감사 요구, 강원대 한국어 강사 등의 처우 개선, 예술대학 교육 활성화 지원 방향 및 추진, 대학의 임의협약체 관리, 특성화고 관련 대책, 여수 특성화고 학생 사망사고 문제, 공자학원에 대한 대응방안. 학교 내 불법촬영카메라 불시점검의 실효성 문제, 장애대학생 지원사업 연계방안, 학교급식실 환기시설 교체 예산확보 방안과 조리종사원 산재 신청 관련 대책, 학교폭력 예방대책 마련 및 학생부 기재 제도개선, 기숙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교육부의 교육전문직 선발 등에 대한 정책점검과 제안이 있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초중등 분야는 고교학점제, 과밀학급 해소, 교육회복지원, 학력격차 및 기초학력 보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설립, 초중고교 원격수업,

초등돌봄교실, 미인가 대안학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2022 교육과정 개정 등이 쟁점이 되었고, 2학기 전면등교와 학교방역 실태, 원격수업과 등교수업 병행 등 코로나 현안도 작년에 이어 집중 논의되어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교육격차 심화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교육당국의 책임을 추궁했다.

조국 교수의 딸 조민 관련된 질의도 나왔으며, 윤석열 전검찰총장의 부인 논문 관련한 질의도 있었다.

동북아 역사재단 등 국정감사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시정, 사학연금재단 재정, 교원처벌문제 등이 주로 질의 되었다.

서울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이 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었고, 윤석열 전 대검찰청장 부인의 고등학교 교사 이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행정소송 1심 재판에서 전패해 소송으로 인한 세금 낭비가 제기되었다. 학부모 반대에 부딪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코로나19속 학력격차 해소 방안 등도 조명되었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인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에 대한 교육감협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지난 6월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도와달라는 쪽지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국회 교육위원회의 강원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질타도 있었다 12일 2일차 지방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현장학습도중 사망사고 발생의 원인과 대책이 많이 조명되었다.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장 이원욱) : 플랫폼, 탈원전, 방송공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10월 21일 감사 1반이 누리호발사 관련 현장시찰을 실시하였고,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KBS 등의 국정감사가 이루어졌으며,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는 영상 국감으로 이루어졌다.

구글 갑질 방지법 등 주로 플랫폼 기업관련 증인신문이 많이 보도되었다.

과학기술분야 국정감사에서는 부처별 연계를 위한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수립, 정보통신 분야 규제·진흥 기능의 통합, 민간중심 공공클라우드 구축,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데이터이월제 도입, 성과가 부실한 5G 및 6G관련 국가연구

개발 사업, 한국지능정보원의 불법적인 직원 사찰과 과기정통부의 미흡한 대응, 줄기세포 기초연구 역량 하락에 대한 대책 마련, 과학기술분야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부실한 평가 및 사후 관리, 보이스피싱 범죄를 야기하는 부실한 선불폰 가입 절차,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 스팸 발신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한 이용정지 필요 문제, 집배원 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의 과적 해소 대책, 대구과학관의 부적절한 수의계약 및 채용비리, 인공지능을 이용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투자 및 규제 완화 문제, 기술패권 시대의 과학기술 전략화 방안, 5G 품질개선 및 불법보조금 근절과 합리적 요금제 도입, 5G 기지국 설치를 통한 통신서비스 확대와 28GHz 기지국 확대 및 단말기 출시 대책 등의 지적이 있었다.

방송통신분야에서는 독과점적 대형 플랫폼과 중소 사업자의 상생 방안, 언론의 독립성을 훼손할 소지가 있는 방송통신위의 언론사 평가 기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대책,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쿠팡의 자급제품 판매,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는 카카오의 위치정보 활용, 국내외 대형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에 대한 공유 방안, 연계 편성 등 과도한 방송 상업화의 문제, 플랫폼 뉴스 편성에 있어 지역언론사에 대한 배려 필요, SNS상의 마약 등 불법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 차단 필요, 포털 알고리즘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 방안, 대형 포털의 미디어랩 지분 보유 문제, 팩트체크사업 주체의 편향성, 상품 추천 알고리즘 검증 시 중소 상공인 참여 방안 등이 제기 되었다.

원자력 분야에서는 방사성 물질 유출 사고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미흡한 처벌, 한국수력원자력의 위험업무 외주화, 원자력 규제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위원회 개편, 방사능 오염 고철에 대한 관리 필요, 후쿠시마 원전수에 대한 해양 감시 강화 필요성,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지에 따른 지역경제의 피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원자력발전 확대 등의 정책제안이 있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월성 원전 부지의 방사성 물질 유출 조사와 관련된 여야 의원과 피감기관 간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게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질의하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공격했다. 월성 원전 1호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를 문제 삼는 주장도 나왔고, 월성원전의 삼중수소 조사

와 관련해 한수원이 현장 검증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공사 재개,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KBS 국정감사에서는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와 여권 편파보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수신료 인상과 관련 KBS는 기존 2500원이었던 수신료를 52%나 인상해 3800원으로 조정하는 안을 추진해 국민의 공분을 받고 있는 사안이다. 더불어 민주당 의원조차도 양승동 사장의 임기 만료 시기이고 여건이 안 좋은 시기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6)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 : 종전선언 논란과 남북교류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이광재)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국외출장으로 외교부 소관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외교분야 국감은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외교부 본부 감사(한차례 추가 감사)와 10월 6일 주중·주일대사관과의 화상 국감, 10월 7일부터 약 열흘간 총 20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현지 국감이 실시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중에서도 재외공관 현지 국감을 2년 만에 재개해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통일분야는 10월 18일과 10월 21일에 걸쳐 통일부의 대북 통일 정책의 난맥상을 점검하고, 통일부가 추진했던 업무 전반에 평가를 하였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남북대화 재개와 또 남북 교류·인도 협력 그리고 북한 인권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등 통일부 업무 전반에 걸쳐 문제점 지적과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6일 화상 형식으로 진행된 외교통일위의 주일한국대사관 국감에서 강창일 주일한국대사는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 출범과 관련, “한일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우리 정부는 신내각과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반도 평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종전선언의 의미를 적극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 없는 종전선언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7)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 :국감무산, 군인공제회 투자실패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첫날 국정감사 무산 등 중간 중간 여러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많은 위원회였다.

북한의 국정감사 도중(10월 19일) 신형 SLBM을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등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엄중한 상황에서 감사가 진행되었으나, 대장동 게이트 관련 유탄으로 매번 파행을 지속하기도 하였으며, 여야당의 대선후보 선거로 인해서 감사위원의 국정감사장 출석도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저조하였다.

국방위의 국정감사는 종합감사 및 국회에서 실시하던 감사 외에는 대부분 현지에서 하였기 때문에 모니터링에 제한이 있었다.

현지에서 한 10월 6일 합동참모본부 등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무산됐던 국방위 국감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 원인철 합참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긴밀한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감시·정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 6명이 불참했다. 개인 일정, 당 사정 등의 이유로 국방위 위원 6명은 2년 만의 제2작전사령부 국정감사에 불참했다. 불참한 의원은 국민의힘 3명과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었다. 2작사 국감 시각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대선경선 최종 대진표가 발표되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석이 많았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드론공격 대비 태세 미흡과 장비 노후화 문제 등을 일제히 지적했다. 북한과 테러단체 등에 의한 드론 위협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제2작전사령부의 드론대비 태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었다.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는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우리측에 미납해온 사업비 분담금 문제가 다음 달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야당은 7,041억원에 이르는 미납액을 두고도 ‘버티기’로 일관해온 인도네시아 당국과 우리 정부의 저자세 협상 태도를 지적했다.

군인공제회 국정감사는 오전 한때 손팻말 관련하여 파행을 빚기도 하는 등 진행에 난항을 겪었다.

(8)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 대장동 게이트와 공정선거관리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0월 1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6일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관 경찰청, 공공기관 등 총 33개 기관에 대하여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총 13개 기관에 대해 업무현황을 보고받았다. 행정안전위원회는 해외 국정감사 실시 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최대한수의 국정감사를 실시하였고 별도 일자를 잡아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겸임 상임위를 제외하고는 가장 늦은 날까지 종합국감을 실시했다.

하이라이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감한 경기도 국정감사였고, 하루 종일 대장동사건 관련 질문이 이어졌고, 조폭 연루 의혹제기와 관련해 소란스러웠다. 또한 서울시 국정감사 역시 대장동 사건에 파문혀 서울시정에 대한 감사는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선거관리위원회 등 주요 피감기관 국정감사를 진행하였고, 10월 1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감사진행이 순조롭지 못하고 증인채택에 있어서 여야간의 입장차로 난항을 겪었다.

특히, 경기도 국정감사와 서울시 국정감사는 대장동 게이트 의혹과 관련하여 여야간의 정쟁이 있었으며,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이재명 후보와 조폭연루설 관련 질의에 대해 여당은 김용판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수상한 자금흐름 의혹을 5개월간 내사(입건 전 조사)만 진행했다며, 이 기간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 피의자로 한 명도 입건하지 않았다는 수사지연에 대한 질타가 있었다.

화천대유 의혹에는 여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돼 이목이 집중됐지만 수사 전환 후에도 경찰의 소환조사 등이 더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검찰이 이달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잇달아 진행하자 경찰이 그제서야 수사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장동 특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 고문을 맡는 과정에서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을 두고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제도의 허점을 집중 추궁했다(권 전 대법관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 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화천대유가 취

업 심사대상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별도의 걸림돌 없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았다. 서범수 의원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이 법을 빠져나간다. 정말 법을 잘 모르는 사람만 법에 걸렸지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자꾸 빠져나간다”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대법원 판단을 받을 때 심리에 관여했다. 그는 이 지사의 전원합의체 사건에 참여해 무죄 의견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특히 화천대유의 최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선고가 이뤄지기 전 5차례 권 전 대법관이 있는 곳을 방문해 대장동 인허권자인 이 지사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권 전 대법관을 찾아 사실상 '재판거래'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선거부정 의혹과 재외국민을 상대로 한 우편투표에 질의가 집중됐다.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 : 플랫폼, 코로나19와 문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이채익)는 일곱차례에 걸쳐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이견희 컬렉션 국립현대미술관 현장시찰, 국가대표 선수촌의 주요시설 점검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충북 및 경기도에 위치해 있는 진천·이천 국가대표 선수촌 현장시찰, 문화재 발굴 현장을 위한 경주 월성 문화재 발굴 현장시찰, 내년에 개최가 예정된 울산 전국체전 준비상황 점검을 위한 울산 전국체전 준비기획단 시찰 그리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성 주변 정비현황 점검을 위한 언양읍성 현장시찰 등 4회에 걸쳐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현장시찰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국립중앙박물관 국감 후에는 이견희 컬렉션 관람을 하다가 언론으로부터 특혜 관람과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이번 국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문화·체육·관광업계에 대한 실질적 손실보상 방안 마련, 국내 콘텐츠 제작사의 IP 확보를 위한 지원 강화 문제 또한 BTS의 유엔총회 동행 관련 문화인에 대한 합당한 대우의 필요성, 또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예술·체육요원 제도 도입 문제, 한복산업 진흥·지원 및 정부기관의 정부광고법 위반 실태조사 필요성 등 질의와 정책제언이 있었다. 또한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립의 시급성도 제기했다.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체육회 관련 정치와 체육의 분리 필요성 문제, 장애인 국가대표 지도자 처우개선 문제, 청소년과 노인 등 국민 체력 증진 정책 강화 문제 또한 양궁센터 및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적극적 지원, 또한 학생선수들에 대한 골프장 사용료 인하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스포츠윤리센터 직원의 불법채용 문제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고 문화재청에 대해서는 풍납토성 복원을 위한 삼표공장 이전 문제, 사찰의 부당한 문화재 관람료 징수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김포 장릉 관련 문화재청 행정 처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문화체육부 국정감사에서는 대북 지원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배현진 의원이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개최의향서 관련 질의를 하였고, 김승수 의원은 북한작가의 그림을 전시한 광주비엔나레의 문제점을 질타하였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향해 이해충돌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다. 2017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부지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자, 당시 문화재청 소관 상임위에 속했던 곽 의원이 문화재청에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요구하며 대장동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이었다.

증인신문을 통해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 및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업 헬스업 등의 피해 상태를 조명하였다. 참고인으로 선 김동훈 웹툰작가노동조합위원장은 “1000만원의 수익이 나면 거대 플랫폼이 30~50%를 떼어간다. 30%라고 가정했을 때 남은 700만원은 메인작가와 제작사가 다시 나누는데, 메인 작가는 글작가, 보조작가와 또 나눠야 해서 최저 생계비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2차 저작권에 대해서도 작가들이 권리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이날 ‘건강한 웹툰 창작 생태계를 위해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이들은 플랫폼이 콘텐츠 생태계를 키우고 있는 시점에서, ‘생존’을 위해 수수료 부과는 부득이하다고 항변했다.

실제 ‘편의성’을 내세워 일상에 자리 잡은 플랫폼을 무작정 내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수료’가 주요 수익모델인 플랫폼 기업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다.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불거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에서의 심석희-최민정의 고의 충돌 의혹과 학교 폭력 논란이후 해외 진출을 추진한 여자배구 이재영-다영 쌍둥이 자매의 논란 등이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다.

(1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 쌀값과 해양쓰레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태흠)는 10월 20일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에 대한 상황대응을 하면서 해양수산분야와 농림축산식품분야로 나눠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정감사 진행이 처음에는 조금 난항을 하였으나 대체로 순조로웠으나, 홍문표 의원의 ‘여당 의원 철없다’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 국정감사 내용을 정리하여 보도자료 형식으로 알렸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는 오전에 파행을 하다가 오후에 감사가 진행되었는데 쌀수급 균형문제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에 어려움이 생겨 농어촌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 대한 대책을 추궁하였다.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는 해양수산부의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해상 풍력·수산공익직불제·부산항 북항 재개발 등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수산업·어촌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여야위원들은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재활용을 강화하고,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조성 등에 대해 어업인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의견청취를 강화하며, 어업인·인근주민 등이 만족할 수 있으면서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다.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는 농촌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야 할 농촌진흥청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농촌진흥청의 성과 미흡, 연구 부실 등에 대해 질타했다. 해외 직구를 통해 불법 농약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데도 농촌진흥청이 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 현상으로 밭농업기계 개발 및 보급이 절실한 상황인데 관련 성과와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

됐다. 농진청의 직장 내 갑질, 폭행 문제를 비롯해 내부평가의 허술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산림·임업 관련 현안을 해결하고 산림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였다. 태양광으로 인해 훼손되는 산지, 산림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국내 탄소 배출량이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산림 탄소 흡수량이 감소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과 아울러, 기상이변 등으로 증가하는 산사태, 산불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쌀값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조치와 농업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였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해운업계 공동행위 과징금 관련 문제 해결, 어촌 고령화 및 어업인구 감소에 따른 수산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 해양쓰레기 발생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등을 촉구하였다.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위원장 이학영): 에너지전환과 상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10월 5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 쟁점이었고,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플랫폼 기업과 중소기업 내지 골목상권의 상생협력방안이 핵심사안이었다. 그 외 한전의 방만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10월 5일부터 실시된 산업부 및 소관 기관 감사에서 뿌리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투자 확대,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른 산업계의 부담 증가,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와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해외 자원개발의 문제점 및 자원안보의 중요성, 수출기업에 대한 중장기 수출 금융 지원 및 해외 물류센터 등 물류 지원 확대, 스마트그린산단의 사업 활성화 및 로봇 관련 연구개발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중요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정책 대안도 제기되었다.

10월 7일과 14일 실시된 중기부 및 특허청과 소관 기관 감사에서 대형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상생협력 방안,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

준에 대한 문제점 및 보완책 마련,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맞춰 중기부 차원의 대응 전략 마련,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대책 강구,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개선책 마련, 정책자금의 사후 관리 강화 등 정책 집행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 방안도 제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전기요금이 인상됐고,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늘었다는 취지로 압박에 나섰다. 반면 여당 측에서는 연료비 연동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 정책과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며 탄소중립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외에 미국의 반도체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정부의 능동적 대응 주문, 박기영 산업부 2차관(에너지차관)의 금품·향응 수수 의혹 제기 등도 도마에 올랐다.

반면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권명호 의원은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2020년 130조4,700억원에서 2025년 164조4,797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자체 전망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탄소중립,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들에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보다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산업부의 업무 현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앞서 여야는 국감 시작 전에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하였다.

국회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고발사주 논란의 조성은씨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7천만원,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1억원 등 연체이자까지 2억4350만원의 빚이 있는데 875만원만 추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야당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질의하자 장관은 "답변하기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 등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국감에서는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의 원인 문제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비판하고 있고, 여당은 원가 상승분이 반영된 인상이라고 하였다. 또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의 재정 상황에 대한 질책도 잇따랐고, 6월 취임한 정승일 한전 사장을 비롯해 올해 새로 취임한 에너지 공기업 수장들

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 '낙하산·보은인사'에 대해 송곳 질의가 이어졌다.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쟁점이 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는 채희봉 사장을 바지사장으로 실무를 맡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3인방이 관여한 사건”이라며 “(대장동 사건의) 실질적인 주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바지사장으로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를 내세운 것과 닮아 있다”고 지적했다.

(12)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 위드 코로나와 백신 부작용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14개 본 상임위원회 중 가장 늦은 10월 6일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1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로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시기와 그를 위한 공공의료 체계 정립 등이 많이 등장했다.

복지에 있어서는 연금 개혁 문제 등 개혁아젠다와, 아동학대 문제, 탈시설의 문제, 식품 건강에 관한 문제, 그리고 코로나19 극복 이후에 바이오 산업 진흥문제 등이 집중 질의되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감은 피감기관장이 10월 5일 여당 의원들과 함께 회의를 했다는 국민의힘의 항의로 초반에 여야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 내용을 보도자료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10월 6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보상·지원을 촉구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다.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할 것과 객관적·독립적 심사기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들도 함께 제시되었다. 또한 고강도 방역조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실효성이 낮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위하여 의료기관과 연계한 재택치료 시스

템의 준비, 접종완료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백신패스 도입 시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또한 코로나 치료제 구매를 위한 적정예산의 확보와 국내 백신개발 역량 강화를 대책 마련 등도 주문되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위드 코로나’에 따른 일상회복 시점을 질문했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말이면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뗄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번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단순화하고, 지킬 수 있도록, 현실 가능한 쪽으로 하겠다”고도 했다.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관련하여 백신 접종 후의 부작용·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보상·지원을 촉구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며, 방역수칙 준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10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부작용 대비 실익이 적다는 우려, 여성 하혈을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코로나19 경구형 치료제 신속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있었다.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00제약의 말라리아치료제 ‘피라맥스’를 처방받거나 임의로 복용할 때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전환이 쟁점이 됐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내년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시 소득 중심 단일 부과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시된다”면서 “다만 연구 검토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동권리보장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대응시스템 보완 및 개선 촉구와 입양인 친가족 찾기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공익성과 수익성에 관한 다수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투자의 일관된 기준 마련과 적용 강화, 석탄, 대량살상무기, 주류·도박 등 죄악주, 강제동원·반인권·제재대상

기업·국가 등에 대한 투자 배제 기준 마련을 통한 책임투자 강화, 해외 투자 증대와 이를 위한 역량 제고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13)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 객상도와 탄소중립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대출)는 10월 5일부터 10월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하루 현장시찰을 하였으며, 첫날 환경부 국정감사와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하였다.

감사기간 동안 환경부와 기상청을 포함해 50개 환경 관련 기관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육류 포장재 흡수패드의 미세플라스틱 문제, 환경부의 탄소흡수량 추산 근거 미흡,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환경 전문성 결여, 가스히트펌프 배출허용기준 재조정 필요, 재활용 가능 가짜 쓰레기의 감축 대책 필요,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 문제, 기상장비의 통합·활용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25개 고용노동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수지 악화, 고용장려금 사업의 고용유지 성과 미흡, 산재 발생현황 통계의 부정확성 문제,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개선 필요, 근로시간 미준수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방문 저조 및 재해예방 성과 미흡,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필요성 등에 대해 질의와 지적이 있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작된 환경부 국정 감사에서 한정에 환경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안에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하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는 작업도 마무리하겠다” 고 밝혔다.

환경부 국감에서는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실효성 여부와 온실가스 배출 저감시설, 사업장 내 폐기물 처리 등 환경 관련 현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다만,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도 시작과 함께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본격적인 질의가 지연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화천대유 ‘퇴직금’ 의혹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조사 요구로 후끈 달아올랐다. 증인대에 선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속된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직원의 극단적 선택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광주 붕괴참사 등 건설업 사망사고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정부의 대책이 무위에

그쳤기에 노동자가 허망하게 숨지는 일이 반복된다는 뼈아픈 질타였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사 ‘화천대유’는 앞서 광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원 중 43억7천만원이 산재 위로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회사가 최근 5년간 관할 노동청에 산재를 보고한 기록은 없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정부의 아마추어 일자리 정책으로 ‘참참참’이다. 국민들이 비참하고, 처참하고, 참담하다는 뜻”이라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9월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하셨다. 국민이 보기에 문 대통령은 지금 별거벗은 임금님”이라고 비유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에서의 낙하산 인사와 갑질 논란도 제기되었다.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예보 정확도 문제와 자동기상관측장비(AWS)의 낮은 활용률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국감 당일마저 강수 예보가 빗나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대당 500억~600억원대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5~6년마다 버려지는 사실도 지적을 받았다. 예보 용어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감장에서는 인사 문제도 거론됐다. 최근 취임한 안영인 기상산업기술원장이 최종 후보 3명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도 더불어민주당 캠프 관계자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아 발탁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현승) 대장동 게이트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현승)는 10월 5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첫날 파행을 하였고, 대장동게이트로 인해 여야간 입장차가 컸다. 위원장은 “우리 국정감사장은 국토위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곳이지 재판을 하는 법정이 아니며 또 피감기관은 증인입니다. 가끔 고압적으로 증인을 압박지르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좋지 않아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항상 역지사지해서 여당은 야당의 입장에서, 야당은 여당의 입장에서 상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이야기도 한번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 번 상임위 회의 때에는 한층 더 성숙하게 치우침 없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였다.

국토교통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와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이 크게 이슈화되었고,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하여 수

요자가 원하는 주택공급 확대, 세대별 당점률과 특별공급 유형별 미달률 등을 고려한 주택청약제도 개선, 공공주택 분양 전환 시 입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양가 산정, 타워크레인 사고 방지를 포함한 건설공사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항공업계 지원 강화, 전기차 보급 확대를 고려하여 안전문제 발생 전기차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 택시·배달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플랫폼기업과 기존 업계와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가 있었다.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도시철도 운영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하였다.

국토 분야에서는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 개선, 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조치, 입찰 및 낙찰제도 개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의 적극적인 수행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및 대안 제시가 있었고, 교통 분야에서는 철도 및 도로 안전관리 강화,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영상기록장치 설치, 택배 배송기사에 대한 안전대책 강화 등에 대하여 다양한 질의 및 대안 제시가 있었다.

국정감사 단골메뉴인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의 경영 부실 문제, 부당 인사행위, 전관특혜 및 이해충돌 등에 대한 다수의 지적이 있었다.

도로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이 나오자 여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여야 간 고성도 오가기도 했다.

10월 20일 1반과 2반으로 나뉘어 진행된 경기도 국정감사와 서울시 국정감사는 여야간의 열전으로 파행 등이 자행되기도 하였다. 공히 ‘대장동 관련’ 내용이었고,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장의 ‘대장동 사업’ 관련 판넬을 만들어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해 여당의원들의 항의를 하여 정회를 하기도 하였으며, 오세훈 서울시장 개인문제 관련 고성도 오가기도 하였다.

(15)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 : 대장동 근조리본과 무료변론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10월 26일 대통령 비서실 등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2일 동안 감사를 진행했다.

첫날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간의 근조리본과 마스크 문구 때문에 의사진행을 하다가 파행을 하였으며, 오후부터 시작된 국정감사는 대장동, 고발사주 관련 질의

가 많았다. 자정을 넘겨서 국정감사를 하였으며, 여당은 질의를 하지 않고 야당만 질의시간을 제한해 질의를 하기도 하였다.

10월 27일 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의 무료변론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국회사무처 등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직전에 있었던 검찰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관련 국회사무처의 대응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국회방송 관련 문제가 SBS 뉴스에 보도되는 등 큰 파장을 야기하기도 했다.

28명 의원이 결석 없이 출석하였으며, 공히 정책국감을 표방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내용을 짚기도 하였다.

(16)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송옥주) :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10월 22일 여성가족부 등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 여성가족부 폐지가 주장이 되었고, 국고보조금 횡령·사기의혹 관련한 윤모 의원 사건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보호 등에 대한 조명이 있었다.

부성원칙을 개정하는 민법개정안과 관련된 질의,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성불평등 심화 대책, 여성폭력방지정책과 관련하여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 아동돌봄 서비스 자기 부담액 축소 및 장애아동 등 맞춤형 아이돌봄을 위한 지원대책, 청소년쉼터 학대 등 가출 청소년에 대한 보호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2. 국회의원 윤리특위 활동 : 처리건수 ‘0’ 건으로 위원장, 간사, 위원 감점

=윤리특위 정상화를 위해 윤리특위 구성원부터 초재선보다 여/야당 중진위원이 나서야=

징계청구는 많은데, 윤리특위는 1년간 59분 회의
제21대 국회, 윤리특위 심사 징계처리는 ‘0’ 건 - 막장(?) 국회 조장

== 법률연맹,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 분석 발표 =

- ▣ 징계안 폭주에도 윤리위 회의는 1년 동안 3회 59분에 불과
- ▣ 2차년도 접수 9건, 1건은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 전반기 징계인만 23개 적체
- ▣ 검수완박법안 처리과정에서의 회의장 점거로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 출석정지 1개월

가. 국회윤리특별위원회의 역사

1991년부터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제20대 국회인 2018년 7월, 「국회법」 개정으로 「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전환되었다. 「국회법」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의원결직 및 영리업무 종사여부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하나, 「윤리특별위원회」 미구성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구성되지 못하였다.

나. 제21대 국회 2차년도 윤리특위 구성

박병석 국회의장은 2021년 6월 29일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의장)』을 제안하여 제388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그 내용은 “2021년 6월 30일 종료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는 것이었다.

이 결의안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2021년 7월 1일부터 연장되었고, 2021년 11월 11일 2020년 9월 구성되고 첫회의(2020. 9.15)를 한지 1년이 훨씬 넘겨서 두 번째 회의를 하였으며, 2022년도에 두차례 하였다.

위원장은 김진표 의원이, 여야당 간사는 한병도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맡았으며, 윤리특위 제1소위(소위원장 한병도)와 제2소위(소위원장 추경호)가 구성되었으나 활동은 하지 않았다.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2022. 2.14)>>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제1(6인)	◎한병도 이재정 최기상	더불어민주당(3)
	김미애 유상범	국민의힘(2)
	이태규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제2(6인)	이정문 최기상	더불어민주당(2)
	◎추경호 이만희 전주혜	국민의힘(3)
	류호정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윤리특별위원회 첫회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김진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021년 11월 11일 “오늘 안전심사 회의가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기대에는 좀 늦은 감도 있지만 국회법 제 46조에 따라서 징계안의 심사에 앞서서 거쳐야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지난 7월에야 구성이 완료되었고 징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사에 관한 문제로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기본적인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였으며, 징계안 심사과정은 비공개로 전환하였으나, 결론은 나지 않았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명단>>

위원명	직 함
윤은기	동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동주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거버넌스연구소장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장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동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파트너변호사
조상규	법무법인(유한) 주원 파트너변호사
한재필	송실대학교 글로벌통상학과 교수
김유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라. 윤리특위의 회의와 처리건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1대 국회2차년도 동안 3차례의 회의를 하였으며, 총 59분 회의를 하였고, 비공개회의를 하였다. 안건은 모두 14건이었으나, 간사 개선과 소위원장 구성의 건만 처리되었다. 위원 출석은 12명 중 평균 9명이 출석하여 75.00%의 출석률을 기록하였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윤리특별위원회 회의현황»

회기	차수	회의일	출석	정원	출석률	회의시간	안건
제391회 (정기회)	제2차	2021.11.11.	11	12	91.67%	0:21:00	5
제393회 (임시회)	제3차	2022.01.27.	8	12	66.67%	0:29:00	4
제393회 (임시회)	제4차	2022.02.14.	8	12	66.67%	0:09:00	5
					75.00%	0:59:00	14

제21대 국회 2차년도에는 모두 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접수되었고, 이중 김기현 징계안의 경우에는 회의장 점거를 이유로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회부되어 2022년 5월 20일 제397회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으며(30일간 출석정지), 나머지는 1차년도에 처리하지 못했던 14건과 함께 모두 23건이 계류 중이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이 발의한 징계안 접수현황»

의안번호	의안명	피징계의원	제안일자
2112748	국회의원(곽상도)징계안(서동용의원등51인)	곽상도	2021-09-30
2112885	국회의원(김용판)징계안(김성환의원등26인)	김용판	2021-10-19
2112919	국회의원(김웅)징계안(박주민의원등22인)	김웅	2021-10-21
2112918	국회의원(정점식)징계안(민병덕의원등24인)	정점식	2021-10-21
2115502	국회의원(김기현)징계안(진성준의원등20인)	김기현	2022-05-04
2115503	국회의원(배현진)징계안(진성준의원등20인)	배현진	2022-05-04
2115520	국회의원(민형배)징계안(송언석의원등20인)	민형배	2022-05-06
2115521	국회의원(박광온)징계안(송언석의원등20인)	박광온	2022-05-06
2115642	국회의원(박완주)징계안(진성준의원등24인)	박완주	2022-05-17)

국회의원 윤리강령 [제정 1991.02.07.]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的发展和 국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숭상수범한다.**
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3. 제21대국회 2차년도(21-2), 대정부견제기능 형해화 : 대정부질문 축소/정쟁의 장

== 법률소비자연맹, 제21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 76명(1명 2회)의 대정부질문 분석 발표 ==

권력기관간 상호견제 없다면 권력의 부패/독재는 필연적
대정부질문은 정부통제 기능임에도, 여·야간 정쟁만 난무 여전히
막중한 정부견제보다 국무위원 앞에서 여·야간의 고성공방
대정부질문 경과보고서 및 대정부질문 국회내 처리부서 마련 사후관리해야

◆ 제21대국회 2차년도 대정부질문은 문 정부 업적 홍보장, 정부견제는 부족

/ 국회의원도 관심없어 텃빈 본회의장(산회시 참석의원은 재적의원의 11.14%에 불과)

- 질문의원 77명 중 42명은 민주당(54.54%), 국민의힘은 28명(36.4%) /대정부 통제기능 마비
- 대정부질문 질문도중 장내 소란 2번은 국민의힘 의원질문 중 발생

◆ 대정부 질문 본회의 시간 총 33시간 24분 <질문의원의 대다수(85.53%)가 초·재선>

◆ 2차년도 대정부질문과 답변시간이 가장 긴 의원은 더불어 민주당 오기형 의원(1회, 38분)

가. 제21대 국회 2차년도 대정부질문 : 정책질의보다는 여/야간 공방전으로 전락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NGO/NPO인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총재 김대인)는 국회 대정부 통제기능의 중요한 권한의 하나인 제21대 국회 2차년도(2021.5.30.~2022.5.29.) 대정부질문 현황을 발표했다.

제21대 국회는 총 **2회** 집회(정기회 1회, 임시회 1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위원 총 7일간의 본회의에서 실시하였고, 대정부질문⁹⁾을 한 의원은 **77명**(2회 중복하여 질문을 한 의원을 감안하면 **76명이 질문**)이었다.

나. 제21대 국회 2차년도 대정부질문 현황을 살펴보면

(1) 제21대 국회 2차년도는 제21대1차년도보다 본회의일수도 줄고, 질문 의원수는 대폭 줄어들었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대정부질문은 2개 집회 중(정기회 1회, 임시회 1회) 총 7일간 실시하여, 1차년도 4회 집회(정기회 1회, 임시회 3회)중 13일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것에 비해 절반가까이 줄어들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의 대정부질문 횟수 현황>>

구분	국회횟수	대정부질문일수	질의의원수	본회의시간
1차년도	4회 집회	13일	137명	59시간 40분
2차년도	2회 집회	7일	77명	33시간 24분

(2) 대정부질문 이슈는 코로나19 방역백신 부족사태 등 K-방역문제, 방미외교성과 등 대북정책, 정부의 주택정책, 검찰중립성 논란, 소부장 등 소위 자원외교문제 등등이었다. 제391회 정기회 중에는 고발사주 논란이 크게 부각되었고, 개인부채 문제, 재난지원금 등이 주요 이슈였다.

(3) 21대 국회 2차년도에서도 홍문표 의원(4선), 김민석, 서영교, 이채익 의원(3선) 등 3선 이상 의원도 대정부질문을 하였으나, 초·재선 의원이 대정부질문의원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1차년도와 비슷하였다.

(4) 대정부질문 본회의(7회) 평균출석률은 **91.92%로 높았으나**, 대정부질문(7회) 산회시(끝날 무렵) 의원들의 평균참석률은 **11.14%에 불과했다.**

(6) 2021.9.16.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중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더불어

9) **대정부질문**은 삼권분립원리에 근거한 국회의 국정통제수단으로서 국회의 엄중한 권한이며,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고 답변하도록 하는 권리이면서, 이는 헌법(헌법 제62조)과 국회법(제122조의2)에 의거한다. 우리나라의 대정부질문제도는 제헌헌법과 제정 국회법부터 시행된 헌정과 함께 해 온 중요한 민주정치제도이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고발사주 논란은 이회창 전 감사원장 당시의 병풍(아들 병역비리)과 비유하자, 민주당 석에 이의제기를 하여 장내소란이 벌어 졌으며, 2021. 9. 14.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에서 김석기 의원이 간첩단 검거와 관련하여 검거 간첩이 문대통령 후보의 특보를 했다면서 대통령선거에 간첩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자, 장내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 대정부질문의 충실화와 언론과 NGO의 상시적인 국회의정모니터링이 필요

이번 조사를 총괄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대정부질문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각 상임위 현안과 국정전반을 한눈에 파악·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정활동의 중차대한 권한행사와 책무이행을 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한 후, “충실한 대정부질문(견제)을 위해서는 대정부질문 경과보고서 채택 및 국회내 처리부서 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하며, 국정감사모니터링 이상의 NGO(시민단체)들의 감시와 평가로 국회의원 선거에 반영되도록 할 것”을 역설했다.

라. 제21대 국회 2차년도 대정부질문 주요 현황

(1) 총괄

제21대 국회 2차년도 대정부질문을 한 본회의는 2개 집회(정기회 1회, 임시회 1회) 7일간이었다. 질문의원수는 총 77명으로 2회 질문을 한 최형두 의원을 비롯하여 실제 질문한 의원 76명이었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와 비교하더라도 137명이 질의한 것과 비교하여 질의의원이 60명 정도 줄었다.

회의시간은 33시간 24분으로 제1차년도 59시간 40분보다 26시간이 줄었다.

참고로 제20대 국회 1차년도는 박근혜 정부로 4회 집회(정기회 1회, 임시회 3회)를 하였다.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은 94.13%로 높았고, 산회시 재석률 역시 31.87%로 양호했다. 대정부질문 본회의 시간 57시간 25분으로 가장 많았다.

«대정부질문 본회의 출석률, 산회시 재석률, 본회의시간 비교»

21대 국회 2차년도			제21대 국회 1차년도			제20대 국회 1차년도		
본회의 출석률	산회시 참석률	본회의 시간	본회의 출석률	산회시 재석률	본회의 시간	본회의 출석률	산회시 재석률	본회의 시간
91.92%	11.14%	33시간 24분	95.49%	24.26%	59시간 40분	94.13%	31.87%	57시간 25분

(2) 제21대 국회 2차년도 이슈 및 눈에 띄는 점

대정부질문 주제는 코로나19와 백신 등 k-방역문제,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 추경 등 확장재정 문제, 부동산가격 양등, 부동산세제, 요소수 대란 등 원료공급차질 자원외교의 난맥상 등이 많이 조명되었다.

정기회에서는 고발사주논란과 관련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문제가 크게 대두되었고, 청주 간첩단 사건도 논란이 되었다.

(3) 대정부질문은 신인 의원들의 몫(85.53%가 초·재선 여전)

대정부질문을 하는 의원들의 국회의원 당선횟수를 보면, 초선 의원이 47명(1차년도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재선의원이 18명(1차년도 28명)이었다. 초·재선 의원이 전체 대정부질문 의원의 85.53%(1차년도 74.78%, 20대 국회 1차년도에는 77%)를 차지하였다.

4선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었고, 3선 의원은 서영교 의원, 김민석 의원 등 9명이었다.

참고로 제20대 국회 1차년도에는 5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유일하였으나, 제21대 국회 1차년도에는 5선의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2번이나 대정부질문 주자로 나섰으며, 이상민, 조정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국민의 힘 정진석 의원,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 5명이 대정부질문에 나섰었다.

〈당선횟수별 제21대 국회 2차년도 대정부질문의원 분석〉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계
대정부질문 의원수	47	18	9	2	76
비율	61.04%	23.38%	11.69%	2.60%	100%

(4) 출석도장만 찍고 자리뜨기 여전

출석률 91.92% vs. 산회시 참석률 11.14%(팅빈 본회의장)

대정부질문시 본회의 출석 국회의원은 평균 274.7명(제21대 국회 1차년도 286.5명, 제20대 국회 1차년도 282.3명)정도로 의원의 출석률은 91.92%(1차년도 95.49%, 제20대 국회 1차년도 94.13%)이었다. 출석률만 따지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으나, 개의 시간의 참석률은 36.40%(1차년도 55.31%, 제20대 국회 1차년도 49.03%)이었다.

국회법 개정으로 인해서 제20대 국회 1차년도 후반(국회법의 개정으로 347회 임시국회부터는 오전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오후 2시 이후에 개의를 하였음)부터 오후 2시에 개의를 하기 때문에 속개가 사라졌는데, 끝나는 시간(저녁 산회)의 참석률은 평균 33.29명으로 11.14%(1차년도 24.26%, 제20대 국회 1차년도 31.87%)였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산회시에 끝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이라고 하면서, 매번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의 성함을 호명하여 회의록에 남기기도 하였다.

(5) 대정부질문 도중 끼어들기 등 장내 소란은 여전

대정부 질문 중 장내소란이 일어난 경우는 2회로 조사되어 많이 줄어들었으나, 생중계 중에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상대로 엄중한 질문을 하는 상황에서(질문은 정부가 필수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것임) 의원들 상호간에 언성을 높이거나, 질문 중 끼어들기를 하는 것은 개선되어야 한다.

국회법 제147조(발언 방해 등의 금지)에는 “의원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 중 함부로 발언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의 발언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전문개정 2018. 4. 17.]” 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를 위반해도 벌칙규정은 없다.

(6) 대정부질문 질의/응답시간이 가장 긴 의원은 오기형 의원

국회영상회의록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대정부질문 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지 않고 질문시간만을 계산하는데, 질문과 답변 시간이 가장 긴 의원은 서동용 의원으로 38분대를 기록하였으며, 유기홍 의원과 양정숙 의원이 35분대였다.

«참고 2000년 이후 역대 국회의 대정부질문 본회의 및 질문의원수»

구분	임기	집회 횟수	일수	질문 의원수	대통령
제16대국회	2000.5.30 ~ 2004.5.29	17	65	545	김대중/ 노무현
제17대국회	2004.5.30 ~ 2008.5.29	15	56	582	노무현
제18대국회	2008.5.30 ~ 2012.5.29	13	55	704	이명박
제19대국회	2012.5.30. ~2016.5.29	15	52	600	이명박/박근혜
제20대국회	2016.5.30.~ 2020.5.29	11	35	443	박근혜/문재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 예산안 법정시한 간발차 미준수,

추경심사만 3차례 -- 예산종합질의 및 부별 심사 우수의원은 가점

== 법률연맹, 제21대 국회 2차년도 **예결특위** 예산/추경/결산 심의/의결과정 **분석** 발표 ==

예결산 심사 앞서 국민의 담세능력과 국가안보 등을 살펴 조세종목과 세율을 재검토(헌법 54)하고, 국정감사 전, 지난해 결산을 먼저(국회법 128조의2)해서 국정감사에 반영해야!

무려 46조 증액된 6년전엔-400.7조
2021년-558조 **604.4조 예산을 51시간** 만에 **졸속심사**
행정부가 책정한 예산을 국회가 졸속 심사 말고, 미국처럼 국회가 365일 예산안 심의/책정하도록

- ◆ 예산안 처리 - 제21대 국회 2차년도 **법정기한**(12/2 - 매 회계년도 30일전) 못 지켜
- ◆ 결산심사는 **21대 2차년도도 법정기한**(매년 8/31- 정기국회 전까지) 못 지켜

<제21대 국회 2차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긍정적인 점	부정적인 점
여야 합의에 의한 예결특위 위원장 배분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 ○ 2022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못지켜 (2021.12.3.새벽) ○ 2020 결산 심사 법정시한 도과 처리(2021.12.02.) ○ 부실 예산안 심사여전(종합정책질의 등 각1회 축소) ○ 전체회의의 저조한 출석률(87.13%) ○ 예산안 심사기한을 넘기는 바람에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예결위 의결절차를 밟지도 못함.

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야당 시대

제21대 국회 2차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2회 추경안 심사를 위해 7월 2일부터 구성/가동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원래 7월 14일 선거를 통해 박홍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나, 여야간 상임위원장 배분합의가 되어서 2021. 8. 31. 제390회 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원장 보궐선거가 이루어졌고,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당선되었다.

이종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예산규모가 50%나 늘어 600조를 넘어섰고 국가부채도 1000조를 넘어서게 됩니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은 더 피폐해지고 또 양극화는 심화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 원인이 국가의 예산결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에 저는 오십 분의 예결위원님들과 함께 국민들의 혈세 또 미래세대의 빛으로 만들어지는 국가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아주 꼼꼼히 살펴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또 지역적 이해관계나 당리당락을 떠나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면서 나라 발전과 또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여야 원만한 또 최선의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당선인사를 하였다.

나. 제21대 국회 2차년도 예결위 구성

제389회 임시회(7월) 제1차(2021년07월8일) 본회의에서 위원장 선거를 통해 박홍근 위원장이 선출되었다. 총 투표수 171표 중 158표를 얻었다. 박홍근 위원장은

당선 인사말을 통해 “여야 원내수석들께서 합의한 대로 오늘 예결위원장을 우선 선출해서 시급한 추경 처리를 하기로 한 것인데 오늘 야당 의원님들이 이 선출 과정에 불참한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시적인 역할이지만 그동안 예결위 간사를 역임하면서 여러 번의 추경과 본예산, 결산을 치러 온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2차 추경도 원만하게 또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국가경제의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 그다음에 힘들어져 있는 우리 민생경제, 중소 자영업자들의 그런 생업을 회복하는 문제 그리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눈물겹고 감동스러운 그런 협조에 감사하면서 일상의 삶의 회복에 우리 국가재정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 하였다.

여야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었다.

7월 14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간사 등 조직구성을 하였다. 간사에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되었다.

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예결위 활동 :

총 133시간 35분(1차년도 121시간 32분) 회의, 출석률은 87.13%
3건의 추경, 1건의 결산, 1건의 예산안을 처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는 총 23차례의 전체회의를 열었고, 133시간 35분(1차년도 121시간 32분) 회의를 하였다. 50명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전체 회의에서 평균 43.57명(1차년도 45.5명)이 출석하여 87.13%(1차년도 91.00%) 출석률을 보였다.

주요 처리안건으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회계연도 결산, 2022회계연도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의 예산/결산/추경안과 관련 기금안을 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예산안은 의결하지 못하고 자동 본회의에 부의되었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현황〉

예결특위활동 회기	안전처리 국회본회 의	안전	예결특위 활동내역
제389회 (2021.07.05.~ 2021.07.31.) 임사회	제389회 제3차 (2021년07 월24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	정부가 제출한 추경 증액분 33조 원에서 2조 6000억을 증액하고 7000억을 감액하여 1조 9000억을 순증액해 총규모는 34조 9000억이 되었고, 일부 기금의 집행잔액 9000억 원과 본예산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1조 원 등 기정예산에서 총 1조 9000억 원을 마련하여 순증액된 부분을 충당함
제391회 (2021.09.01.~ 2021.12.09.) (정기회)	제391회제 12차 (2021년12 월2일)	2020회계연도 결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1881건의 시정요구사항과 2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 시정요구사항의 세부 유형(징계 2건, 시정 220건, 주의 534건, 제도개선 1197건) 2020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총 4건)을 감사원에 감사 요구 1) 국세청 등 5개 기관의 마스크 구매·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 위원회의 업무 추진비 및 정책 연구용역비에 대한 감사 3)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에 대한 감사 4)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의 해외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에 대한 감사
제391회 (2021.09.01.~ 2021.12.09.) (정기회)	제391회제 13차 (2021년12 월3일)	2022회계연도 예산안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총지출 604조 4365억 원에 대하여 5조 5520억 원을 감액하고 8조 7788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3조 2268억 원을 순증액 총지출 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의 규모는 409조 1669억 원으로 그중 2조 8535억 원을 감액하고 6조 7094억 원을 증액하여 총 3조 8559억 원을 순증액
제393회 (2022.01.27.~ 2022.02.25.)	제393회 제3차 (2022년02 월21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14조 원에 대하여 예비비 4000억 원 등을 감액하고 3조 3000억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2조 9000억 원을 순증액 정부안의 총지출 증액 규모 중 기금을 제외한 예산안은 2조 5000억 원으로 그중 4000억 원을 감액하고 2조 1000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7000억 원을 순증함.
제397회 (2022.05.03.~ 2022.06.01.)	제397회 제4차 (2022년05 월29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정부가 제출한 59조 4000억 원의 추경안에 대해 2조 6000억 원을 증액하고, 추가로 정부안의 지출 구조조정 내역 7조 원 중 2000억 원을 다시 증액하여 총 2조 8000억 원을 증액함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구성과 활동

예결특위원회의 소위는 총 5개 구성되어 활동을 하였다. 결산심사 소위는 추경호 국민의힘 간사가 소위원장을 맡았고, 나머지 소위는 정성호 위원장이 소위원장을 맡았다.

<제21대 국회 2차년도 예결특위 소위원회 회의 현황>

소위원회 명칭	소위원장	회의횟수	회의시간	위원출석률
결산심사소위	맹성규	7회	35시간 6분	93.88%
예산안등조정소위	이종배	5회	38시간 55분	94.67%
2021년도제2회추경예산안등조정	박홍근	4회	11시간 46분	96.88%
2022년도제1회추경예산안등조정	이종배	1회	5시간 50분	100%
2022년도제2회추경예산안등조정	이종배	2회	6시간 54분	92.86%

마. 2022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 7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2021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2일까지 7차례의 전체 회의를 하였다. 회의시간은 51시간 53분(1차년도 54시간 55분)이었다. 공청회 1회, 종합정책질의 2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2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2일을 실시하였다.

예산안심사기간 동안 사보임은 무소속 박상도 의원이 사임하고, 엄태영 국민의힘이 보임(10.25)하였고,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사임하고 류성걸 의원이 보임하였으며(10.25),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사임을 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보임을 하였다(2021.11.1)

< 2022회계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회의 현황 >

차수	일자	안건	회의시간
제5차	2020-11-01	1.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2:25:00
제6차	2020-11-05	1.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2.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3.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4.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 - 종합정책질의	8:00:00

차수	일자	안건	회의시간
제7차	2020-11-08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 - 종합정책질의	10:26:00
제8차	2021-11-09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 - 부별심사 : 경제부처	9:05:00
제9차	2021-11-10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 - 부별심사 : 경제부처	8:53:00
제10차	2021-11-11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 - 부별심사 : 비경제부처	5:56:00
제11차	2021-11-12	1. 2022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112417)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112418) 3.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112421) - 부별심사 : 비경제부처	7:08:00

바. 예결위 예산심사 가점의원 선정

예산안 심사 가점의원은 종합정책질의(1회)나 부별심사(2회)에서 예산심사에 집중된 질의를 한 의원 중에서 비교적 지역구 민원성 질의를 적게 한 의원을 심사 일정별로 선정하였으며, 중복 선정된 경우에는 한번만 가점을 하였다.

5. 21대 국회 2차년도 특별위원회 : 출석·회의성과에 따라 가점과 감점

제가 지금 6년째 국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특위처럼 부끄러운 활동은 없었습니다. 이런 특위 활동이라면 다음에는 다시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정말로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 김종민 간사(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 간사, 2022. 5. 14.

가. 특별위원회 활동 총괄

제21대 국회 2차년도에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을 하였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비상설특별위원회로는 국회윤리특별위원회와 국회상임위원회위원정수에 관한규칙개정특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유일하였다.

제21대 국회 1차년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국무총리(김부겸)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수), 대법관(이홍구)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우상호), 대법관(전대엽)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노웅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조병현·조성대)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장제원) 등 4개였다.

2차년도에는감사원장(최재해)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홍문표),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대법관(오경미)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문상부)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등 4개의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문상부)선출에 관한인사청문회는 문상부 후보자가 2022년 1월 23일에 자진 사퇴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선출안 철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활동을 끝맺었다.

2차년도에는 인사청문회 외에 3개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수)이다.

나. 2차년도 특별위원회별 활동 요약

(1)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운영위원장(위원장 윤호중)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국회운영위원장)을 제출함에 따라 2021년 11월 11일 본회의에서 피선거권 연령 조정과 제8회 지방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기 위해 부활했다. 의원수는 18인 여야 동수로 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 활동기한은 2022년 5월 29일까지

로 하였다.

2021년 12월 9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김태년 특위위원장은 위원간 호선으로 선출된 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년 5월 22일까지 지방선거 선거구와 확정 장치 소음 규제 등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사안과 피선거권 연령 조정 등 공직선거 제반 사항에 대해 심사·의결하게 되며, 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다음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나아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여러 심도 있고 의미 있는 성과가 산출되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인사말을 하였다. 이후 10차에 걸쳐서 6시간 3분 회의를 하였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 등 9개 법안을 처리하였다.

선거에 임박하여 특위를 구성하여 선거법을 개정하는 풍토는 사라져야 할 것이지만, 정치개혁특위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여야당 간사는 김영배 의원(민)과 조해진 의원(국)이 맡았다. 위원 출석률은 84.44%로 그리 높지 않았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현황»

회기	차수	회의일	출석	정원	출석률	회의시간	안건
제391회	제1차	2021년12월09일	16	18	88.89%	0:21:00	2
제392회	제2차	2021년12월14일	17	18	94.44%	1:53:00	1
제392회	제3차	2021년12월23일	15	18	83.33%	0:36:00	19
제392회	제4차	2021년12월28일	15	18	83.33%	0:20:00	14
제392회	제5차	2022년01월04일	17	18	94.44%	0:12:00	30
제392회	제6차	2022년01월05일	14	18	77.78%	0:14:00	14
제393회	제7차	2022년02월09일	15	18	83.33%	0:55:00	46
제393회	제8차	2022년02월10일	11	18	61.11%	0:13:00	10
제394회	제9차	2022년03월24일	18	18	100.00%	0:51:00	1
제395회	제10차	2022년04월15일	14	18	77.78%	0:28:00	40
					84.44%	6:03:00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관 9개 법률안 처리»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	의결일자	의결결과
21152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2022-04-15	2022-04-15	원안가결
211529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2022-04-15	2022-04-15	원안가결
211326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등 12인)	의원	2021-11-11	2022-04-15	수정가결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	의결일자	의결결과
2111776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등12인)	의 원	2021-07-27	2022-04-15	수정가결
211476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2022-02-11	2022-02-14	원안가결
211476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2022-02-11	2022-02-14	원안가결
211433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2022-01-10	2022-01-11	원안가결
21143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2022-01-10	2022-01-11	원안가결
21142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2021-12-30	2021-12-31	원안가결

특위는 2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하였으며, 공직선거법및지방선거구제 개편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해진)는 7번 회의를 하였고, 총 17시간 03분 회의를 하였으며, 소위원 평균 출석률은 95.71%였다. 정치관계법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김영배)는 4차례 회의를 하였으며, 총 4시간 42분 회의를 하였다. 소위원회 위원의 평균출석률은 72. 50%로 저조하였다.

(2)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익표)

박병석 의장은 2021년 9월 29일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을 제의하였고, 제391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192인, 반대 4인, 기권 15인이었다.

특위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만든 것이다.

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 12월 31일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차 활동기한 연장을 하였다. 모두 11회 회의를 하였으며, 총 18시간 55분 회의를 하였다. 10명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1, 2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1개월여동안 활동하여 자문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특위 구성원들은 활동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회의현황»

회기	차수	회의일	출석	정원	출석률	회의시간	안건	내용
제391회	제1차	2021.11.15	16	18	88.89%	0:24:00	2	구성

회기	차수	회의일	출석	정원	출석률	회의시간	안건	내용
제391회	제2차	2021.11.25	15	18	83.33%	2:08:00	1	업무보고
제391회(정기회)	제3차	2021.11.29	15	18	83.33%	2:25:00	1	업무보고
제391회	제4차	2021.12.06	16	18	88.89%	3:36:00	2	공청회
제392회	제5차	2021.12.14	15	18	83.33%	2:39:00	1	공청회
제392회	제6차	2021.12.21	17	18	94.44%	2:02:00	2	
제392회	제7차	2021.12.28	14	18	77.78%	1:53:00	1	
제392회	제8차	2022.01.19	13	18	72.22%	0:22:00	1	자문위원구성
제395회	제9차	2022.04.14	8	18	44.44%	0:48:00	0	안건없음
제397회	제10차	2022.05.16	13	18	72.22%	1:30:00	2	자문위원보고 개선
제397회	제11차	2022.05.24	13	18	72.22%	1:08:00	2	활동결과보고 서채택
평균/계					78.28%	18:55:00	15	

(3) 국회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서병수)

박병석 국회의장은 2021. 12. 31. 제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의하여 가결되었다. 재석 237인 중 찬성 231인, 반대 1인, 기권 5인이었다.

국회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는 2030년에 개최예정인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8인으로 하며,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활동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다.

특위는 두 차례 회의를 하였으며, 2시간 31분 회의를 었다. 위원출석률은 77.78%로 저조하였다. 위원회 구성과 부산시와 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회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특별위원회 회의현황»

회기	차수	회의일자	출석	정원	출석률	회의시간	안건	내용
제393회	제1차	2022.02.09	15	18	83.33%	0:21:00	3	
제395회	제2차	2022.04.13	13	18	72.22%	2:10:00	1	업무보고
평균/계					77.78%	2:31:00		